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정의와  
상식의 법치

---

#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23. 4.

법무부

2023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3. 4.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06호

#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0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92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99
1. 법무부 일반현황 .....	10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05
III. 세부 추진계획 .....	124
• 전략목표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126
• 전략목표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	157
• 전략목표 III.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	240
• 전략목표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326
IV. 환류 등 관련계획 .....	385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387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390
3. 변화관리 계획 .....	39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398
별첨 .....	412
1. 성과지표 현황 .....	413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34

# 세부추진계획 관리과제별 목차

## I. 따듯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26

###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129

-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I-1-①) ..... 132
-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I-1-②) ..... 136
-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I-1-③) .... 140

###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44

-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I-2-①) ..... 147
-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I-2-②) ..... 151

##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155

###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160

-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II-1-①) ..... 166
-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II-1-②) ..... 168
-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II-1-③) ..... 173
-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II-1-④) ..... 177
-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II-1-⑤) ..... 179
- ⑥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II-1-⑥) ..... 182
- ⑦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범집행(II-1-⑦) ..... 184
- ⑧ 부패대응 공백 방지(II-1-⑧) ..... 188

###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191

- ① 미래변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II-2-①) ..... 198
-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II-2-②) ..... 203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Ⅱ-2-③)	207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Ⅱ-2-④)	212
⑤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 강화(Ⅱ-2-⑤)	217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Ⅱ-2-⑥)	220
⑦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Ⅱ-2-⑦)	223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Ⅱ-2-⑧)	226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Ⅱ-2-⑨)	229
⑩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Ⅱ-2-⑩)	233

### Ⅲ.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238

####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245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Ⅲ-1-①)	252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Ⅲ-1-②)	257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Ⅲ-1-③)	261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Ⅲ-1-④)	264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Ⅲ-1-⑤)	267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Ⅲ-1-⑥)	271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Ⅲ-1-⑦)	275

####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280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Ⅲ-2-①)	287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Ⅲ-2-②)	292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Ⅲ-2-③)	296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Ⅲ-2-④)	299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Ⅲ-2-⑤)	305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Ⅲ-2-⑥)	310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Ⅲ-2-⑦)	315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Ⅲ-2-⑧)	320

##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324

-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 330
  -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IV-1-①) ..... 335
  -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IV-1-②) ... 340
  -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IV-1-③) ..... 343
  -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IV-1-④) ..... 346
  -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IV-1-⑤) ..... 351
  
-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 357
  -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IV-2-①) .... 363
  -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IV-2-②) ..... 368
  -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IV-2-③) ..... 371
  -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IV-2-④) ..... 377
  -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IV-2-⑤) ..... 380

#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 (1)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옹호 정책 총괄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종료('22.)에 따라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 기준 및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초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l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절차 개요 &gt;



※ 인권위 제4차 기본계획 권고 접수('22.8.3.)

※ 인권위 권고, 시민사회 의견, 국제기구 권고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의견조회('22.8.)

※ 제3차 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제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접수('22.8.26.)

※ 제4차 NAP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인권정책자문단 회의 개최('22.9.7.)

※ 국정과제, 연구용역 제시과제, 인권정책자문단 의견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의견조회('22.10.)

※ 제4차 NAP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 통지('22.11.)

※ 신규 목차 신설 등 인권정책자문단 의견 조회('22.11.)

- 인권 침해요소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인권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인권 모니터링 제도 개요

- ▶ 법무부는 인신구속, 수용자 관리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고, 특히 검찰·보호·교정·출입국 등 다양한 직렬이 개별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
- ▶ 제3차 NAP 및 인권위 권고 이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추진 시 국내·외 권고 준수 여부,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구비 여부 등 인권국 의견 개진

※ '21. 4. 1.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규정」 (훈령) 제정·시행

※ '22년 총 9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① 「보호소년 교육지침」 일부개정안, ②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③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전부개정안, ④ 「보호소년 처우지침」 일부개정안, 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일부개정안, ⑥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⑦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일부개정안, ⑧ 징벌대상자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관련 개선방안, 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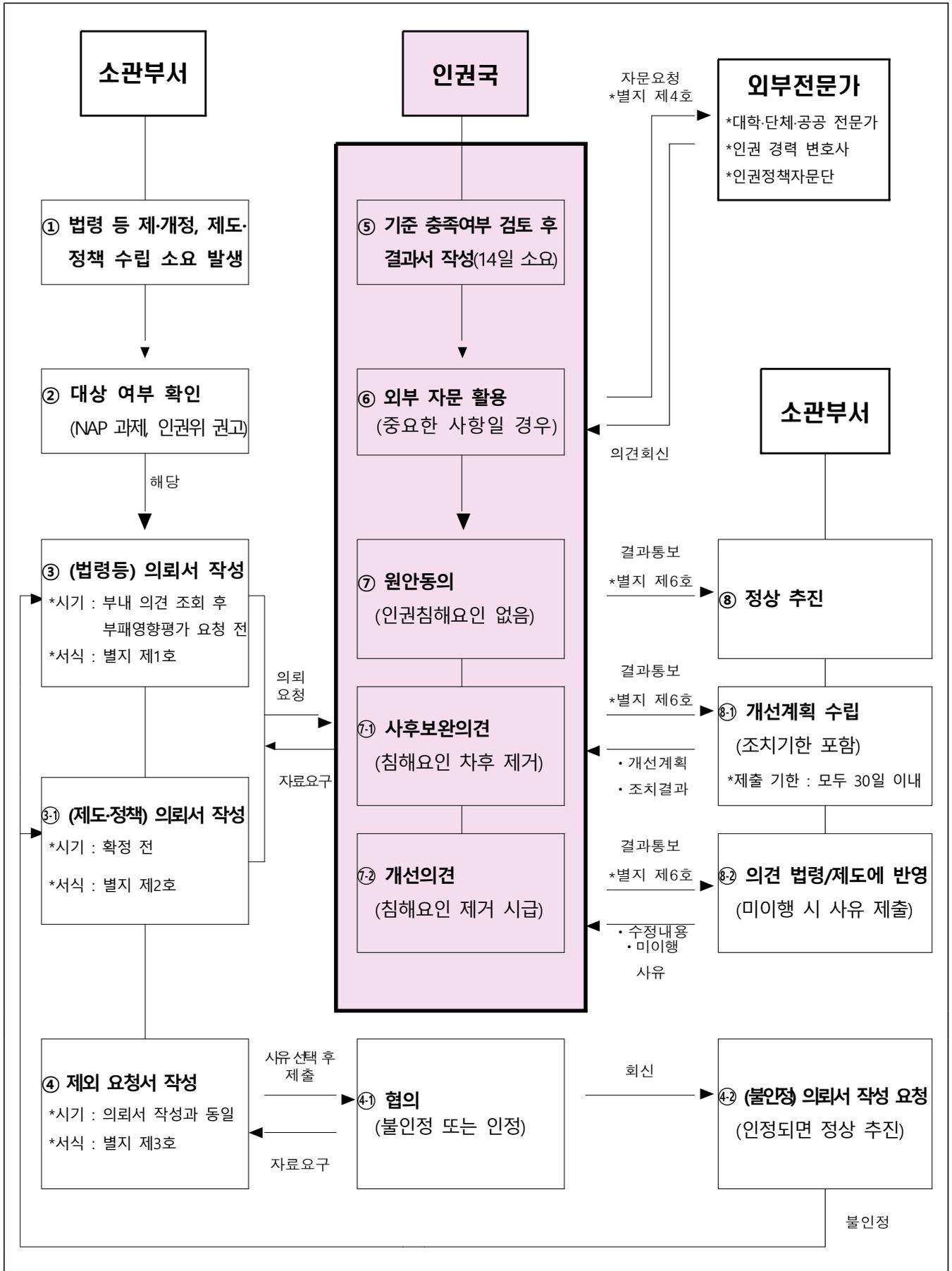
< 2022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 >

관리 번호	대상 명칭 (소관부서)	결과 통보서 (인권국)	의견 종류 (이행상황 등)
2022-01	<b>보호소년 교육지침(훈령) 일부개정안</b> (소년보호과)  ※ 주요 개정사항 - 교육과정 혼재에 따른 개편 - 관련규정에 개정에 따른 수업 시수 및 훈련시간 조정 등	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 신설 · 대상 :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 대상자 인권 보호 노력 명시	개선의견 (반영 완료)
		② 집중처우소년 재교육 요건 개선 (제25조 제4항 제3호) · 전담교사 재량권 행사로 인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요건 삭제 또는 다른 계량/객관적 요소로 대체	개선의견 (반영 완료)
2022-02	<b>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안</b> (소년보호과)  ※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 등 교육 집행 곤란 사유 발생 시 교육 중지·재기 조문 신설 등	○ 해당 지침은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 대상자 중 일부(8호처분, 1개월 내 단기)에만 적용되는 지침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 신설은 일반지침인 「보호소년 교육지침」에만 반영해도 충분함	원안동의
2022-03	<b>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훈령) 전부개정안</b> (소년보호과)  ※ 주요 개정사항 -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반영 - 보호자등 동의 및 통지 신설 - 자비치료 허가 범위 신설 등	①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내용 반영(제3조)	개선의견 (반영 완료)
		② 「AIDS 검사 항목」 삭제 및 해당 기록 필요 최소한도로 보관하도록 의료기록 관리업무 정비(별표1)	사후보완의견 (반영 완료)
		③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료처우 자문위원회」 의결절차에 따라 치료비 구상업무 처리(제21조)	개선의견 (반영 완료)
		(기타) 치료비 구상에 대한 근거법률 마련(제21조)	향후 법 개정 시 반영 예정

관리 번호	대상 명칭 (소관부서)	결과 통보서 (인권국)	의견 종류 (이행상황 등)
2022 -04	<b>보호소년 처우지침(훈령) 일부개정안</b> (소년보호과)  ※ 주요 개정사항 - 입원 시 중요사항 고지 신설 -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 심신안정실 수용 조항 정비 등	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다양하게 설정 (제29조 제3항)	개선의견 (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예정)
		②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우·징계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제한 처우인 '전화통화', '면회' 삭제(제30조 제2항)	사후보완의견 (법 개정 시 일괄 정비 예정)
		③ 보호소년을 통제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인권 친화적으로 수정(제47조)	개선의견 (반영 완료)
		(기타-1) 외부 교통권 제한에 대한 근거법률 정비(제30조)	향후 법 개정 시 반영 예정
		(기타-2) 처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제29조 관련)	향후 법 개정 시 반영 예정
2022 -05	<b>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훈령) 일부개정안</b> (이민조사과)  ※ 주요 개정사항 - 방문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계자의 사전 동의 절 차 추가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별지 3)에 적법절차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제10조)	개선의견 (반영 완료)
2022 -06	<b>외국인보호규칙(부령) 일부 개정령안</b> (외국인정책과)  ※ 주요 개정사항 -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 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 설, 특별 계호에 대한 이 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 장비 종류/사용요건 및 방 법 등 구체화, 보호장비 사용중단 요건 규정	① 이의신청 심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그 심사결과를 보호외국인에게 고지 필요(제40조의4)	개선의견 (개정 추진 중)
		② 보호장비 사용 시 최대한 우선적으로 의료 전문가가 건강상태 확인, 중요한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 필요(제43조 제5항, 제43조의12)	개선의견 (개정 추진 중)
		③ 본부에서 기관별 보호장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시행세칙)	사후보완의견 (개정 추진 예정)

관리 번호	대상 명칭 (소관부서)	결과 통보서 (인권국)	의견 종류 (이행상황 등)
2022 -07	<b>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갑 호업무지침(훈령) 일부개정 안</b> (소년보호과) ※ 주요 개정사항 - 보호장비 해제 가능 조항 신 설, 타지침으로 분리· 통합한 조문 정비 등	○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보호장비 유형(한발목 보호장비) 삭제 필요 (제104조 제2항)	개선의견 (반영 완료)
		(기타)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 소년의 신체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보호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규격 마련 필요(제2장)	향후 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예정
2022 -08	<b>징벌대상자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관련 개선방안</b> (보안과) ※ 주요 개정사항 - 징벌대상자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사용 제한 시 보관·사용방법 마련	○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자가 제한 사유(6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징벌대상자라도 자비구매물품 사용 가능 ○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청결준수 의무와 집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특정시간에 사용 가능	원안동의
		(기타) 'v)사유(조사수용에 대한 불만)', 'vi)사유 (중형 구형·신고·확정, 이혼 및 가족 사망)'은 iv)의 사유와 통합·조정하여 처우 제한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운영 되도록 정비 필요	반영 완료
2022 -09	<b>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 (교정기획과) ※ 주요 개정사항 - 미결수용자 연령에 따른 분리 규정 신설, 19세 미만 수형자의 구분수용 예외 규정 신설	○ 소수의 '사형확정자 등'과 19세 미만 수형자·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해야 되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 '미결수용자' 소년·성인간 분리수용에서 더 나아가 전체 수용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분리되도록 관련 조항 수정 필요(법 시행규칙 제150조)	개선의견 (개정 추진 중)
		(기타) 소년·성인수용자간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하위규정 정비 필요	개정 추진 예정

< 인권 모니터링 절차 >



## ○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 유엔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국회에 제출(22. 7.), 이후 지속적인 국회 논의 지원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22. 12.) 및 비준서 유엔 기탁(23. 1.)
- 국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고 인권실사 법제화 등 국제적 동향에 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 세미나」 2회 개최(22.10.),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배포(22. 12.)

## ○ 국제인권 대응

- 복지부 소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예상 질의 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및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현지 심의 대응(22. 8.) 및 외교부 소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보고서 우리 부 답변 취합 송부 등 타 부처 소관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적극 협력
-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제출(22. 4.)하고, 제4차 UPR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22. 11.)하는 등 국제인권 매커니즘에 적극적인 대응 및 협조 의지 재표명
-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차관 주재 면담 실시(22. 6.),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국장 주재 면담 실시(22.11.),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한 요청 관련 대응,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결과보고서상 권고 이행 관련 정보 제공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대응 및 협조
- 유엔 사무총장의 여성·소녀 대상 폭력 및 인신매매 예방 보고서 관련 우리 부 소관 정보 작성 제출(22. 5.),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개인진정 정부 답변서 작성·제출(22. 10.) 등 UN 인권상황 관련 서한 질의 및 개인진정 사건에 대한 정부 답변서 제출
-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 참석(22.1.), 미국 주재 파트너국 초청 형태의

다자회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발굴·제출('22. 8.) 및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참석('22. 10.) 등 인권 관련 국가간 협력체계 적극 참여

- 제4회 「유엔 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제11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참석을 통해 향후 정책발전을 위한 해외사례 및 최신 논의 수집 등 국제인권업무 대응 역량 강화
- 유엔 인권조약기구 보고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실무지침서를 마련하여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절차의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22. 6. ~ 12.)

### ○ 정책 소통 강화

-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장과 인권국장 면담 실시하여 아시아 인권상황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시민단체 소통 강화('22. 6.)
- 제4차 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정부부처 간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수렴('22. 8.)
- 인권위 주최 유엔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방안 논의 간담회('22. 4.), 국회 주최 ESG 제도화 포럼(환경, 인권, 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22. 6.) 등 토론 참석 및 의견 제시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1년 이행상황 확정 및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학회 및 단체 (한국법학원 등 118개) 의견수렴('22. 1.), 인권단체(6개)와 인권국장 면담('22. 2.),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서면회의('22. 3.) 및 전체회의('22. 9.) 개최, 정부부처 및 부내 부서와의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서면 개최('22. 4.) 등을 통해 인권 전문가 및 담당자 의견수렴
-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홍보하고, 전국민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1년 이행상황 자료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22. 5.)

## □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강화로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 원거리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면전진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및 구제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을 확대하여 구축하고, 직접조사율 제고 노력
    - ※ '22년 직접조사율 64.57%
    - ※ '22년 4,002건 접수, 86건 인용·구제
      - 동절기 조사·징벌시 자비구매물품인 겨울속바지와 덧버신 착용 제한, 외부 병원 진료시 수용복 착용, 개인 물품 제작 지시 등 인권침해진정 사건에 대하여 직접조사 실시 후 인권침해사실 통보 및 개선조치 권고 실시
    -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구축 ('21년 57개 기관 → '22년 63개 기관)
- 구금·보호시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및 처우 점검, 수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상황 확인
  -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정기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4개 기관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하였고, '23년도 조사 대상 기관 확대 예정
    - ※ '22년 정기 실태조사 : 24개 기관, 설문조사 1,516명, 직접면담 368명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을 통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의 연계 강화
  - 정기실태조사와 인권침해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다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시행
  -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무과와 협업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안의 적정성 및 집행력 제고 노력 지속

- ※ 외국인보호소의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권 제한 요소 점검('22. 3.)
  -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대상 수용자 설문조사(32명), 보호소 직원 의견 청취, 인권단체 간담회 등 실시
  -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시범 실시에 적용할 기본권제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권고

- ※ 교정기관 내 수용자 간 폭행사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22. 12.)
  - 공주·춘천·광주교도소, 서울·수원·인천·부산구치소(총 7개) 수용자 설문조사(1,007명), 면담조사(226명), 현장 점검 실시
  - 폭행사건 예방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교정본부 및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

-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현장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내용 등을 확인
  - 사고 원인으로 파악된 수형자 분류처우체계 개선, 취약시간 대 수용자 동정관찰 강화 방안 마련, 규율위반행위 적발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메뉴얼 마련,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 구비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교정본부에 개선방안 마련·권고('22. 2.)

- 인권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권 의식 개선
  - 인권감수성훈련[(교정 8회(146명), 보호직 2회(39명), 출입국 3회(47명)],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검사 5회(51명), 검찰수사관 10회(102명)], 외부강사 기관 방문 교육(30회), 내부강사 워크숍 등 직렬별 다양한 인권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훈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진행하여 신규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 인권보호상황평가 실시, 우수인권공무원 포상
  - 연 2회 검찰·교정·보호·출입국 197개 기관에 대한 인권보호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인권상황 평가 실시
  - 직렬별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각 실국본부에 직렬별 인권보호상황

평가 결과서를 송부하여 일선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타 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권환경 개선 도모

- 각 직렬별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포상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

## □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회의('22. 1.~2., 6회), 여성·아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22. 3., 6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22. 6. 29.)

-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22. 6., 3회)
-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2. 10.~12.)를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23. 2. 15.)
- 정부 제출 법안 관련 토론회 참석('22. 3.~10., 4회)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운영('22. 6.~10.)
- 소년 보호처분 개선 및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22. 10. 26.)
-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22. 12. 28.)

○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시행('22. 2. 3.)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2. 12. 27.)

-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 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22. 12. 21.)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서울시 등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임 ('22.10.부터 정례회의)

###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법률구조 기구 간 연계 강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협의회'를 구성·운영중임('22.10.부터 정례회의)

### ○ 심리치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신분 노출 우려와 생업·학업 등으로 스마일센터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함
- 스마일센터 업무를 전산화하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 취약계층 법률지원 활성화 추진

- 법률홈닥터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법률홈닥터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상담 전문 교재를 마련하였음
- 대형사고·재난피해 등을 입은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가 협력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중임

☞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2. 8.),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22. 11.) 등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중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적극 지원('20. 3.)

####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 조력 강화 및 2차 피해 예방('21. 3.)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을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까지 확대('21. 6.)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경우 기존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로 진술조력 지원 대상 확대('22. 1.)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관련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22. 1.)

### ○ 피해자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속 확대

- 국선변호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배치(기존 11명→'22년 기준 35명)  
※ 서울중앙, 서울서부,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평택, 김천, 부산서부, 광주, 순천, 군산 등 12개 지역 배치 ('22년)
- 진술조력 서비스의 접근성 및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진술조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상근진술조력인 추가 배치(기존 9명→'22년 기준 14명)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 등

3개 지역 배치('22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의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해 외부기관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실시('21. 7.)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및 실태조사 정례화 의무화 추진('21. 12.)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시행('22. 2.)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직권 연장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 시행('22. 5.)
- 진술조력인 만족도 평가 타당성 확보 및 진술조력 질적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2. 11. ~ 12.)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22. 8. ~10.)
  - 교육과정을 경력에 따라 기본·심화 2개 과정으로 구분하고, 성폭력,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사건의 특수성, 사건처리 및 피해자지원 절차의 이해 등 교육, 총 533명 교육 이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배포('22. 12.)
  - 최근 제·개정 법률 주요 내용, 장애인학대범죄 법률조력시 유의사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등 주요 업무 서식 기재례 추가 등 개정
  - 전국 피해자 국선변호사(641명) 및 검찰청 전담검사실 등 배포(총 800부)

○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및 기존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 아동 및 장애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매년 15명 내외)
  - ※ '22. 7. ~ 11. 교육과정 진행, '22. 12. 자격부여(14명)로 '22. 12. 기준 165명 양성
- 기존 진술조력인 대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보수교육 시행, 전체 진술조력인 151명 중 97명 강의 수료('22. 11.)
  - ※ '14~22년 연평균 60명 이수, 진술조력 우수사례 및 형사사법절차 관련 강의 편성

- 우수 진술조력사례의 발표 및 공유를 통한 진술조력인의 역량 증진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월 1회),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연 2회) 실시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및 매뉴얼 배포
  - 초·중·고 및 특수학교용('16.10.), 신고의무자용('17.7.)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아동인권강화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연구용역 실시 및 전국 검찰청,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위탁시설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매뉴얼 배포('21.7.~11.)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 확대 및 법무부-보건복지부 공동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에서부터 종결까지 전체 과정의 대응인력으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 강화('22. 3. ~ 11.)
      - ※ 기존 사법경찰관리·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서 전담검사·전담수사관·피해아동보호시설위탁시설 종사자·보호관찰관까지 확대
    -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공동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교육과정 체계화 및 효율화 도모('22. 8. ~ 9.)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아동학대처벌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20. 3.)
    -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 강화
    - 재학대 발생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 아동학대살해죄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 3.)
  -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 (500만 원 → 1,000만 원)에 따른 시행령 정비('21. 5.)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인권 증진사업 지속 추진

- 전국 59개 지검 및 지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예산 배정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법무부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21. 3.)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방문(10개 지역) 및 간담회 개최('21. 4. ~ 10.)
-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실태 점검('22. 8. ~ 9.)
- 법무부-보건복지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업무협약('21. 5.) 이후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점검 실시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통합 대응 진행

※ '22년 전국 검찰청에서 총 88회 개최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 추진
  -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22. 8.)
  - 감호위탁 제도 연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2. 8.)
  -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법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담회 진행('22. 10.)

○ 피해자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 제도 관련 홍보

- 인기 유튜브 '허팝'구독자 수 340만 명 이상 계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활용도 제고('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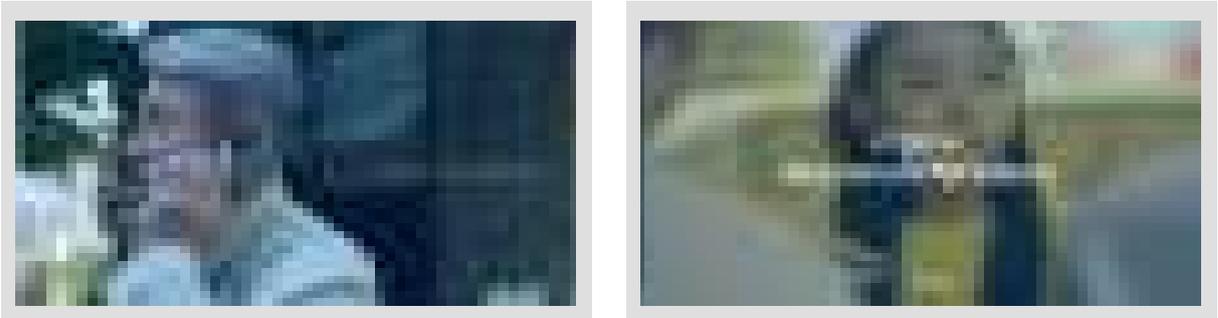
**유튜브 '허팝' 진술조력인 제도 홍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안내자료 제작·배포('17.2.)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17.12)을 통한 신고의무 홍보 강화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 2.)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동영상' 제작 및 송출 ('21. 11.)

###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 제작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 3~14세를 주요 시청층으로 둔 인기 유튜버 '허팝'(구독자 수 340만 명 이상)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어렵지 않고 쉽게 아동학대 신고제도 안내 동영상을 케이블TV(TVN, OCN, Tooniverse) 광고를 통한 방송 송출
  - 법무부 페이스북에 편집영상을 게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허팝이 안내하는 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학대아동 지원제도를 친숙한 캐릭터로 홍보 강화

###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 송출



유튜브 동영상

법무부 페이스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및 유튜브 송출('22. 1. ~ 3.)

##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개정안 마련 및 정부입법 절차 진행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4차례 정책 간담회 진행 (‘22. 3. ~6.)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진행 (‘22. 7.~)
  -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22. 9.)
  -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을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 협의 (‘22. 10.)
  -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심의를 위한 제12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22. 10.)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주요정책 및 추진 현황을 위한 국회 방문·설명 (‘22. 11.)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로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당정협의 진행 (‘22. 11.)
  -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언론 브리핑 진행 (‘22. 11.)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구성·운영 (‘22. 12. ~)
  -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속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2. 11., ‘23. 1.)
  - 관리비 항목 신설,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특약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 및 배포 (‘22. 11.)
  - ‘주요국들의 최근 주택임대차 안정화 법제에 관한 연구’, ‘주거

약자의 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등 연구용역 발주·수행 ('22. 5. ~ '22. 12.)

-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보도자료 배포 4회 ('22. 7. ~ '22. 12.)

## □ 과태료 기본법 전부개정안 마련

- 각계 의견 수렴, 질서법 개정 TF 구성·운영을 통해 개정안 마련
  - 관련 행정청 현장방문(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22. 2.~'22. 5.)
  - 질서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진행('22. 3.~'22. 6.)
  - 10년간 축적된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22. 3.~'22. 4.)
  - 전국 행정기관 질서법 개정 수요 수렴('22. 4.)
  - 법령경연 학술대회 제출안 검토('22. 4.)
  -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국공법학회)('22. 4.~'22. 7.)
  - 과태료 기본법 전부 개정안 초안 성안('22. 9.)

## □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 스타트업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구축, 서비스 오픈('22. 2.)



- 스타트Law를 통한 법률상담 건수는 '22년 170건('22. 12. 기준)

○ 스타트Law를 통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전년도 대비 지원 건수 증가(57→87건\*\*)
- 2022년도 총 법률지원 금액 103,189,901원
- 2022년 중소기업 법률지원 건수 목표 달성률 108%(87/80)

\*\*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 적		
	'20년	'21년	'22년
법률지원 완료 건수	73건	57건	87건

○ 중소기업 법률지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지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

- 스타트Law 홍보용 소책자 60,000부 제작 및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배부
- 스타트Law 네이버 해피빈 광고 누적 페이지뷰 110,233명('23. 1. 기준) 달성



## (2)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 □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 법무부장관 취임 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불행사 명시('22. 5.)
    -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2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
  -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 폐지('22. 6.)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하여 '형사末부만 수사 허용',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제도 등 폐지('22. 7.)
-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추진
  -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 논의
    - ※ 검찰 예산 독립 편성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1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

###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기업 경영진,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입찰담합·불공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전개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이상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범죄 철저 단속
    - ※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사범 27명 단속, 1명 구속('22년)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22. 5.)하여,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무자본 M&A를 이용한 기업사냥꾼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 집중 단속
    - ※ 금융관련 비리 사범 123명 기소, 55명 구속('22년)

○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전개

- 서울북부지검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22. 9.)
-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 국가재정범죄 관련 사범 36명 인지, 5명 구속('22. 9.~'23. 1.)

※ 세무 자료상 관련 비리사범 80명 기소, 15명 구속('22년)

□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책임수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학계, 변호사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 협의체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22. 6.~8.)

- 실무위원 협의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이원화하여 대면 회의 및 수시 서면 협의 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방안 등 논의

○ '수사준칙' 개정 초안 마련('22. 9.~11.) 및 관계부처 협의 진행('22. 12.~)

-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협의 중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 엄정 대처

- 전국 60개청, 총 전담 검사 158명(부장검사 제외) 지정 등 전담 수사 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22. 12.),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23명 지정('22. 12.)

- 전국 스톡킹 전담검사 화상회의 개최('22. 9. 16.)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22. 11. 16.~22.)
-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 제정·배포('22. 4. 4.)
-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22. 6., '22. 9., '22. 10.)
-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사례 연구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검찰청에 배포('22. 12. 29.)
-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구성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지원과 피해회복 방안 검토('22년 88건) 등 실효적 대응 강화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제20대 대통령선거('22. 3. 9.)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 6. 1.) 관련 선거사범 엄정 처리
  - [대선] 총 2,001명 입건, 609명 기소, [지선] 총 3,790명 입건, 1,448명 기소
  - ※ 당선인 134명 기소(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소속 정당, 당선 여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건 처리에 주력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된 수사체계 하에서 시행된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 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과 4회 '수사실무협의회'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

##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제공조업무가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범죄인인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외 도피사범에 대해 맞춤형 송환 지속 추진

-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메트암페타민 905Kg 상당을 밀수출입한 마약밀매업자를 베트남 공안당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범죄인인도 청구 4개월만에 국내 송환('22. 2.)
-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여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를 브라질에서 국내로 송환('22. 3.)
- 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송환('22. 5.)
- 회사 자금 6억원 상당을 횡령한 대표이사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22. 8.)
- 무기거래 로비스트를 사칭하여 무기 입찰 수주대금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던 범죄인을 키르기스스탄에서 국내로 송환('22. 9.)
- UN, OECD,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가 주체하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강화('22. 3.~12.)
- 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 형사사법 관련 기관과 국제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적극 청구
  - ※ '22년 범죄인인도 청구 22건, 송환 70명
  - ※ '22년 형사사법공조요청 1,250건(한국→외국 1,043건 / 외국→한국 207건)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령 제·개정,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하여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 미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사건 관련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평택지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美법무부 간 화상회의('22. 1.)
  - 2022년 상반기 범죄수익환수 타겟교육 과정 진행('22. 4.)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22. 5.)
  - ※ ‘범죄피해재산 환부시스템(SRA)’ 시행에 따라, 원활한 전산정보 연계를 위한 사건등록 의무조항 신설 및 각종 서식 추가 등
  - 2022년 하반기 범죄수익환수 타겟교육 과정 진행('22. 10.)
  - 제6기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 진행('22. 11.)
  - 범죄수익환수 관련 커뮤니티(TF) 및 세미나 등 활동

## □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관련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
  - 형사법자문회의 개최, 관련 유사 발의 법안 검토, 연구 용역 발주 및 결과 분석 등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추진
- 영상녹화물 본증화 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 □ 데이터·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 기술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도입
    - 법무자문위원회 회의('22. 2.~9. 총 6차례), 외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 검토를 종합하여 개정안 도출 및 입법예고('22. 12.), 관계부처 협의 및 대국민 홍보
- ※ '22. 12. 2. “미래사회를 위한 민법 개정 세미나” 개최(법무부차관 참석)

## □ 경제플랫폼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 (법안 마련)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이용허락, 침해 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입안 및 입안보고, 입법예고 완료('22. 12. 26. ~ '23. 2. 6.)
  - (법무자문위원회 논의) 전체회의 1회 개최('22. 4. 28.)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 4회('21. 11. ~ '22. 2.)

- (부처협의) 「민법」 개정안 부처의견조회('22. 12.)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별도 협의('22. 10.)
- (전문가 의견수렴) 학계 민법 교수 자문 3회('21. 12, '22. 2., '22. 7.), 한국법률가대회 토론 참석('21. 10.), 한국 민사법학회 연구용역 진행 ('22. 3. ~5.), 개정시안 교수 의견수렴('22. 8., 9.), 미래사회를 위한 민법개정 세미나('22. 12.)
- (대국민 홍보) 미래시민법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22. 연중), 인격적 권리 명문화 추진 웹툰 제작 및 홍보('22. 9.), 법률 개정 추진 보도자료 배포('22. 4.), 인격 표지영리권 도입 민법 개정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22. 12.)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 리걸테크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하며 정책 추진
  - 리걸테크 TF 운영하며,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협업관계 유지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 변호사를 적극 선발하여, ① 실무수습 변호사 실무역량 함양 기회 부여, ②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 ('16년 62명→'22년 122명)로 인한 업무공백 대체, ③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도모
    - 법무부가 국가기관 대상 실무수습 변호사 수요 조사 후 각 기관을 대표하여 기재부 상대 예산협의 진행, 통합선발공고 게재 등
    - ※ '22 5. 18개 국가기관(검찰청·경찰청 등) 실무수습 변호사 130명(법무부 43명) 선발 절차 진행
  - 법무부 법무실 실무수습 변호사 대상 재판 참관 추진, 과별 세미나 진행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 진행
-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 마을변호사와 법률사각지대 무변촌 마을주민을 연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제고

※ 22. 8. 6기 마을변호사\* 1,228명 신규 위촉 [임기: 22. 8~ 24. 8.(2년)], 전국 1,414개 읍·면·동 배치

- 국가재난·사회범죄 피해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제공
  - '22. 8.~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 등 현안 지원
- 마을변호사 서포터즈 선발·운영
  - '22. 6. 제1기 마을변호사 서포터즈 총 7팀(팀당 4~5명, 총 32명) 선발하여, 서포터즈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하는 등 제도 홍보 다각화 추진

○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

- 지속적인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조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추진

-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 제거하고, 공증서류 온·오프라인 호환성 부여, 유통방식 확대 등 전자공증시스템의 디지털 역량 강화 도모

※ '18년 대비 '22년 완료건수 약 7.4배 증가, 꾸준한 증가세 유지

※ '22. 8. ~ 12 국회 법사위·예결위 위원실 대상 사업설명 진행(17회)

※ '22. 9. ~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자공증 건수	374	252	1,836	2,647	2,757

○ 공증사무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증인 징계

- '22. 2. 법무부 '22년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총 19명의 공증인 (임명공증인 4, 인가공증인 6, 공증담당변호사 9)에 대하여 징계결정

※ 징계인원 '18년 31명, '19년 64명, '20년 30명, '21년 38명

## ○ 재외공관 공증 지도점검 및 영사 직무교육 실시(매년 약 13개 공관)

- '21년도 벤쿠버 등 5개국 6개소 재외공관 지도점검 실시
- '22년도 뉴질랜드 등 5개국 9개소 재외공관 지도점검 실시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재 대양주 지역 공증담당관 직무교육 및 제도개선회의 참석('22. 5.)

## ○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증제도의 개선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실무계, 법원, 학계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장재형 인하대 교수, 법무과장 포함 위원 8명)된 공증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 공증 제도 확대 및 선진화 방안, 화상공증 도입 및 공증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공증수수료, 재임명·재인가 기준, 공증관련법령 개정 등 '15. 6.부터 총 22회 개최 ('22. 7. 제22회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공증제도개선 실무협의체) 대한공증인협회 및 법무부 공증 실무자로 구성된 소협의체로, '21. 9.부터 '23. 3.까지 총 6회 개최

##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 국제규범/통상 협상 참여 및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법무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협상 참여 및 국제규범 성안 결과 국내 전파하여 제도 개선 위한 토대 마련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5개 작업반(중소기업,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도산, 선박경매) 외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해사기구(IM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 WTO, FTA 등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 참여 및 협상단에 법률자문 제공

※ 인도태평양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한-GCC FTA, 한-에콰도르 SECA, 한-EU IP 다이얼로그 등 주요 통상협상 참석, 일반규정, 투명성,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분과 관련 법률자문 제공

### ○ 국제규범 도입 및 이행

- 체결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조치

- \* 국제조정에 집행력 부여 위한 싱가포르조정협약('19. 서명) 이행법률,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 이행법률 제정 추진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업무 수행
- ※ ▲'22년도 아동반환지원 실적 18건(전년도 6건 대비 200% 증가),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 중앙당국과 정기적 간담회 통해 협력 체계 구축, ▲법원과 아동반환결정 집행제도 개선 협의 중
- 국제거래법 규범 연구 및 도입을 위한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 ※ 국제거래법연구단 정례회의 통해 UNCITRAL 논의 동향 공유 및 국제규범 이행 방안 관련 논의(6. 14.)
-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실시
- ※ 국제사법 전부개정 기념 학술대회 개최(7. 15.) 및 국제재판관할 규정 소개 자료집 발간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주최하여 국가 위상 제고
- ※ ▲UNCITRAL 본회의 계기 디지털 무역을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7. 7.), ▲UNCITRAL ADR 스페셜세션(11. 10.), ▲제11회 아태지역 ADR 컨퍼런스(11. 9.~10.),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11. 11.) 주최

## ○ 개도국 법제정비 및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지원

- 아.태 지역 공급망 협력국\* 대상으로 ① UNCITRAL 규범 도입 촉진, ② 세계은행 준법경영기준 활용 지원
-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주요국이자 IPEF 참여국
- ※ ▲태국 공무원 초청하여 국제거래규범,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등 주제로 워크숍 실시, ▲세계은행과 준법경영기준 개발 중(내년 1월 발간 계획)
- 국내 법제정비가 시급한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 대상으로 우리 법제 전수 및 운영 경험 공유
- ※ 캄보디아 조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연구 결과는 차년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워크숍에 활용 계획

## □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 강화

### ○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활동

- 총 7건의 ISDS 사건(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투자자, 부산 투자자, 다야니 2차) 등에 적극 대응 및 관련 관계부처 회의 진행
- 론스타 ISDS 사건 철저 대응\*을 통한 국익보호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추진

※ 론스타 사건 관련,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22.8.31.), 판정 결과 대국민 브리핑 진행('22, 8. 31.), 판정요지서 공개('22, 9. 6.), 판정문 공개('22, 9. 28.) 및 판정문 정정신청 진행('22. 10. 15.)

- 엘리엇 ISDS 사건 심리기일('21.11.) 참석, 제1·2차 추가서면 제출('22.4.,5.), 메이슨 ISDS 사건 심리기일('22. 3.) 참석, 최종진술 진행('22. 5.), 중국 투자자 사건 선결적 항변 심리기일('21. 5.), 부산 투자자 및 다야니(2차) 사건 중재신청서 접수·답변서 제출(각 '21. 6., '21. 11.) 등 ISDS 사건 절차 수행 철저

###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및 법적지원 실시

- 유관기관 대상 ISDS 예방 교육\*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검토·자문\*\*
- \* '21년 3회, '22년 11회 예방 교육 진행, \*\* '21년 11건, '22년 4건 검토 진행
- ISDS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21. 4.)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업무 매뉴얼」 ('22. 6.), 「국제투자중재실무」 ('22. 10.),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 ('21. 4.) 발간 및 배포

### ○ FTA, BIT 등 투자협정 참여 및 ISDS 제도개선 추진

- FTA 협상\*, BIT 제·개정\*\* 회담 참석 및 법률자문 제공
- \* '21년 3회 참석, \*\* '21년 6회, '22년 6회 진행
- ISDS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한 UNICTRAL 본회의 및 제3실무 작업반 공식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을

통해 ISDS 제도 개선 협의에 정부 입장 반영 노력

\* '21년 제40·1차 공식회의 참석, '22년 제 42·3차 공식회의 참석, \*\* 21년 4회, 22년 4회 제출

## ○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동향 파악 및 관계부처 TF 회의 참석,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동향 파악 및 관련 민원처리, 원전수출 법률 대응 관련 검토 진행

## □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 국가 상대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손실에 대해 적극적·체계적 환수소송 제기 및 수행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15.9. 출범)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검찰청·수행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 '15. 9. - '22. 12. 환수소송 총 719건 제기하여 27,212,152,482원 환수 완료

- 23년에는 상소제기 등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승인으로 환수소송 전 단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소송수행청에 대한 소송지원 및 송무교육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할 계획

※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송수행자 대상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실시 및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타 부처 교육원에서 교육 실시 예정

## □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주요 중앙 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송무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64개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소송수행청의 소송업무 수행실태 확인·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 도모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소송수행청 및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을 상대로 송무교육 실시(총 40회)

- 적극적인 송무 교육 실시로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행정 소송 송무 역량 강화

○ 송무 관련 자문회의 개최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제1회 국가송무자문위원회 회의 및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유관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간담회 실시
- 외부 전문가의 자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송무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소송비용 회수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로 소송수행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존재함에 따라 각 소송수행청 등의 업무 처리 지침 제·개정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2. 5.)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교류협력 법률 업무

-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주요 현안의 분석 및 법적 자문
- 남북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정비 검토

○ 통일 대비 북한 및 외국법제 연구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정기 발행
  - ※ '10. 2. 학술지 창간 이래 총 52회 발행(연 4회), '21. 등재학술지 선정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연 2회)
  - ※ 중·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법제도 관련 법률안 등 자료 수집·분석, 연례 보고서 번역·발간
- 통일법제 연구자료를 축적, 공유하는 「통일법제 DB」([www.unilaw.go.kr](http://www.unilaw.go.kr)) 운영
  - ※ '14. 9. 법무부·통일부·법제처 간 MOU 체결을 통한 통일법제 관련 홈페이지 통합 운영
  - ※ 통일법제 쟁점 연구, 자문을 위한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 ※ 통일법제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통일 대비 연구 활동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 변호사, 예비 법률가 등 법조인력 대상 통일법제 교육 프로그램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14.~'22. 총 12기 운영(변호사,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622명 이수)

- 법무·검찰 공무원 대상 통일법제 및 정책 관련 교육 실시
- 통일법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 '14년 제1회, '20년 제2회, '21년 제3회, '22년 제4회 공모전 각 개최

## ○ 위기 탈북민 발굴·지원 중심의 법률안전망 확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법률교육 및 카카오톡 법률 상담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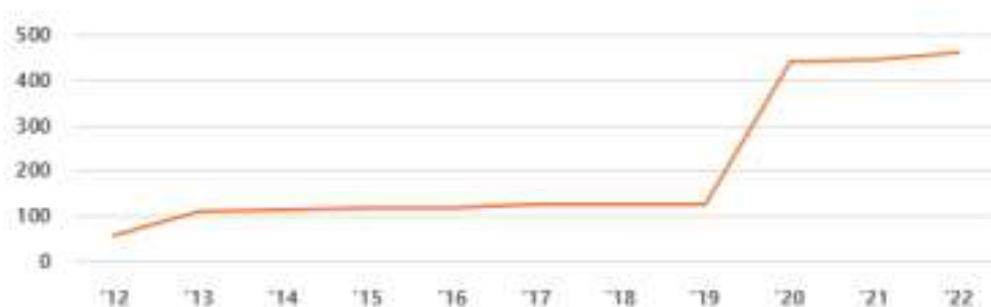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대상 온라인·모바일·대면 법률상담 실시 中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전담검사·하나센터 협의회 개최
- 위기 탈북민 대상 지원변호인 1:1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변호인 대상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실시

## ○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 북한주민 소유의 남한 내 상속재산 처분 허가 및 재산관리인 감독 등 관리

※ 북한 정권으로의 재산유출 방지를 위해 제정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12.2. 시행)에 따른 업무로 '12. 관리액 60억 원 상당에서 '22.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



북한주민 재산관리 총액 추이 (단위 : 억 원)

##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본격 추진('22. 7. ~)

-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으로 IT 기술을 통한 응시자·시험위원·교수 등의 편의 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시험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 기대

·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 대국민 공개토론회, 전국 법전원 학생 대표 간담회, 정부혁신 컨설팅, 법전원 중간·기말고사 CBT 구현 시험을 통해 적극 의견 수렴으로 CBT 세부 시행 방안\*에 반영

\* 수기(手記) 방식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 시간 조정, 추가비용 등



▲ 대국민 공개토론회



▲ 수도권 및 지방권 학생대표 간담회



▲ CBT 홍보 웹툰

### ○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간(약10일→즉시) 단축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본인의 석차를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시행('21. 8.)

※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7~10일 소요)하던 불편 해소



▲ 본인인증 및 응시정보 입력 후 검색

합격·성적확인

항목별표 | 성적확인 | **석차확인** | 합격조회

시험년도	2022	수험번호	11111	석차	175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890102		

▲ 석차 확인 및 출력

○ 장애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22. 9.)을 통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 포함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22. 11.)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 필요한 편의 지원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으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알권리 보장

-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22. 7.)하여 합격자 결정 기준 논의,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최초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 결정('22. 12.)

\*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 고위험 대상자 실효성 관리·감독을 통한 재범률 개선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률을 크게 개선

구분	'20년	'21년	'22년
특정범죄* 재범률	1.68%	1.65%	0.99%
성폭력 동종 재범률	1.27%	1.40%	0.73%

\* 특정범죄 :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

- '고위험군 전담제' 정착\* 및 1:1 전자감독 확대\*\*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 관리·감독

\* 고위험군 전담제 실시기관 확대 : 기존 25개 기관 → '22년 54개 기관

\*\* 1:1 전자감독 인원 확대 : '21년 30명 → '22년 73명

- 근원적인 재범위험요인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확대 실시

※ 개시 초기 형기종료자 등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 실시,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등('22. 7.)

#####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및 강력범죄 억제력 강화

- 준수사항 위반자 현장조사, 현행범체포 등 신속수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신속수사팀 설치기관 확대·개편

※ 기존 13개 팀 → 18개 팀으로 설치기관 확대·개편('22. 7.)

- 관·학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체포술 실습, 수사기법 공유, 경찰 장비 사용 훈련 등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 법무부-중부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22. 3.)을 통해 보호관찰소 체포·호신술 교육 실시, 보호관찰 실전체포술 및 교육영상 발간

- 법무부·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간 협력을 통해 전자장치 훼손 및

##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 법무부-국토교통부 간 업무협약 체결('22. 7.)

### < 신속수사팀 도입 1년 운영 성과 >

- 신속수사팀 도입('21. 10.) 전 1년('20. 10.~'21. 9.)과 도입 후 1년('21. 10.~'22. 9.) 비교
  - 성폭력 동종재범률 1/2로 감소(1.22%→0.60%)
  - 수사 건수 7배 증가(월평균 10.8건→75.5건)
  - 검찰 사건송치 기간 단축(평균 34일→16일)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했으나, 신속수사팀 설치 후 강제수사 126건(강제수사 비율 16%)

## ○ 첨단기술을 활용한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 전자장치 훼손 방지를 위해 항절단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금속 프레임 기반의 외형으로 훼손 욕구를 억제하는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22. 12.)

※ '23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적용 추진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 및 언제·어디서든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CCTV 열람 시스템' 운영('22. 7.)

\* CCTV 연계 지자체(11개) : 서울, 대전, 광주, 강원, 울산, 충북, 전남, 충남, 인천, 경북, 부산

## ○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

-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및 불일치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정확성 제고

※ '22년 총 12회에 걸쳐 등록정보 일제점검 실시(18,862건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점검 후 불일치 정보 439건 직권정정)

-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상등록 대상자 관리 협업체계 강화

※ '22년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신상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5회 개최

##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유관기관 연계 강화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교육청·검찰·법원 등에서 교육 의뢰한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대안교육 6,834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24,181명, 보호자교육 5,234명, 진로체험 14,321명, 교원 직무연수 578명, 상담조사 3,512명, 청소년 심리검사 5,835명 실시

-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경제지원 등 사후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 가능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조직화

- 상담전문가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개별상담 및 멘토링 연계 지속 실시

※ '22. 12. 기준 개별상담 및 멘토링 연계 상담 총 3,585건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역량 강화 등을 통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화 추진

-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22. 10.)
- 신규 개발 프로그램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연수 실시('22. 12.)

##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맞춤형 개별 처우 및 친인권적 수용관리를 위한 제도·지침 정비

-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 개편' 및 '면담신청권 제도' 신설
- 「보호소년 처우지침」 개정('22.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개정 ('22. 7.), 「수용업무 매뉴얼」 발간('22. 7.)

- 인성교육 및 신입자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교재 발간

- '소년원 인성교육 개편 T/F' 운영('22. 7. ~ 12.) '소년원 신입자 교육 개편' 위탁소년 수업 교재 「희망을 안고 한걸음 더」 및 보호자용 안내 책자 「즐기로운 위탁생활」, 「소년원생 정신질환의 이해와 생활지도 가이드북」 및 「정신질환 소년원생 상담 사례집」 발간

-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정책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 통한 교정교육의 효과성 제고

- 안양소년원 생활실 개선 완료('22. 7.),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설계 완료('22. 10.),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완공('22. 11.), 춘천소년원 청사 등 관리동 재건축공사 착공('22. 12.) 등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
- '전국 소년보호기관 교무과장 등 간담회('22. 상·하반기)', '분류 심사담당자 회의('22. 3.)' 등 개최 및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 강화 방안」('22. 3.), 「소년보호기관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연구」('22. 4.) 전문가 연구 용역을 실시

##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의사 6명에 대한 보수 인상 완료(기준급 200%~ 최대 232%, '22. 8.) 및 국외연수(2명) 기회 제공('22. 10.)
- 격오지 근무에 따른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 비상대기소(관사) 3개동 69세대 리모델링 실시(사업비 총 61억원)
  - ※ '22년 상반기 리모델링 업체 선정, '23. 12.완공예정('22년 2개동 리모델링 실시)
-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3교대의 불규칙한 근무를 2교대(4부제)로 전 병동 확대 시행('22. 9.)

### ○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

- '22. 의료부장 등 의무직 7명,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18명 채용
  - ※ '22년 의사 충원을 55%('21년 42.5% 대비 12.5% 증가)
- 보건복지부 업무협의를 통해 '22년 정신과 전공의 1년차 1명 임용 및 '23년 3명(+1 증원) 확보
- '22. 공중보건과의사 2명(치과, 한의과) 유지 및 '23. 1명(일반의) 증원 요청
- '22. 병동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12명 증원

- 육아휴직에 따른 국립법무병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2022년 간호 및 간호조무직으로 한정 별도 정원 9명 운영  
※ '23년 16명으로 확대 운영(간호직 : 7급 8, 8급 4/ 간호조무직 : 7급 1, 8급 2, 9급 1)

○ 치료시설 개선을 통한 치료 효과 제고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21. 3. 병상수 단계별 축소(10→8→6인실), 전자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동(320병상) 신축 등 치료 환경 개선  
※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공정률 71%(2023년 10월 완공예정)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현장

- 특수의료장비(MRI, CT) 운용으로 피치료감호자 진단 및 치료효과 제고  
※ 촬영 건수 : MRI(1,781건), CT(1,004건)
- 국립법무병원 치료환경 개선, 출소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 국립법무병원 재입소율 : '22년 목표 5.8% → 실적 4.3%로 목표 초과 달성
- 치료감호 내실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2. 6. 원예치료 및 심신안정실(스노젤렌) 설치를 위한 기금 확보 (KT&G 후원금 5,000만원) 및 '22. 11. 17. 개장식 개최



원예치료 개장식



심신안정실(스노젤렌)

- 극빈 가정 수용자 등 피치료감호자 보관금 지원
  - 1인 가구 및 극빈 가정 수용자 등 보관금이 부족한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지원(200명 각 5만원)
    - ※ '21년 갱생보호육성기금 활용 1,200만원 지원(160명 각 7.5만원)
- 대한법정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 '22. 5. 20.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외국의 치료감호 제도 소개, 치료감호 현황 및 문제점'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 범죄예방정책국장, 수원지검 차장검사, 치료처우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90여명 참석
- 비전선포식 개최
  - 치료감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22. 7. 5.)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비전선포식 개최(22. 7. 18.)

##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관찰 전문성·효과성 제고
  - 심리상담전문가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22. 1.~12.)
    - ※ 대상자 2,601명, 멘토링 20,257회 실시
  -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 재범방지를 위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사 간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22. 2.~12.)

※ 333개교 재학 중인 대상자 578명 멘토링 실시

-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대면상담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운영('22. 1.~12.)

※ 대상자 593명, 참여상담사 132명, 심층상담 253회, 대면상담 681회, 콜코칭(야간 전화상담) 5,710회 실시

- 성폭력·마약 및 정신질환자 대상자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프로그램 실시('22. 1.~12.)
- KRX국민행복재단과 연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 및 심리상담('마음보듬') 프로그램 진행('22. 8.~12.)
- 스토킹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TF 운영('22. 2.~12.) 및 스토킹사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정('22. 11.)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프로그램 실시 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를 경찰·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도록 관리·감독체계 구축('22. 1.)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대상자의 피해자 정보파악, 주기적 재피해 여부 확인 등 피해자 보호 및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22. 1.~12.)
- 성폭력·마약 및 정신질환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결과 고위험 군인 경우 전문가 연계상담, 병원연계, 증상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제공 등 치료적 개입 강화('22. 1.~12.)
-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개정('22. 7.)
- 신종 마약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마약류 약물검사가 가능한 ABON 약물검사 간이시약기 도입('22. 10.)

##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추진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출소자 등 취업지원) 추진계획 인원을 전년도 실적(7,019명) 대비 약 1,000명이 확대된 8,000명으로 추진  
※ (수혜인원) '19년 6,117명→'20년 6,605명→'21년 7,019명
- 법무보호대상자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4개 업체 선정(상반기: 제61호~62호, 하반기: 제63호~67호)  
※ 제61호 (주)태경, 제62호 태광방음문, 제63호 (주)DHIS, 제64호 주식회사 천보 등
-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성인범 중심의 취업지원을 소년범으로 확대 운영  
※ ('22.12.01./12.05.)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대상 취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대상 법무보호대상자 채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우대혜택 도입 적극 노력  
※ ('22.0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대한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우대 혜택 도입 완료  
※ ('22.11.)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 3년 면제' 우대 혜택 도입 협의  
※ ('22.11.) 신한은행 '대출금리 감면'을 위한 관련 제안서 제출 및 국세청(세금 감면), 지자체(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우대 혜택 도입 지속 추진

###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KT&G 후원금\* 및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국민 공모제\*\*를 활용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주택 개보수 및 자녀 공부방 만들기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  
\* 법무보호사업(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22년 KT&G 후원금 7,000만 원 유치  
\*\* 일반 국민들로부터 필요한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22년 총 65곳(자녀 공부방 설치 35개호 포함)의 주택 환경개선 실시  
※ 도배 등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회 투입
-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방문 및 위문품 전달 등 경제적 지원

- ※ '22년 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 가정 988건 결연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주기간 연장(10년→20년)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마련 추진
- ※ '22.06.21.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경남 진주)
- 지부(소) 간 임대주택 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체계 마련을 통해 주거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 임대주택 부족 지부(소)에서 인근 지부(소)의 여유분 임대주택을 인계받아 활용하기 위해 자체 사업계획 조정('22. 11.)

○ 무의탁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지원 내실화 추진

- 숙식 생활관 리모델링(다인실 → 1인실)\*을 추진 중으로,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및 기초생활 시설 제공
  - \* 최소 2.5평에서 최대 3.2평의 1인 1실 생활관 제공, TV, 에어컨, 침대 등 편의시설 비치
  - ※ '22년 7월 부산지부 리모델링 완료하여, 1인 1실 생활관(10개) 운영 중
- 숙식제공 대상자 권리 고지 기준 마련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무보호대상자 인권 보호 증진 노력
- 전국 생활관 내·외부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숙식제공 대상자 보안 강화 및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조직화
  - ※ '22.05. 전국 교육원 및 26개 지부(소)에 대한 24시간 중앙관제 실시
- 숙식제공 담당직원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함양 및 법무보호대상자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
  - ※ (일자) '22.06.09.(목) ~ 06.10.(금) / (대상) 전국 숙식제공 담당직원 26명
- 고위간부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리더십·직무교육 실시를 통해 직원 전문성을 함양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 ※ 중간관리자 교육 : (일자) '22.10.13.(목) ~ 14.(금) / (대상) 중간관리자 55명
  - ※ 고위간부 교육 : (일자) '22.11.10.(목) ~ 11.(금) / (대상) 이사장 등 간부직원 35명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상담 등 공익 목적의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2.11.0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 체결

○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공단본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회' 및 지역 기관별 '2·3자 협의회'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연계 강화
  - ※ 각 기관 본부 및 지역 기관에서 분기별 3자 협의회 총 14회 개최
- 대검찰청 방문, 업무협의를 통해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검찰 내 홍보 강화
  - ※ 대검찰청 ⇨ 전국 검찰청으로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업무연락 실시('22.01.)
  - ※ '22년 전국 25개 지검을 방문,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협조 요청
  - ※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수범 사례 취합 및 책자 제작·배포('22.12.)
-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지원
  - ※ 운전직종 교육 지원 시 대상자 본인부담금 감면 등 업무협약 체결('22.04.)
- 여성경제인협회(전국 17개 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 고용협력기업 확보 지속 추진
  - ※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2.05.)

○ 일반국민 등 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 실적

연번	현장점검 명 (일시·장소)	의견수렴 내용	정책반영 실적
1	취업지원사업 관련 유관기관 의견 수렴 (1. 26.)	○ 교정 숙련(취업매칭반) 훈련생 훈련참여수당 지원	○ 2022년 교정 숙련(취업매칭반) 훈련생 관련 매뉴얼 개정 및 수 당 지원 등 안내 (증1-1,2)
2	취업지원사업 실무직원 의견 수렴 (2. 4.)	○ 전국 지부(소) 취업지원사업 실무자 의견 수렴	○ 매뉴얼 및 제도 관련 부분 등 12개 의견 반영 (증2)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 24.)	○ 생활관 입소 보호대상자의 권리 고지 안내 마련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등	○ 기본적 권리고지 및 인권침해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등 반영 (증3)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8. 30.)	○ 성범죄 신상정보공개·고지로 인해 속식제공이 부당 거부되지 않 도록 직원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직원 인권 교육 실시 및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마련 (증4)

○ 국회대응, 현장방문, 언론소통 등 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 실적

연번	구분	날짜	참석자	추진 내용
1	정책현장 방문	9.21.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 업무 현황 점검 및 직원 간담회</li> <li>- 장소: 공단 본부 및 김천소년교도소</li> <li>- 주요내용 : 갱생보호사업 현황 점검 및 보호수용 가석방제 운영 등 국정과제, 주요현안 추진상황 청취 등</li> </ul>

○ 홍보 실적

연번	홍보매체	날짜	홍보 실적
1	인터넷 언론	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소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대학생 멘토</li> <li>- 근거자료: 학업지원 멘토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1)</li> </ul>
2	인터넷 언론	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li> <li>- 근거자료: 학업지원 멘토링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1)</li> </ul>
3	KBS	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소자 가족 지원으로 가정 지키고 재범률 낮춰</li> <li>- 근거자료: KBS 언론 보도 관련 정보 보고 (증2)</li> </ul>
4	인터넷 언론	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1년 취업률 81.9% 달성</li> <li>- 근거자료: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3)</li> </ul>
5	인터넷 언론	0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li> <li>- 근거자료: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3)</li> </ul>
6	인터넷 언론	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li> <li>- 근거자료: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4)</li> </ul>
7	인터넷 언론	0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li> <li>- 근거자료: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4)</li> </ul>
8	인터넷 언론	0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협약식 개최</li> <li>- 근거자료: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4)</li> </ul>
9	아시아 경제	0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 출소자 10명 중 1명만 취업 성공</li> <li>- 근거자료: 아시아 경제 언론보도 결과 보고 (증5)</li> </ul>
10	뉴스와이어 등	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보호대상자 법률지원 기반 마련</li> <li>- 근거자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업무협약식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결과 보고 (증6)</li> </ul>
11	파이낸셜뉴스	11.08 ~ (총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획보도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li> <li>- 근거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획취재 언론보도 보고 (증7)</li> </ul>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교정시설 이전·신축 현황>

기관명	착공	준공	시설규모(평)		정원 (명)	사업비 (백만원)	'23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부지	건물				
거창구치소	'15년	'23년	160,818 (48,647)	19,844 (6,003)	400	96,146	-	'23. 1. 준공
원주교도소 (이전)	'14년	'25년	200,319 (60,702)	41,709 (12,617)	1,100	153,575	10,522 (공사비 등)	'22. 6. 공사 착공
태백교도소	'22년	'28년	444,187 (134,602)	59,560 (18,048)	1,500	202,685	4,525 (설계비)	'22. 11. 적정성 검토 완료(KPI)
남원교도소	'22년	'27년	150,600 (45,636)	21,185 (6,419)	500	126,170	-	'22.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광주구치소	'23년	'28년	156,000 (47,272)	36,686 (11,117)	900	140,535	-	'22. 12. 적정성 검토 완료(KPI)
경기북부구치소	'20년	'25년	116,000 (35,125)	38,524 (11,674)	1,200	115,262	1,720 (설계비)	'22.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 관계부처·국회 등과의 정책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모
-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 ※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법무부-안양시)
  - ※ 대전교정시설 이전 등을 위한 업무 협약(법무부-대전광역시-한국토지주택공사)
- 수용동 증·개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노후시설의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향상 도모
  - 기존의 수용동 증·개축과 더불어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수용 거실 추가 확보
    - ※ 수용동 증축 : 여주(교) 등 3개 기관 수용 공간 확충 237명
    - ※ 수용 공간 확충 사업지 발굴 : 순천(교) 수용동 등 5개소 333명
    - ※ 대전교도소 등 9개 기관 보호실·진정실 개선



거창구치소 신축



원주교도소 이전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 수용자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시설·생활 환경 개선

- 수용동 내진보강 사업을 통한 수용생활의 안전성 확보 및 단열보강 사업을 통한 단열 효과 극대화로 에너지 절약

※ 수용동 내진보강 사업 : 안동교도소

※ 수용동 단열보강 사업 : 서울구치소 등 3개소

-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유사시 초동대처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 충주구치소 등 2개소

○ 그린교정시설 조성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 **(태양광 패널 설치)** 교정시설의 옥상, 옥외 주차장 등에 평지붕 형태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한 획기적 에너지 절감

※ '22년 대구교도소 등 15개 기관(4,963백만원)

- **(부대시설 녹지화 및 공원화)** 지역사회 녹색공간 제공을 통한 교정시설 이미지 개선 및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교정시설 조성

※ '22년 서울구치소 등 9개 기관(1,8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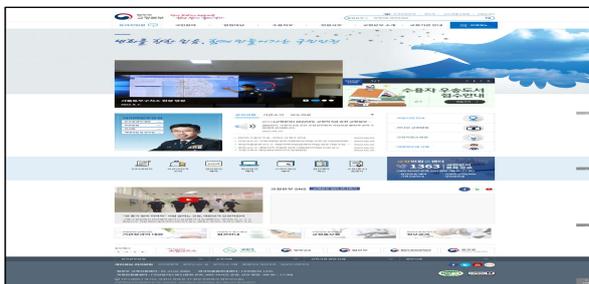
※ 국가 주요 방호시설의 기능을 하는 교정시설 특성상 본 사업 목적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부대시설 녹지화 및 공원화 사업 부문은 폐지



○ '교정본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면 개편'을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 교정 관련 다양한 정보를 방문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전면 개편
- 개편내용 : 무빙배너 신설, 온라인 민원 킷메뉴 추가(원격지원서비스, 스마트접견, 변호인 접견) 등

※ 개편기간 : '22. 5. ~ 12. / 개편 적용일시 : '22. 12. 13.(화)



<개편 전>



<개편 후>

○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교정본부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직원 미담사례 등을 영상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 채널)에 적극 게시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인식 향상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 및 팔로우 현황>

<p>14,647 ↑ 1,147명 ↑ 2021: 13,500   2022: 14,647</p>	<p>4,309 ↑ 53명 ↑ 2021: 4,256   2022: 4,309</p>	<p>12,464 ↑ 1,809명 ↑ 2021: 10,655   2022: 12,464</p>	<p>4,262 ↑ 486명 ↑ 2021: 3,776   2022: 4,262</p>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카카오채널

※ 구독자 및 팔로워 수 현황 : ('21.) 32,187명 → ('22. 11. 30.) 35,682명으로 3,495명(약 11%) 증가(↑)

##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 스마트접견 대상 범위 확대

- 스마트접견의 대상 범위를 수형자에서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전 수용자로 확대하여 시행('22. 1.)

### ○ 민원(수용·출소)증명서의 서식 개선

- 민원증명서의 목적 외 사용 차단 및 증명서 사용 용도 명시를 위한 증명서 서식 개선('22. 1.)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신청서, 수용(출소)증명서 양식에 출력 용도 구분 표시
  - 한 민원인이 한 수용자에 대해 한 번 동의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다시 동의 요청하도록 개선
  - 발급 용도 '법원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기타' 삭제
  - 발급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추가

### ○ 교정기관 무선 스마트 접견 장비 설치 운영 등 의견 조회

- 각 지방교정청별 고위험군 수용자 무선 스마트접견 장비 등 운영 방안 관련 의견 조회('2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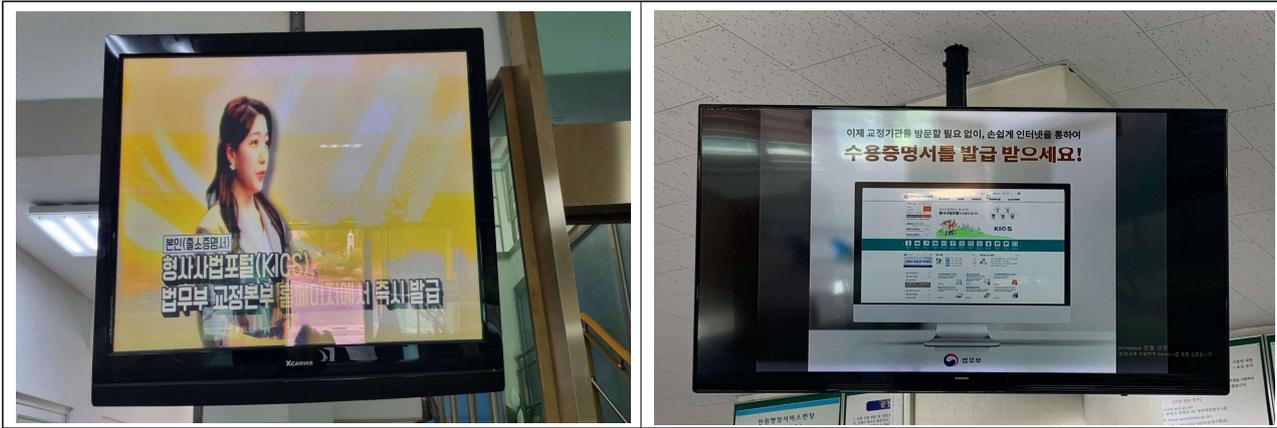
###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기관 선정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마트 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 청취('22. 6.)

### ○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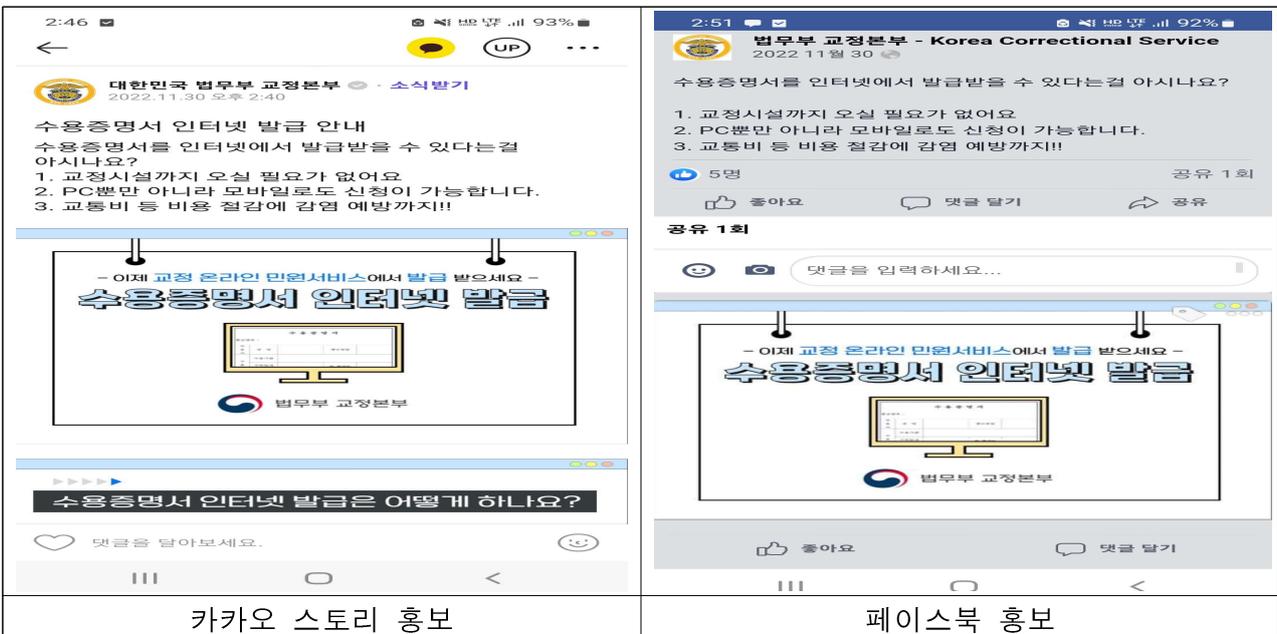
- 전국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내 민원실, 청사입구 등 TV 모니터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홍보영상 및 문자 그래픽 송출) 등을 게시('22. 8.)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게시〉



-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SNS 홍보(22. 11.~12.)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SNS 홍보〉



카카오 스토리 홍보

페이스북 홍보

○ 전국 교정기관 통합접견시스템 점검(22. 9.)

- 일반접견 및 스마트접견 등 통합접견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

○ 스마트접견 등 수용자 및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22. 12.)

- 스마트접견 이용 수용자(전국 교정기관별로 10명 선정) 및 민원인 설문조사 실시

· 수용자 만족도 : 96.96%, 민원인 만족도 : 71.88%

##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방안」 수립('22. 12.)

- 분류센터의 재범고위험군 정밀분류심사 대상자 확대
  - ※ (기존) 살인, 성폭력, 방화, 폭력 등 ⇒ (확대) 정신질환,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추가
- 재범고위험군 대상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실적 증가
  - ※ '21년 (추정)실적 1,074명 → '22년 실적 1,343명(+25%)

\* (개별처우계획) 개인별 범죄 유발요인, 재범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필요한 처우계획을 수립

### ○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모범수형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과밀화 완화 등을 위해 총 10,310명 실시('21년 대비 920명 증가)
- 심층면접관 제도를 통해 수형자의 범인성 개선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 ※ '21년(4월 이후) 실적 252명 → '22년 실적 476명

\* (심층면접관 제도)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수형자 대면면접, 심리검사, 건강상태, 보호자 및 보호시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지원하는 제도

- 수형자 재범유발요인을 고려한 조건부 가석방 추진
- 출소 후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조건부, 정신질환자 및 단순 마약투약자에 대한 치료조건부 등 다양한 조건부 가석방 시행
  - ※ '22년 실적 : 취업·치료조건부 86명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수형자 교도작업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대전(교) 논산지소 작업장 신축으로 수형자 근로의식 함양 기회 확대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개선 및 기능자격 취득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과정에서 복수자격 취득의 다기능 과정으로 전환(건축목공 등 12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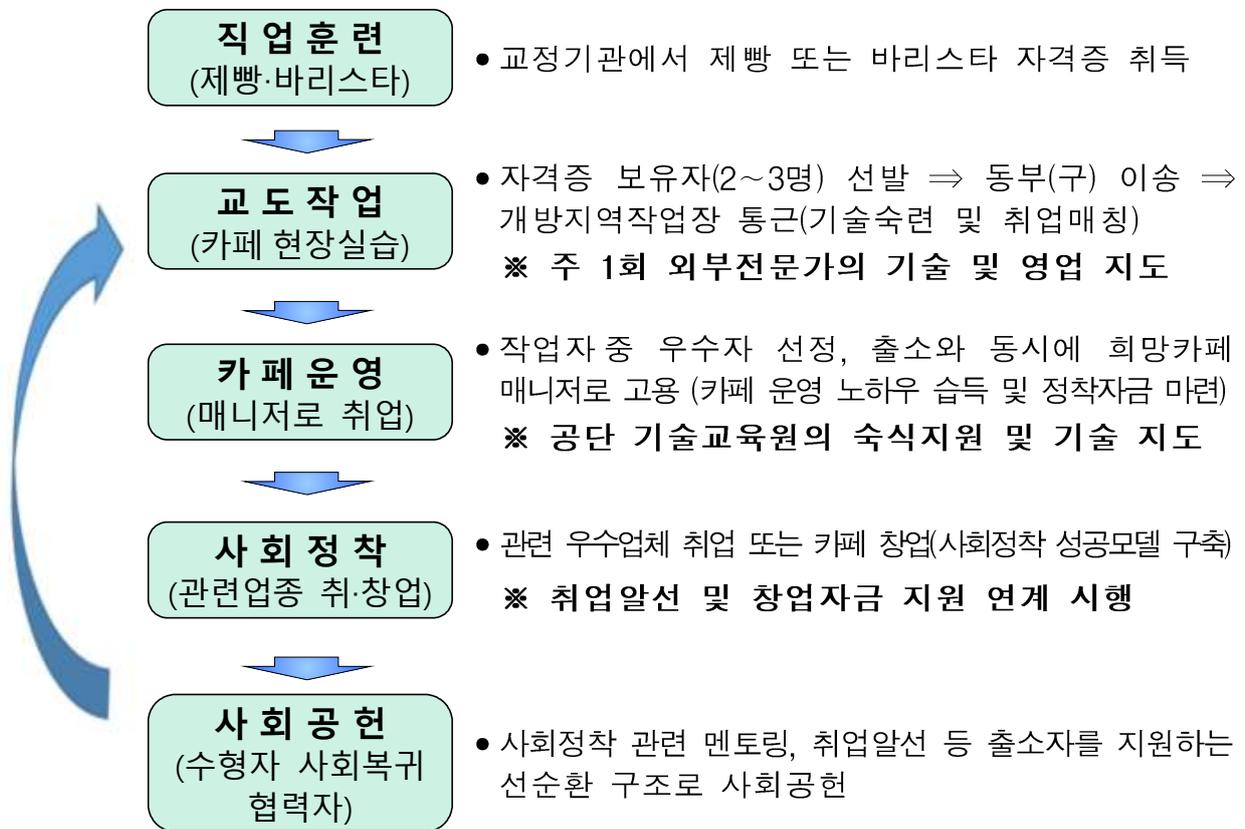
과정명	훈련 기관	훈련 인원	훈련 기간	취득자격증	비고 (추가과정)
건축목공	원주(교)	25명	1년	목공기능사 + 거푸집 기능사	거푸집
자동차정비	경북(직)	25명	2년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진단평가
에너지관리	청주(교)	25명	1년	에너지관리 기능사 + 온수온돌 기능사	온수온돌
전기	포항(교)	25명	1년	전기 기능사 +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
건축목공	포항(교)	25명	1년	건축목공 기능사 + 건축도장 기능사	건축도장
양복	부산(교)	20명	1년	양복 기능사 + 세탁기능사	세탁기능사
화훼장식	청주(여)	16명	1년	화훼장식 기능사 + 바리스타	바리스타 2급
의상디자인	청주(여)	14명	1년	양장 기능사 + 바리스타	바리스타 2급
조경	서울남부(교)	16명	1년	조경기능사 + 유통관리사	유통관리
패션융합	서울남부(교)	18명	2년	패션융합 산업기사 + 유통관리사	유통관리
정보통신운용	춘천(교)	22명	1년	통신선로 기능사 + 네트워크 관리사	네트워크 관리
바리스타	소망(교)	40명	6월	바리스타 + 제과 기능사	제과

- 산업수요 변화에 맞는 종목(에너지 관리 등 5개 과정)을 신설하는 등  
출소 후 취·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신설 과정명	훈련기관	훈련인원	훈련기간	취득자격증
에너지관리	순천(교)	25명	1년	에너지관리 기능사
승강기	포항(교)	25명	1년	승강기 기능사
친환경자동차	화성직훈(교)	27명	1년	자동차기능사
유통관리	서울남부(교)	34명	1년	유통관리사
네트워크 관리	춘천(교)	22명	1년	네트워크 관리사

○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통합지원을 위한 “따손카페”

- 기존 남성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도작업 프로그램을 넘어서 여성수형자 사회복귀를 목표로 직업훈련→교도작업→사회정착 프로세스 확립
- (사)제로캠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서울동부기술교육원과 협업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내 카페 설치 및 운영



○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서울대공원 야외광장 개최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그간 VR온라인 전시회에서 나아가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 제51회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국민을 대상으로 교정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수형자의 목표의식 고취, 기술수준 제고 및 수형자의 취업역량 강화

※ 교정작품전시회 방문인원 : '16년 1,879명 → '17년 2,303명 → '18년 2,839명 → '19년 3,060명 → '22년 20,700명('20, '21년은 온라인 전시로 제외)



○ 전국·지방 기능경기대회 참가하여 입상 총 81명(금29, 은18, 동21, 우수1, 장려12)

○ 거점형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 우수 중견기업 유치가 용이한 교정기관이 거점이 되어 산업기반이 약한 주변 교정기관과 공동으로 라인공정 작업 실시
- '22년 시범운영 : 광주(교)를 대표기관으로 순천(교), 정읍(교) 공동 계약 후 6개 작업장 150명 작업 실시

○ 「작업장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이를 활용한 안전한 교도작업장 환경조성

-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사례를 7개로 유형화
- 전국 작업장에 비치하고 수시로 교육함으로써 교도작업 수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스스로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유도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교정 시설 내 감사나눔 문화 확산 노력
  - 감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정본부-감사나눔연구원 업무협약(22. 10.)
  -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신문 보급·지원(22. 10.)
    - ※ 감사나눔연구원에서 전 교정시설에 감사나눔신문 기증(20,000여 부)
  - 감사쓰기 등 감사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영상 제작(22. 11.)
  - 제1회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개최(22. 11.)
    - ※ 공모전 우수자 17명에 대한 시상(22. 12.)
  - ‘수용자 감사나눔 운동 추진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시행(22. 11.)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추진 방향 논의



교정본부-감사나눔연구원 업무협약식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양성
  -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2. 6.)
  - 전문 강사 자격인정 평가 관련 기본계획 수립(22. 9.)
  - 제1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합격자 19명 배출(22. 11.)
  - 강사 자격 인정심의회 개최(22. 12.)



면접 평가



강의시연 평가

- 가족관계 회복·유지를 위한 사회적 처우 정상화 노력
  - 출소 후 사회적응·가족관계 유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 귀휴 실시 및 화상 가족접견 병행 실시
    - ※ 귀휴 : 52건('21.) → 1,097건('22.), 가족접견 : 859건('21.) → 1,454건('22.)
  - 수형자(엄마)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 지속 실시
- 효과적인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기재부 협의를 통해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예산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담 직원으로 채용('22. 5.)
  - 지방교정청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전담 직원, 민간참여자 등으로 '수용자 자녀지원팀' 구성('22. 6.)
    - ※ 방문상담, 긴급생필품 지원, 공적·민간단체 지원 연계 등 109가구 164명 지원('22.)
  -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법무부 적극행정 주요성과 선정('22. 9.)
- 교화 목적 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자체 제작 프로그램 다양화
  - 수용자에게 숨은 역사적 사실, 일화 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지식 함양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22. 1. ~ 12. 매주 1회)
  - 수용자가 직접 겪고 있는 고민을 신청하고, 심리상담 전문가가 코칭하여 심리의 안정을 돕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22. 1.~12. 매월 1회)
  - 교화방송 콘텐츠 개발 및 정책 수립 자료 활용을 위해 교화방송 만족도 조사 시행('22. 5)
  - 교화방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 개최('22. 6.)

##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 비대면 원격진료 확대 운영

- 원격의료시스템 협력병원 추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원격진료 건수 27% 증가 및 수용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연도별 원격진료 건수〉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10,498	12,492	14,377	16,799	22,554	24,088	28,501	36,177

※ 서울대병원 등 총 39개 협력병원과 원격진료 중('22년 총 13개 병원과 추가 협력 체결)

〈원격진료 과목별 운영 현황〉

연도 \ 과목	계	정신과	내과	신경과	가정 의학과	피부과	정형 외과	비뇨 기과
2022	36,177	30,879	1,089	199	665	2,627	719	7

### ○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증진

-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 시 의료처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교정공무원 응급구조사 위탁교육 협의('22. 2.)
  - ※ '22. 8. 해양경찰청 응급구조사 4명 위탁 교육 실시
- 공중보건 의사 편입 인원 감소추세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중보건 의사 인력 93명 확보('22. 3.)
- 전문적인 의료 처우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30명 증원('22. 5.)

### ○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수용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증진
  - ※ 컴퓨터 영상시스템(PACS·DR) 2대, 치과 파노라마촬영기 29대, 혈액투석기 10대, 치과 유닛 체어 6대, X-Ray 촬영기 3대, 초음파기 3대 등 노후장비 현대화 및 신규 도입

○ 교정시설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빌딩형 및 노후화 시설 등 공기순환에 문제가 있는 교정시설에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 운영

〈시범 운영 기관 등〉

기관명	설치 장소	비고
서울동부(구) (21개 수용동)	34동, 41동, 45동, 51동~55동, 71동~75동, 112동~115동, 122동~125동	확진자 등 격리수용동(천장형 음압기 21개) ※ 122동(신입수용동) 벽부형 양압기 설치
인천(구) (1개 수용동)	1201동	확진자 등 격리수용동(천장형 음압기 10개)
수원(구)	의료수용동 3개 거실, 진료대기실, 진료실, 의료과 사무실	벽부형 환기장치 (10대 설치)
안양(교)	의료과 진료대기실, 면담실, 원격진료실	천장형 환기장치 (6대 설치)

- 전국 교정기관 감염병 담당 직원 워크숍 개최('22. 6.)
- 교정시설 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22. 7.)  
※ 두 차례에 걸쳐 정기회의 실시(1차 : 서울동부구치소, 2차 : 안양교도소)
- 전국 교정기관 감염병 담당 직원 양성 교육 실시('22. 1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자 접종 실시  
※ 교정시설 백신 접종률(직원 3차 97.1%, 4차 58.5%, 수용자 3차 81.6%, 4차 52.7%, '22. 12. 31. 기준)
- 인플루엔자(15,675명), 폐렴구균(919명) 백신 수용자 예방접종 실시('22. 10 ~ 11.)

○ 마약류 수용자 출소 후 치료연계 홍보

-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 마약 극복 후기 등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제작하여 마약류 사범 출소 시 지급('22. 10.)

○ 정신재활 치료수용동 시범 운영

-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입소 증가에 따른 전문적 치료와 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 모색('22. 4.)  
※ 시범 실시기관 :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진주교도소

〈정신재활 치료수용동 치료 과정〉

수용동 입원 후	내 용
1개월 이내	• 주 2회 약물치료 및 동정관찰
2~6개월	•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한 수용자 선별 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6개월 ~	• 치유 판정 후 일반 수용동 전실

○ 수용자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 대책 시행

-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등의 대리처방이 아닌 직접 진료를 통해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22. 10.)
- 교부허가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및 마약성 진통제 등에 대한 반입 기록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의료정보시스템 입력 방식 개선(22. 12.)
- ※ “○○약품 외 8종” 과 같은 일괄 기입 방식 → 개별 품목 입력 방식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도입

- 교정시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시범운영(22. 1.)
- 마약류사범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동영상 제작(22. 6.)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매뉴얼 개발(22. 4.)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전·후)검사의 표준화된 채점 및 해석 기준 마련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매뉴얼 주요 내용**

- ▶ 세계 최초로 재범유발 요인 등을 측정하는 치료자용 척도 개발
- ▶ 긍정왜곡, 비일관적 등 검사태도 요인 등 측정 기준 개발
- ※ 피검사자의 심리적 방어 대처, 자기보고식 검사 한계 보완

○ 범죄 유형·특성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정신재활 치료 수용동 운영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22. 3.)

- 디지털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무매뉴얼 개발('22. 12.)
- 소년성폭력사범 특화심리치료 프로그램 초안 개발('22. 12.)
-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가정폭력 특화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22. 12.)

○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 자체 심리치료 전문성 강화

-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관련 문제의 평가 및 예방, 상담을 위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21년 36명 → '22년 54명)
- 우울과 절망에 처한 내담자가 심리적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위기 상담사(2급) 자격 취득('21년 129명 → '22년 151명)

○ 성폭력 등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 정규과정 외 추가 과정 확대 운영

- 유지과정 확대(20개 기관→전 교정기관) 및 특별과정 확대 시행(연 1회→연 2회)  
※ 연쇄 성폭행범 김00, 박00 대상 1:1 개인 심리치료 집중 실시

구 분	특별 과정	유지 과정
과정 대상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가학·변태적,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으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심화과정 수료자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필요시 기본·집중과정 수료자)
운영 시간	150시간(4개월)	20시간(1개월)
운영 기관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전 교정기관

○ 이수명령 불응자 과태료 부과·징수 예규 제정('22. 6.)

- 스토킹처벌법 시행('21. 10.)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응자에 대한 교정기관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의무 규정('22. 6. 2)

**이수명령 불응자 과태료 부과·징수 예규 주요 내용**

- ▶ 과태료 부과
  - 이수명령 이행지시 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 의견제출 시, 확인 및 과태료 결정·부과
  - 이의제기 시, 과태료 재판을 위한 관할 법원 통보
- ▶ 과태료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가산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 ※ 수용자 보관금에 대한 강제 징수 가능

○ 실효적 수용자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 체계 운영

- 수용자 내면의 변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상담, 1:1 수용자 전담 상담, 자살예방 상담 등 지속적인 전문적인 상담체계 구축
- 수용자 심리상담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상담('22년 108,119회), 외부 전문가 상담('22년 2,129회), 생명의 전화 위기 상담('22년 870회) 실시

○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 스토킹, 가정폭력 등 소수 이수명령 및 규율위반자를 대상으로 인지·정서·행동문제 등 범인성 개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22. 1.)
- 동기강화, 자기이해,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기술, 보충프로그램 등 총 5개의 모듈로 39회 78시간 운영

※ 가정폭력처벌법('21. 1. 시행),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핵심(Core) 사전·사후 척도 검사 결과



핵심(Core) 시범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 (4)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 무사증 입국 전면 재개 및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 코로나19 방역상황 완화, 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22. 11. 1.부로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지역) 무사증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22. 4. ~ 11.) 지방공항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제주무사증 재개 및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22. 6. 1.)

※ '2022 서울페스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한시적 무사증 입국 허용('22. 8. 4. ~ '22. 10. 31.)

###### ○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

- 그간 민간에서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던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의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시설개선 및 적절한 식사제공 등 입실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출국대기실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22. 8. 18.)

###### ○ 민원인 편의와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등록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만 17세 → 만7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출국금(정)지 온라인 이의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입국심사증'을 여권 부착식으로 변경하여 QR코드를 활용해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민원인 편의 제고와 권리구제 절차 보장 강화

###### ○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으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 검증, 외항 정박 선박검색용 감시정을 도입\*하여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등 공·항만의 국경관리 강화 정책 시행

\* 부산청(황옥호), 인천청(초지진호)

##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 비자 정책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 지원

-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문연구자의 경우 국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연구(E-3)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22.1.)
-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를 신설하여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에게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유학, 취·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문인력의 국내 정착 유도("22.8.)
- 고소득자 및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에게는 제한되는 일부 직종(단순노무, 일반사무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등) 외에는 사전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취업비자(E-7-S) 신설("22.12.)

### ○ 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비자 제도개선

-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1,250명→2,000명)("22.1.)
- 조선업분야 전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조선업 직종의 쿼터 폐지, 용접공 해외 채용 절차 간소화, 유학생 활용 확대("22.4.) 및 용접공 고용 허용업체 확대("22.11.)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허용 상시화 및 농어업과 계절적으로 밀접한 제조업 분야에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확대, 배정시기 조정으로 농·어번기에 맞는 적기 인력 공급("22.1., '22.6.)

※ ('21년) 1,847명 참여 → ('22년) 12,027명 참여(△551% 증가)

- 관광 목적 등의 단기방문(C-3) 비자 및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22.6.)
-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 및 동포가족에 대해 체류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22. 10.)

\* 총 28개 기초지자체 선정

### ○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 국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동포 자녀의 안정적 체류환경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22.1.)

-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공관에서 시증발급이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시증발급절차 간소화 조치로 신속한 국내 입국 지원('23, '24)

※ '22. 3. 8. ~ 12. 31. 3,036명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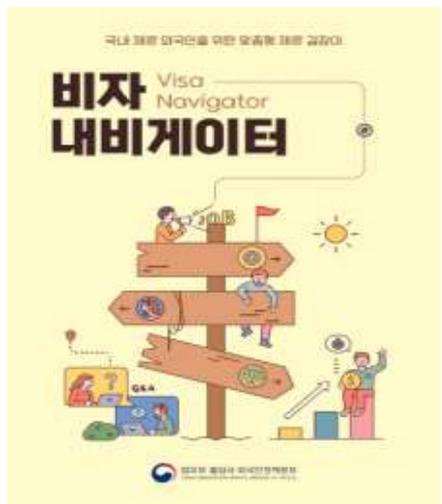
- 전쟁으로 인해 본국으로 출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에게 취업이 가능한 임시 체류자격 부여, 출국기한 유예 등 인도적 특별체류 지원('22)

### ○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

- 외국국적동포의 특성을 고려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22.9.)하여 동포들의 출입국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주요 법 위반사례 안내를 통해 동포의 법질서 의식을 높임으로써 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차별적 인식개선

※ 4개국어(한, 영, 중, 러)로 제작하여 소속기관·관계기관 배포(1만 부) 및 온라인(기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 게시

-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영주취득까지의 체류주기별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제작하여 민원 편의 제공('22.11.)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

- (집중단속) '유흥·마시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22. 6. ~ 7.)을 통한 테마별 단속으로 외국인 642명,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 적발

- (정부합동단속) 경찰청·노동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228명 인력을 지원 받아 총 530명이 참여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진행('22. 10. ~ 12.) 하여 총 4,348명 단속

○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지속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자진출국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률 상승 등 방역사각 지대 예방

※ 불법체류 외국인 2차 백신접종률: '21. 8월 기준 5.7% → '22. 10월 기준 93.9%(3차 67.2%) / '22. 1~10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25,467명

- (방역 점검·계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시설을 중심으로 진단검사, 백신접종·방역수칙 계도·홍보활동 수행

※ '22년 기준 밀집지역·시설 등 31,199개소 점검·계도, 안내문 40,541장, 마스크 79,093개, 손소독제 903개 배포

○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22. 4. 화성보호소 내 여성보호동 일부 개방하고 '22. 10. 남성보호동 일부 개방하는 등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 철창 제거, 이동의 자유 보장, 자율적 보호 생활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운영방식



-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22. 12.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및 특별계호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 효과적 단속 방안 및 단속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단속 절차 보완) 단속 시 주거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22. 8.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훈령)을 개정하고 '22. 7. 이유 없이 단속거부 시 압수수색영장 발급받아 단속하도록 절차 개선
- (토론회 개최) '22. 11. 전국 출입국기관장 등이 참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유입 방지 방안 등에 관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개최

## □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 이민행정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비자 신청부터 입국 후 국내체류, 사회적응, 국적취득 등 과정 전반에서 단일 경로를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민행정 원스톱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22. 7.)

※ 현재 하이코리아(체류), 비자포털(사증), 사회통합정보망(사회통합), 유학생 정보시스템(유학생관리) 등 별도 운영 중



### ○ 외국인 소득금액 정보연계를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그간 민원인이 각종 체류 업무 등 민원 신청 시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국세청과 외국인

소득금액 정보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외국인의 소득금액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 효율 향상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22. 12.)

※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소득금액정보 총 960,026건, 합산금액 21.4조원의 정보 연계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 외국인도 인터넷 은행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2. 11.)

○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방지 교육

-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제공 담당자 대상으로 정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상·하반기 1회) 및 신규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등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금지 및 유출 방지 철저 등 경각심 제고

□ 이민행정 홍보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출입국정책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수시로 정책메일로 발송하여 주요 정책의 시행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속한 홍보 강화로 국민의 정책이해도 개선

- ※ 정책메일 총 91건(1분기: 34건, 2분기: 36건, 3분기: 19건, 4분기: 28건) 발송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共Zone’)을 발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외국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민자의 성공적 한국 정착기 및 사회 공헌사례 등 미담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 하반기 일상회복 전환 국면을 맞이하여 일반인 대상 현장투어를 재개함으로써 총 10회에 걸쳐 6개 주요 출입국기관(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전, 부산, 광주)의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약 115여 명에게 제공

- 온라인 매체 선호도 증가를 고려한 적극적인 디지털 홍보활동 추진
  - 디지털 매체 활용도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기능 구축, 카카오톡 채팅 기능 신설,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 제작



- ※ 정책메일 발송(91건), 동영상 제작(30건), 기획 홍보물 게재(389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구독자 전년대비 증가(페이스북 11%↑, 카카오톡 채널 40%↑, 유튜브 288%↑)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출입국업무 현장투어 재개에 대한 높은 잠재적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생활문화 맞춤형 출입국 현장 (인천공항) 랜선투어 콘텐츠 제작

**출입국 랜선 투어 콘텐츠 유튜브 게재**



※ '22. 10. 21.유튜브 채널 게재 후 3일 만에 조회 수 2,000회 돌파, '23. 2. 19. 현재 조회 수 약 33,000회 기록, 2022년 주요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혁신행정담당관실-15065(2022. 10. 12.)호]

-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개선
  - 방송출연 및 인터뷰 진행, 정책브리핑, 영문보도 자료 배포 등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파급력 있는 홍보활동 추진

※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취재 및 아리랑TV, MBC, KBS, EBS 등 방송 촬영 및 보도자료 141회, 인터뷰·기고 12회 제공

### 월스트리트저널 취재 기사

2/9/22, 10:47 PM From Kabul to South Korea, Afghan Families Make a Hard Transition — 'I Miss Everything' - WSJ

This copy is for your personal, non-commercial use only. To order presentation-ready copies for distribution to your colleagues, clients or customers visit <https://www.djreprints.com>.

<https://www.wsj.com/articles/from-kabul-to-south-korea-afghan-families-make-a-hard-transition-i-miss-everything-11644414357>

**ASIA**

## From Kabul to South Korea, Afghan Families Make a Hard Transition—'I Miss Everything'

Nearly 400 Afghans try to acclimate to a very foreign and largely monoethnic South Korea that accepts few refugees after the Taliban uprooted their lives

By [Dasl Yoon](#) / Photographs by Jean Chung for The Wall Street Journal  
Feb. 9, 2022 8:45 am ET

-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오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

- 정책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활성화 노력
  - 정책고객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소식지 '공존' 리뷰 이벤트 실시, 홍보 만족도 및 주요 정책인지도 조사 시행, 출입국 현장투어 설문조사 실시, 행안부 주관 민원행정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

※ 홍보만족도 조사('22. 11. 7. ~ 11. 21.): 총 509명(내국인 279명, 외국인 230명)이 참여, 전년대비 홍보 만족도 점수 향상('21년 국민 89.5점, 외국인 92.5점→'22년 국민 93.4점, 외국인 90.7점)

- 재한외국인의 코로나-19 극복 노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 시너지 창출

-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거쳐 '불법체류외국인 3차 접종 독려 백신인센티브

- 부여 제도' 방송사 자막방송(국·영문) 두 달간 매일 송출
- 서울시와 함께 체류외국인 백신 추가접종 독려를 위한 다국어(11개 언어) 웹포스터 제작



## □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 202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22. 4월)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이민정책 국가계획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7~2022)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22. 3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

※ 19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 5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1,241개 과제 추진

###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준비(연중)

- △ ('22. 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22. 5.) 지자체 의견 수립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경기·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 ('22. 5.)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단」 운영방안 마련, △ ('22. 11.) 관계부처 참여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개최(총 4회), △ ('22. 12.) 국민·전문가 의견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 국민공감대에 기반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노력(연중)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 참여단」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외국인을 국민참여단으로 구성(6월) 및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8월, 10월)

- '제15회 세계인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개최('22.6월)

- 각계각층의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 정책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등 제시

- '이민청 톨아보기' 국회세미나 개최('22.8월 ~ 9월, 총 3회)

-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국익과 인권의 조화”, 경제활력 제고와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일반 국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출입국·이민정책의 나아갈 방향 등 모색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	3차 세미나

○ 소관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연중)

-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규정 신설('22.1월), △ 국내·외 비상사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 신설('22.4월), △ 출국대기실운영규칙 제정('22.8월) 등

## □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귀화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 10주년을 맞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한 우리 사회의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22. 2.)
-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대문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22. 8.)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22. 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2. 8.)

### ○ 국적법 개정을 통한 국적이탈제도 개선

-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기간 제한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현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극적 개선 입법 추진하여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22. 9.)

※ (주요내용) 국적이탈 신고기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탈 가능

- 국적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 개정(‘22. 12.)

- 국적법 및 국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 지정, 제출 자료 규정 등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22. 12.)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를 개정하여 장애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국적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근거 마련 등('22. 1.)

※ (주요내용)

-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가 곤란한 경우 비대면 방식의 수여 절차 근거 마련, 장애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귀화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및 생계유지 요건 완화 근거 마련 등

○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도입

-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22. 12.)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단계별 절차】**



\* 연구실적 우수 시 2단계에서 즉시 특별귀화 가능(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 □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 체류유형의 다양화, 정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대규모 집합평가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평가, 종합평가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 컴퓨터 기반평가 (CBT, Computer Based Test\*) 도입 ('22. 3.) \* 일 4회, 회당 최대 28명 실시 가능



CBT 평가센터(경기도 광명시) 내 평가장

- 영주 및 귀화자에게 맞춤형 교육(법질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 사회 통합 유도하기 위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22. 7.)

### ○ 이민자 사회적응 및 정책홍보 강화

-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해 정착지의 관서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한 정착 경험 공유('22. 11.) 등 특별기여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착 지원 실시

\* '22. 12월 기준 399명(78가구)이 인천, 울산, 양주 등에 거주 중

- ※ '정부합동지원단'('22.10.) 해단 이후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 수행 중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들에게 혼인 상대방 국가의 문화, 결혼이민 체류 정보 등 제공을 위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책자 발간 및 지방 출입국관서 배포 (총 19,200부) ('22. 3.)

○ 국민의 이민·다문화 수용성 제고

- 법정기념일인 ‘제15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외교사절과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의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 기념식을 실시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공존과 자립, 나눔’의 메시지 전달 (‘22. 5.)



법무부장관 기념사

재한외국인 중창 공연

-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14명)을 선발(‘22. 3.)하여 재한외국인 대상 멘토강의, 정책홍보 등 활용, 이민자의 자발적인 사회활동 참여 유도로 이민자와 함께하는 이민행정 환경 조성

※ 멘토단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정화활동(청계천) 실시 (‘21. 9.)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체계 강화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문화 관련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사업 협의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22. 상·하반기.)



제6회 외국인정책협의회 (‘22. 4.)



제7회 외국인정책협의회 (‘22. 9.)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난민심사·체류·전담인력 관리 등 난민업무 관련 규정 정비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절차 개선, 통역인 관리·교육체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계획」 개정(1.4.)
  - 난민면접 녹음·녹화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녹음·녹화 업무 매뉴얼」 제정(1.7.)
  -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평가기준 및 특정직위 선발시기 보완 등 「난민전담공무원 운영계획」 2회 개정(5.18., 11.11.)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난민업무 지침」 개정(9.28.)
  -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변경,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출생자녀 자격 부여 권한 위임(장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위임 범위 고시」 개정(10.13.)
-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 처우정책 및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안정적 체류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허가자 체류자격 개편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해외 사례 조사·연구 등 추진
  -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을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한 「2022 생계비 지원액 기준(안)」(1.7.) 마련
  - ‘난민심사관 멘토제’ 시행, 난민통역비 산정기준 구체화, 난민인정 심사결과 전자우편 통지 방안 마련 등 난민심사 제도 지속 보완
- 난민인정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국제기구·대학교수 등 지역·법률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협약 및 「난민법」 이론, 난민면접·심사 기법, 국가정황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난민전담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연 6회 운영

- 최신 난민소송 판례 분석 및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난민심사 기법 향상, 난민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과정 중 난민소송 과목 개편(12월 중)

< '22년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

회 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3.7.~3.8.)	4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개관(난민법의 이해)</li> <li>•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인권감수성 교육</li> </ul>	법무부
2차 (4.14. ~ 4.15.)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미얀마 국가정황</li> <li>- 난민인정자 초청 강의</li> </ul>	법무부
3차 (6.30. ~ 7.1.)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신빙성 평가 요소의 이해 및 실제</li> <li>- 젠더의 이해</li> </ul>	법무부/UNHCR
4차 (8.10. ~ 8.11.)	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 개관(난민법의 이해)</li> <li>• 난민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li> <li>•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카자흐스탄 국가정황'</li> </ul>	법무부
5차 (10.27.)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이론(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0호)</li> <li>• 난민인정불인정 사례 분석</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아동면접 시 유의사항</li> </ul>	법무부/UNHCR
6차 (12.9. - 12.12.)	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소송 판례 분석</li> <li>•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li> <li>• 전문가 초청 강연</li> <li>- 러시아 및 튀르키예 국가정황</li> <li>- 난민인정자의 지역사회 정착기</li> </ul>	법무부

- 신규 전문임기제 공무원(난민심사 담당) 기초 교육과정 일부를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위임하는 방안 시범 도입(5. 25.), 전국 난민심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2. 9.), 난민전담공무원 평가 연 2회 실시 등 1차 난민심사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 노력 지속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우수 난민전문통역인

160명(30개 언어)을 3년간 위촉(1.4)·심사에 활용하고, 하반기에도 통역인을 추가 선발함(12월 중)에 따라 우수 통역 후보군 확보 노력

\*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는 제도

### < '22년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과 별개로 외부 통·번역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 4회, 보수교육 2회 실시

####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및 정착 지원

####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2021년 사업은 2022년도로 대체됨

- '20년 수용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던 제8기 재정착난민 사업 재개로 43명의 재정착난민 수용(5~8월)
- '22년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3.30.) 후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추천을 통한 재정착난민 대상자 선별, 서류심사·현지 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9기 재정착난민 수용(12월 중)
- 재정착난민 수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착난민 신규 정착지 선정,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2022년도 재정착실무협의체 회의 개최(5.16.)

##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 이의신청의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Guide to Refugee Appeal Process)」 책자 발간·배포(6개 언어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이의신청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보장 강화(22. 2.)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대외 공개용(예규)으로 제정·시행하여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22. 10.)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난민위원회 자문 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고,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22. 12.)

### ○ 정확한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국가정황 분석 자료 마련

- 사례가 다양하여 심사가 어려운 '특정집단 구성원 신분' 사유(젠더)에 대한 국내외 심사·판결례 및 해외 심사기준 등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유관 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22. 4.)
- 난민신청 다발국에 관한 난민신청 사유별 국가정황정보를 통합한 국가보고서(중국,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발간(22. 4.,6.,8.)
- 국내외 난민 관련 뉴스·동향, 정책·지침, 심사·판결 등 정례 배포

###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 난민 실무 경험이 없는 직원 총 5명을 선발하여 난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론 교육 및 난민조사관의 전담 멘토 지도에 따른 심사·면접 등 실무 수습 프로그램 운영('22. 2.~7.)

-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주관으로 난민조사관에 대한 실무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난민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조사관 육성('22. 12.~'23. 1.)



UNHCR 한국대표부 방문 교육사진

- 2022년 우수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및 올해의 난민조사관을 선발하여 우수한 난민조사관을 격려함으로써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22. 12.)
- 체계적인 국가정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5천 4백만)으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2. 6.)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용역 수행('22. 12.)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무부의 주요 정책흐름 >

'18년

행 정 환 경

-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정 사회 기틀 마련 요구 증가
- ▶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주요선거 실시
- ▶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이나, 집회 중 일부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
-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및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요구 증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 마련, 경제 민주화 기반구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 운동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적발·엄정 처리
- ▶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존중문화 형성에 기여
-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 콘텐츠 개발, 수요처 발굴 등 법교육 인프라 강화

## 행정 환경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인권존중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 확산
- ▶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필요
- ▶ 전통적 이민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 차원에서 이민문화 개방 추진



##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범별 매뉴얼 확대, 개선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보호관찰 위원제 도입 등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 ▶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새정부 인권존중기조와 국정과제를 담은 국가인권정책방향 제시
- ▶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 계층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인권침해사건의 적정 처리 및 법무·검찰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
- ▶ 교정시설 확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 적극 추진 및 재범방지 전담기구·인력 지속 강화
-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높은 청년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적극적인 국민 일자리 보호 장치 필요

행정 환경

- ▶ 민생 중심의 법제개선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국제사회 정세 변화 등에 따른 선진적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
- ▶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및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 엄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국회통과, 공포
-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증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제도 및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및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한 공정사회 기틀 마련, ISDS 분쟁 예방 및 대응, 통일법제 마련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법무행정 추진
- ▶ 생활 속 적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 정의 실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임원 등의 선거개입, 사전선거운동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 ▶ 1:1 전자감독제도 시행, 범죄예방팀 확대, 경찰과 공조 강화,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개선 등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억제 강화

## 행정 환경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사회적 약자 구제·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인권존중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 확산
- ▶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필요
-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범부처 인구정책과 연계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사범별 매뉴얼 확대, 개선된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분류처우 회의 상설화 등을 통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 ▶ 인권정책 수립 입안·집행·환류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필요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인권침해사건의 적정처리 필요
- ▶ 교정시설 조성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정상추진하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전담기구 확대에 대한 공감 형성
-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외국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핵심적·구조적인 과제를 선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행정 환경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 인권 옹호·증진, 침해 구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수요 증가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고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교정시설 내 과밀로 인한 수용자 건강권 등 인권 침해 방지 및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 조치 한계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 주요 선거 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넘어 '인권의 주된 옹호자'로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 ▶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에 따른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보호관찰 개시 초기 주취·정신 질환 대상자를 조기 선별하여 적극적 치료 개입 실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 ▶ 과밀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등 적극 추진 필요

### 행정 환경

- ▶ 코로나19 해외 유입 억제를 위한 국경안전 보장과 함께 필수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 ▶ 조두순 출소 등을 앞두고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증가



###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감염 위험지역 출발하는 외국인 및 무비자 입국이 정지된 국가 국민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이용하여 탑승 차단, 재입국허가제와 비자 발급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출국은 제한하면서도 기업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은 지원하는 등 탄력적 비자정책 추진
  
- ▶ 1:1 전자감독제도 및 범죄예방팀 확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억제 강화

행정 환경

- ▶ '21. 4. 재·보궐 선거 실시
- ▶ 인권 옹호·증진, 침해 구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 강윤성 사건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사건으로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 요구 증가
- ▶ 아동학대·마약·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사범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 주요 선거 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인권과 질서가 조화되는 존중과 상생의 사회 구현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 공조 및 정보공유 강화, 1:1 전자감독 확대 등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도감독과 더불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여 재범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억제·관리

## 행정 환경

- ▶ 교정시설 내 과밀로 인한 수용자 건강권 등 인권 침해 방지 및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 조치 한계
- ▶ 외국인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지역사회 및 외국인보호시설)
- ▶ 국경개방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필요



##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과밀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등 적극 추진 필요
- ▶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계도활동 지속,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임시격리시설 마련, 임시직 간호사 채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
- ▶ 해외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자 발급 제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차단, 단기사증 무효화 조치 시행,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 정지(90개국)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행정 환경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이후 약 60여 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민의 불편 초래 및 국가 경제 피해 야기
- ▶ 건설현장에서의 채용강요·금품갈취 등 집단적 불법 행위 만연
- ▶ 다크웹, 보안메신저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확대, 마약가격 하락 등에 따라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
-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민생침해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 ▶ 조○○·박○○ 등 고위험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 증가



주요 법무정책 흐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실무가 등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연구·검토

- ▶ 이익관철을 위한 집단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법치주의 확립 필요
- ▶ 마약범죄 집중 단속,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필요
- ▶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고위험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추진

행정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li> <li>▶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필요성 인식 대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자 출소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 고조로 교정당국의 재범방지 대책 요구 증가</li> <li>▶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연령 인구 급감, 수도권·지방 격차에 따른 지방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의 경제 활력 저하 등 지역 소멸 위기 직면 등</li> <li>▶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가간 인적 이동 증가로 국내 외국인 유입 및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li> </ul>



주요 법무정책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마약·스토킹·아동학대 사범 등 생활밀접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상담·치료적 개입을 통한 재범방지 및 피해자 적극 보호</li> <li>▶ 범죄피해자,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분류심사, 심리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정정책 적극 추진</li> <li>▶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li> <li>▶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면서도 국경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지속 추진</li> </ul>

##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추진

- 국제인권기준,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새로운 인권수요를 반영한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 수립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
-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법률구조기구들의 연계·협력 및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연계 강화 추진
  - 법률구조 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여성·아동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추진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보건복지부 공동실시) 및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실무지침 및 실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아동·장애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배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을 통한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피해자 지원 신속성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실태조사,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및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수용공간 확충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향상

○ 교정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교정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법치를 훼손하는 집단적 이익관철 목적의 불법행위 근절

-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마약범죄 근절

-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검·경·세관 등이 참여하는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범죄 집중 단속 및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 조직적인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적극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병행

□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관행 근절,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절차 신속성·효율성 제고, 사경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제도 정비, 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력 실질화

## □ 미래변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제정 이후 약 60여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대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운영
- 디지털콘텐츠·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규정(디지털콘텐츠계약법), 누구나 인격적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민법에 명문화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및 관리·감독 통하여 우수 법조인력 양성 및 법치행정 강화 도모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제도 확대 운영 및 전국·지역 단위 홍보를 통한 마을변호사제도 접근성 강화

##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공증제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사용자 경험에 관한 의견취합 및 개선점 반영 통해 전자공증 이용을 활성화
- 정기적인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예방사법으로서의 공증 기능 강화
- 공증사무소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는 등 공증사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9988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지원 서비스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변호사비용 지원 등 확대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서비스 안정화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변호사시험 답안작성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 IT 기술을 통한 응시자·시험위원·교수 편익 증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시험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에 기여
- '23년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성 검증을 거쳐 '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도입·실시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업 등을 통해 CBT 시험장 시설 구축 등

□ 고위험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로 국민안전 강화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및 재범방지 대책 강화
  -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추진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밀접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 실시

- 최근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방안 추진

## □ 다양한 교정정책 추진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살인, 성폭력 등 재범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등 집중처우를 위한 기능적 분류체계 강화
  - 분류센터의 고위험군 정밀분류심사 대상자 확대 및 전문심리검사, 심층상담 강화를 통한 재범위험성 관리시스템 마련
-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고위험 성범죄,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의 민생 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격·제한 심사
  - 환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형집행법이 '특별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극 심사로 모범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 전문인력을 통한 심층면접관 제도 지속 추진으로 수형자의 범인성 개선정도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 ○ 국가적 산업인력 부족 상황에 외부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교도작업을 통하여 인력 지원 및 출소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 ○ 수형자 교정교육 등 처우 강화

- 수도권 내 학과교육 특화 '소년 전담 교정시설' 운영

※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된 '소년수형자 교육 전담팀' 운영

- 교정공무원 '교정교육 전문 강사' 양성, 수용자 교육 질적 향상 도모
- 수용자 감사습관 조성을 위한 집중인성교육 시행 등 지속 추진
  -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수용자 감사나눔 운동' 전개, 감사의 생활화·습관화 유도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체제 마련, 원격의료 협력병원 및 진료과목 확대,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용자 건강권 증진
-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 도모
- 심리치료를 전문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폭력·스토킹·가정 폭력사범 등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수준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성향 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부처별 개별 정책 시행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 결정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
- 농어촌과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정비, 4차 산업시대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의 유치 지원 방안 마련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치안 불안감과 갈등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노력  
지속

-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되는 난민 정책을 추진하고 개방형 보호  
시설 확대 등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등을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II

##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 법무부 일반현황

#### (1) 조 직

○ 본부 : 2실 3국 2본부 11관 56과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소속기관

구 분	조 직	기관수
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찰청 1</li> <li>● 고등검찰청 6</li> <li>● 지방검찰청 18, 지청 42</li> </ul>	67
범죄예방 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보호관찰(지)소 58</li> <li>●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비행예방센터 18</li> <li>●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위치추적관제센터 2</li> </ul>	97
인권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li> </ul>	1
교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정청 4</li> <li>● 교도소 39</li> <li>● 구치소 12</li> <li>● 지소 3</li> </ul>	58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3</li> <li>● 외국인보호소 2</li> <li>●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1</li> </ul>	46
법무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연수원 1, 용인분원 1</li> </ul>	2
계		271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소속 특수법인 3개



## (2) 인 원

(2023. 2. 28.)

구 분	총계	정무직	검사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가급)	6급	7급 (나급)	8급	9급 (다급)
총계	33,216	2	2,102	64	45	339.5	204.5	1,409.5	6,296	10,026.5	5,895	6,832
정무·행정직	187	2		1	4	7	14	37	52	52	12	6
검사	2,102		2,102									
검찰직	6,363			25	17	119	77	506	1574	1971	1166	908
보호직	2,680.5			6	7	54	21	252	468	698	680	494.5
교정직	14,966			18	7	61	39	347	3364	5806	2851	2473
출입국관리직	2,539			4	4	30	7	146	458	712	679	499
의무직	108.5			2	4	61.5	22.5	18.5	0	0	0	0
간호직	327.5			0	0	1	0	3	77	129.5	117	0
시설직	189			0	0	1	3	12	48	40	54	31
전산직	344			0	0	2	4	26	78	87	89	58
기술직 기타	1,345			0	0	0	0	18	92	290	229	716
관리운영직	1,547								16	73	9	1449
별정직	0											
전문경력관	167							10		154		3
기타	350.5			8	2	3	17	34	69	14	9	194.5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	'23	'24	'25	'26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1,746	42,311	44,464	46,212	47,961
(전년대비증가율, %)	2.87	1.35	5.09	3.93	3.78
○ 총계	43,410	44,108	46,886	48,751	50,667
(전년대비증가율, %)	2.44	1.61	6.30	3.98	3.9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4,756	25,352	27,127	29,026	31,058
(전년대비증가율, %)	1.01	2.41	7.00	7.00	7.00
○ 기본경비	1,537	1,556	1,605	1,653	1,702
(전년대비증가율, %)	0.33	1.24	3.15	2.99	2.96
○ 주요사업비	15,454	15,402	15,732	15,533	15,200
(전년대비증가율, %)	6.26	△0.34	2.14	△1.26	△2.14
□ 예산					
○ 총지출	40,920	41,484	43,650	45,398	47,146
(전년대비증가율, %)	3.52	1.38	5.22	4.00	3.85
○ 총계	42,409	42,975	45,423	47,142	48,910
(전년대비증가율, %)	2.74	1.33	5.70	3.78	3.75
【일반회계】					
· 총지출	40,251	40,818	42,985	44,732	46,481
(전년대비증가율, %)	3.65	1.41	5.31	4.06	3.91
· 총계	41,193	41,760	44,122	45,674	47,423
(전년대비증가율, %)	3.26	1.38	5.66	3.52	3.83
【교도작업특별회계】					
· 총지출	669	666	665	666	666
(전년대비증가율, %)	△3.88	△0.45	△0.15	0.15	-
· 총계	1,216	1,215	1,301	1,468	1,487
(전년대비증가율, %)	△12.14	△0.08	7.08	12.84	1.29

구 분	'22	'23	'24	'25	'26
□ 기금					
○ 총지출	827	827	814	814	814
(전년대비증가율, %)	△21.46	-	△1.57	-	-
○ 총계	1,001	1,133	1,463	1,609	1,757
(전년대비증가율, %)	△9.00	13.19	29.13	9.98	9.20
<b>【범죄피해자보호기금】</b>					
· 총지출	827	827	814	814	814
(전년대비증가율, %)	△21.46	-	△1.57	-	-
· 총계	1,001	1,133	1,463	1,609	1,757
(전년대비증가율, %)	△9.00	13.19	29.13	9.98	9.20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핵심내용)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임무와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개 성과목표와 48개 관리과제를 설정
-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 존중)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지원체계' 및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 마약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민법 개정,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남북 및 국제관계 법률업무, 전자공증,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관리 및 감독, 첨단기술을 활용목한 전자감독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집중관리와 다양한 교정정책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 추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위한 적극적인 비자·체류정책 추진,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전자여행허가제 다국어 입력 서비스 제공 등 출입국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 등으로 국경관리 및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국민공감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난민제도를 추진하여 사회통합 촉진

## □ '23년 정책 여건 분석

-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행정 필요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및 법률구조 서비스의 분산 운영에 따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조직적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제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엄정 대응 필요
- 인터넷 비대면 거래 확대, 마약가격 하락 등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범죄 집중 단속,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필요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에서의 채용강요·갈취 등 특정집단의 이익달성을 위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국가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대응 필요
- 제정 이후 약 60여 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대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운영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복합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 증가

-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실효적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성폭력·아동학대·마약·스토킹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증대
-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 증대
  -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뿐만 아니라 출소 전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범위험성 완화 필요성 대두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마련 요구
  -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재범방지 대책마련 요구 증가
- 코로나19 완화 이후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소 후 생계형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자 취업역량 강화 필요
- 교정 민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교정시설의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개선
-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감소에 직면하며 2020년 사상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 30만 5천 명 > 출생아수 27만 2천 명) 발생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망

-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거주 인구가 50%를 넘어서며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이는 지방 경제 활력 저하로 귀결
  - ※ 2021년 229개 중 108개(47.2%)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며,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것(국회입법조사처, 감사원, 2021)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유입의 중단으로 업종과 급여 수준을 불문하고 인력난 확산
  - ※ 부족인원은 2012년 30.3만 명에서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42.6만 명까지 증가(고용노동부, 2022)
- 불법체류자수 증가(41만명, 체류외국인 전체의 20%),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 증가
- 이민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한 반면, 이민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
- 각국의 코로나19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국가간 인적이동 증가 및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 분쟁, 내전, 쿠데타, 대규모 시민저항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지속

## □ 계획의 수립 주안점

-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관리과제에 충실히 반영
- 계획 수립 시 실·국·본부 조직 구성원,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
- 수립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실·국·본부별 구성) 과제 설명회는 대면 혹은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시행

- 성과관리계획 목표체계상 최상위 개념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와 하위 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과제를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목표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대표성을 강화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법집행 관련 정책특성상 지표 및 목표 설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 성과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대표성 있는 결과지향적 지표와 더불어 과제 추진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보완하여 반영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 존중

□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법무행정 인권 모니터링 실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 추진
- 법무행정 관련 신속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구제제도 운영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방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범죄피해자가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형사절차상 인권 보호 강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기능 강화,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 확립**

-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및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사범 등 처벌 강화
- 부처·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마약 범죄 집중 단속,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집단적 이익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비타협 원칙하에 엄정 대응
-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국외도피사범 집중 송환 추진
-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 운영**

- 지난 60여년 간의 사회·경제적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고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운영
-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확대하고,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위 변호사 제재를 강화하며, 지방소도시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하고 선진화된 공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세대전자공증시스템 구축
- 국제 민·상사규범 및 통상 협상 참여, 체결된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등 국제민사사법 공조 업무 수행,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정비 지원 등 법률 ODA 사업 추진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효율적 대응 · 체계적 예방 교육 및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국고손실 환수송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패·비리로 발생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변화된 송무환경에 효율적 · 통일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송무제도 운영으로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행정 실현
- 9988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와 창업 지원 법률정보 제공
- 남북교류협력 · 통일 법제 연구 및 선제적 정비를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변호사시험 답안작성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시행 지속 추진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 구축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군 전담체계 확대, 강력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신속수사팀 역량 제고, 전자장치 성능개선 등 훼손 방지 시스템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및 다수 시민과 접촉 가능성 있는 업종의 취업제한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추진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 범죄예방 주요 정책 등을 국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체감도 향상 추진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 소년원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및 친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통해 교정교육 효과성을 제고,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총원, 간호인력 총원 등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등 치료환경 개선 및 피치료감호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폭력·마약·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생활밀접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의 밀착 관리·감독 및 전문 처우프로그램 실시 등 보다 강화된 예방 대책 수립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 □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여 수용자 인권 처우 개선
- △자문위원회 운영 △홍보 브로슈어 제작 △충혼탑 건립 등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향상시키고,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정책 추진 지원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정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접견 시스템 구축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개선으로 더 나은 대국민 교정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재범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인별 집중처우로 범인성을 완화하고, 재범위험성 등의 면밀한 평가 후 가석방 실시로 재범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
-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익히고, 교도작업을 통한 정역집행으로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취업알선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수도권 내 학과교육 특화 소년 전담 교정시설 운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준법 인성교육 도입 등 다양한 수형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접견 및 가족만남의 집 등 사회적 처우 확대 실시로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범죄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처우계획 수립, 교육·심리치료 등 집중처우로 재범위험성 관리
- 원격진료 확대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교체 등을 통해 수용자 건강권을 증진하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건강검진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예방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마약류사범에 대한 각 부처별 업무연계와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교정본부 내 집중적인 중독치료·재활시스템 운영 등 기반 여건을 마련하여 수형자의 재범 억제력 강화
-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 해소

###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 추진

####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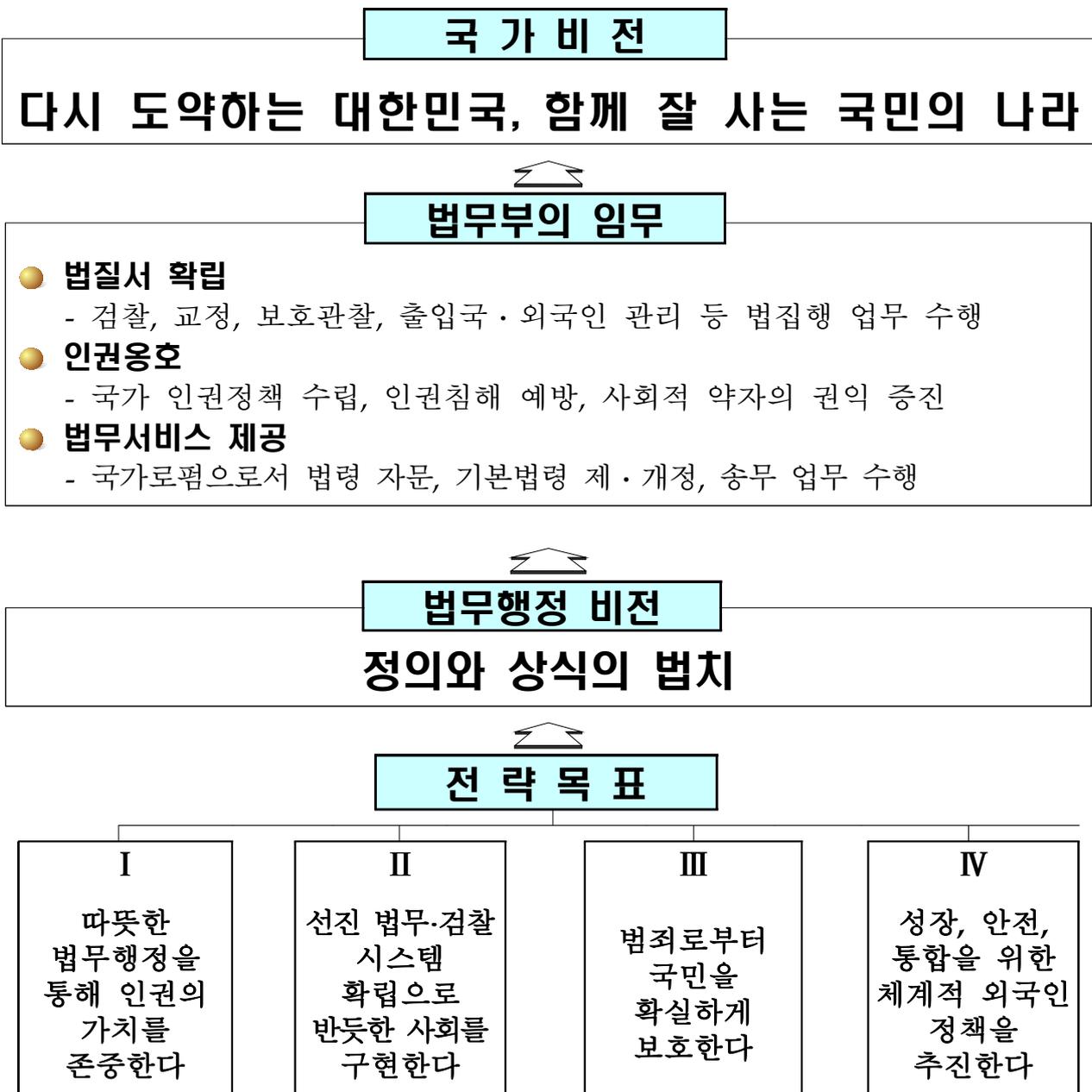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출입국심사 제도 마련과 더불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 및 감시정 활용 등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실현
-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비자·체류 정책 추진
- 엄정한 일관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 친화적인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강화
-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서비스 기반 구축 및 이민 행정정보의 대·내외 기관 간 공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관리 체계를 갖추어 과학적·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 내·외국인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로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이민행정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미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정책 추진
-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기반 마련,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국민·이민자 상생을 위한 상호문화 이해 증진,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정책 거버넌스 구축
-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난민인정자 등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및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마련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및 자문위원단을 개편하고, 지침·예규·메뉴얼 등의 제·개정,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알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

##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가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분석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임무와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8개 성과목표 및 48개 관리과제 설정



## 전략목표

## 성과목표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을 향상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 독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III.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3	48	89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b>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b>		
I-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업무(5-4)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국정(63-1, 63-3, 63-4, 64-3, 64-4) 업무(1-3, 3-1)
I-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국정(64-1, 64-2, 64-5)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국정(63-1) 업무(5-1)
<b>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b>		
II-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국정(4-1, 4-2)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국정(63-5)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업무(1-2)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국정(4-3) 업무(3-2)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국정(63-1)
	⑥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업무(3-1)
	⑦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⑧ 부패대응 공백 방지	국정(4-4) 업무(3-2)
II-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업무(4-1)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업무(4-3)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국정(99-2)
	⑤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강화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 철저 환수	업무(3-1)
	⑦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⑩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업무(4-3)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b>III.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b>		
III-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li> <li>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li> <li>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li> <li>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li> <li>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li> <li>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li> <li>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63-2) 업무(1-1)</li> <li></li> <li>업무(1-2)</li> <li></li> <li></li> <li></li> <li></li> </ul>
III-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li> <li>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li> <li>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li> <li>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li> <li>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48-5) 업무(5-3)</li> <li></li> <li></li> <li>국정(63-2)</li> <li></li> </ul>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기조 연계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업무(5-3)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업무(5-3)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업무(1-2)
<b>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b>		
IV-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국정(48-6) 업무(2-2, 5-2)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국정(72-3)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 시설 환경 개선	국정(48-6) 업무(2-3, 5-2)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 행정서비스 제공	국정(48-6) 업무(2-3)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 역량 강화	국정핵심과제29
IV-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업무(2-1)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국정핵심과제29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국정(48-6) 업무(2-1)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국정(48-6)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국정(48-6)



### **Ⅲ. 세부 추진계획**



### III

## 세부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 기 본 방 향

-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심의 및 진정 접수 등 적극 대응 및 국제 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 강화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국제기준 및 새로운 인권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 인권 모니터링 제도 도입·운영으로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강화 및 법무부 행정 공무원 직렬별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인권교육 강화로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형사법령 제·개정 추진 및 관련 입법 논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접근성 향상을 통한 법률복지 실현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강화를 통해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기능 강화,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3	5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li> </ul>
I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만족도(점수)</li> </ul>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활동(점수)</li> </ul>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활동실적(점수)</li> <li>▪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li> </ul>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 사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li> </ul>
I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서비스 수혜자 수(명)</li> <li>▪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수)</li> </ul>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점수)</li> <li>▪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li> <li>▪ 법률상담터 만족도(점수)</li> </ul>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명)</li> <li>▪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형사사법절차 지원 실적(건)</li> </ul>

(1) 주요내용

□ 인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인권수준 향상

-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위 및 중앙·지방정부 인권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국가인권위 원 회 권 고 수용률 (%)	93.1	80.0	96.7	93.9	92.2	93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인 91.2%를 감안하여 '27년에는 93%를 목표로 설정	인권위 권고 건수 ÷ 법무부 수용 건수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국가인권위 확인

## (1) 주요내용

##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새로운 인권 수요 및 정부의 인권정책 기초를 반영한 범정부적·종합적 인권정책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년) 수립
- 인권옹호 총괄부처로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등 국제인권활동을 활발히 진행

## □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확대, 화상조사시스템 확대설치,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전파,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추진
  - ※ 실태조사 대상기관이 145개로 기존 정기실태조사로는 3-4년마다 1회씩 일률적·일반적 점검으로 진행되어 사전 예방기능보다 사후 점검 위주로 변질되어 높아지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방식 도입 추진
-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직렬별 내부 인권강사가 직렬 특징에 맞게 인권 감수성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강사 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
-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정비를 통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인 권 교 육 만 족 도 ( 점 수 )	-	신규	83	85	○ '21. 정책 연구 용역 실시한 ('인권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2~'23 교육 과정 개편, 신규 교육콘텐츠 및 교재개발을 통한 내부강사 역량강화 및 신규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를 산출하였음	○ 인권감수성교육 종료 후 조사한 개 인 별 교 육 만 족 도 점 수 의 합 ÷ 교육자 총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내 인권정책 총괄부처로서 정부의 인권정책 역량 제고 위해 인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 강화

- 유엔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내 정책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

#### □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신고 사건 직접조사는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므로 원거리 수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근거리 수용시설의 경우 인권침해사건 진정인에 대한 방문조사, 원거리 수용시설은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접조사 강화 필요
- 인권환경 개선 미흡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여성·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인권 취약계층을 위해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요구됨
  - 취약계층 대상 면담 확대, 다수 미흡 사례 지적 기관에 대한 개선 여부 재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우수기관 선정 포상 등 내실 있는 실태조사 강화 필요

#### □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형사법령 제·개정 시 사회 각계각층의 대립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I-1-①)

#### □ 추진배경

- 소극적 인권침해 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던 정부 주도 인권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적극적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필요
- 또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인권기구·시민사회·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며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권거버넌스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평가보고서의 국가인권정책 협의회 안전 보고를 통해 실적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제3차 NAP 종료('22.)에 따라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와 국제기준 및 새로운 인권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주요 해외 국가들의 인권실사 법제화에 따라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기업 인식 개선
  - ※ 연중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홈페이지 링크를 관련 협회, 기관 등에 홍보 예정
- 법무행정 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 정책 수립에 대한 인권적 접근 강화
  - ※ 모니터링 대상 : 3차 NAP 272개 과제 중 법무부 소관 50개 과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사항 이행을 위한 제·개정 법령 및 제도, 정책
- 유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대응 및 후속 조치
  - 권고에 대한 정부의 최종견해가 담긴 의견서 제출에 앞서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 ※ 본 정부 의견서는 제53회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 예정('23. 6.)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 사회권 규약 주요 쟁점 관련 연구용역 실시
    - ※ '23. 10.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보고서 제출 기한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보완보고서 제출 및 심의 준비
  -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증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
    - ※ '23. 10.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보고서 심의 진행 예정
-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3. 1.가입) 최초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국가보고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작성 전략 수립
    - ※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25. 2.)
- 인권정책 방향 모색,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참여 절차 강화
  - 국제인권규약 국가보고서 제출 전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강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제4차 NAP 수립 등 주요 인권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활성화
- 유엔 인권상황 관련 서한 질의·개인진정 답변, 국제인권조약 국가 보고서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방문조사 대응
- ‘인권의 주류화’ 관점에서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인권 관점 의견 적극 제시, 인권 카드뉴스 등 발간 및 배포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대응	1~2월	
2/4분기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5~7월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관계부처 실무회의	6~8월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4차 심의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개최	5월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4차 정부 의견서 제출	6월	
3/4분기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분야별 시민사회 간담회 실시	7~9월	
	○ 사회권규약 주요 쟁점 관련 연구용역 실시	7~12월	
	○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실시	8~9월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관련 질의 대응	9~12월	
4/4분기	○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10월	
	○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10~11월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발표 및 시행	10~12월	
연중	○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보고서 연구용역 실시	연중	
	○ 부내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NAP 및 인권위 권고 관련)	연중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국제 인권상황 질의 대응	연중	
	○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등 발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인권정책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

## □ 기대효과

-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 및 법제를 구축하고,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인권 선도 국가로 발돋움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 활동(점수)	146	183	194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 산출근거</li> <li>- 시민사회 참여 간담회: 연 12회 (전년 6회)</li> <li>- 법무행정인권모니터링 실시: 연 10회 (전년 9회)</li> <li>-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36건</li> <li>- 부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11건 (전년 10건)</li> <li>- 법령 검토의견 제시: 20건 (전년 19건)</li> <li>- 유엔 결의안 등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 15건 (전년 14건)</li> <li>- 국제인권관련 회의참석: 11회(전년 11회)</li> <li>-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인권정책 관련 발간물 등 발간 5건 (전년 5건)</li> <li>※ 국내, 국제 인권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활동의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금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추세 평균 15.68%에 10%를 상향한 17.25%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실적×가중치</li> <li>- (시민사회간담회) 횟수 × 4</li> <li>- (인권모니터링) 횟수 × 4</li> <li>- (인권정책의견제시) 횟수 = (부내정책의견제시) 횟수 × 2 + (법률안의견제시) 횟수 × 2 +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횟수 × 2</li> <li>- (국제인권관련 회의 참석) 횟수 × 3</li> <li>- (카드뉴스, 발간물 등 발간) 건 × 3</li> </ul>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등

##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I -1-②)

### □ 추진배경

-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체 조사·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정기 실태조사 대상기관 및 점검항목 확대

##### - '23년 총 32개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교정시설 11개소, 검찰청 구치감 7개소, 외국인보호시설 8개소, 소년보호시설 6개소로 '22년(24개소)보다 33% 상향하여 실시

##### - '현장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내용, 수용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과거 실태조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기관의 인권 취약분야를 파악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대상기관별 중점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용자 심층 면담 및 철저한 시설점검 실시

##### - '인권보호제도' 이행 점검 실시 : 구금·보호시설 내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 설문지에 인권보호제도 관련 설문 항목을 추가하고,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 기관에서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이행 권고 예정으로, 향후 인권침해 이슈, 인권침해 신고사건 분석 등을 기초로 시스템 점검 항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예)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상 수용자 폭행 사고 예방 위한 수용자 교육, 직원 교육, 정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설문지에 교육, 정기 설문조사 실시 여부 항목 추가, 관련 공문 등 확인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시행

- '21년 신규 도입한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시행 결과, 해당 시설의 관련 진정 사건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집중점검 주제를 선정하고, 다수 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시행

▶ 교정기관 내 수용자 간 폭행사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22.12.)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신속 구제기능 확보

- 화상조사시스템 구축하여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확대 등을 통한 인권침해사건 신속 조사·구제 강화

구분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사건접수	직접조사	화상조사
2010년	8개소	1,023	370	98
2021년	57개소	4,062	2,622	771
2022년	63개소	4,002	2,584	904

※ '22.까지 준교정기관(54개소) 등 63개소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하여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직접조사 확대(미설치 7개 기관에 대해 순차 설치 진행 중)

- **중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대응** : 신속대응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한 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중심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사고 발생 원인 분석, 언론제기 의혹 확인 및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 구비 등 개선방안 마련 권고('22. 2.)

-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서 발간 및 배포 : 매년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분석하여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

○ 인권교육 실시

- '21. 정책연구용역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2.~'23.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신규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인권감수성훈련 교재 개편에 따라 교육 연속성 유지를 위한 내부강사 역량강화 교육 및 강사 퇴직 등 직렬별 강사 인력풀 축소 대비 신규강사 양성 강화 추진

○ 인권보호상황평가 실시

- 법무부산하 197개 기관에 대해 연 2회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실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3월
	○ '22년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 실시	
	○ '22년 하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 '22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 '23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계획수립	
2/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4~6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3/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7~9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23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4/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0~12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구금·보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수용되었던 사람 및 그 가족,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소속 직원

□ 기대효과

-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법무행정 수  
행과정의 인권보호 증진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 조사 및 효과적인 구제기능 확보  
로 법무행정 전반의 인권보호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실태조사 활동 실적(접수)	2,092	1,060	1,207	1,328	- 코로나19로 축소된 정기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전년 24개기관에서 3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사후적 구제 중심에서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의 인착을 위해 지속시행  - 인력을 추가 확보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대비 33% 확대하고, 주제별·집중 실태조사까지 실시하는 등 전년실적 대비 10%를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설정	(정기 실태조사 기관수×7)+(주제별·집중 실태조사 기관수×21)+(개선조치 요구건수×4) +(설문조사인원×0.2) +(면담인원×1) +(보고서작성×2)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보고서작성×10)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 (주제별·집중실태조사의 업무난이도, 소요인력,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산식을 보정하였음)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2,210	2,621	2,584	2,595	-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홍보 강화 등으로 인권침해사건 접수건수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 신고 내용 특성상 해당 본부에서 처리함이 적절한 사건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직접조사 건수의 증감은 인권침해사건 접수 건수의 증감에 직접 연동되는데, '22 12 기준 인권침해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5% 감소  - '23년 인권침해사건 예상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3,942건이며, 전년과 같이 직접조사를 하게되면, 직접조사건수는 2,545건 가량이나,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직접조사 건수를 전년대비 2% 상향하여 2,595건으로 목표설정  -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대비 33% 확대하고, 주제별·집중실태조사까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사건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인 권 침 해 사 건 직접조사 건수	인권침해사건 시스템 통계자료

###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I-1-③)

#### □ 추진배경

- 사회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 ※ '22. 6. 29. 국회제출
  -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 ※ '22. 10. 21. 입법예고, '23. 2. 15. 국회제출
  - 국회 계류 중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지원 등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확대 여부 검토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 ※ '22. 12. 28. 국회제출
  - 주취범죄 엄정대응 관련 연구용역 결과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형사법령 검토·정비

-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 '22. 12. 21. 입법예고, '23. 2. 23. 국회제출

-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위증죄 법정형 개선 등 검토
-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검토 및 정비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21. 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 등 국회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 지원

○ 주요 추진 법안 대응 철저

-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등 유관기관 적극 설득

○ 학계 등과 소통 및 협력 강화

- 형사법 관련 학회에 적극 참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 과제 추진 등 교류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등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관련 입법 개선	1~3월	
	○ 촉법소년 관련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방안 검토	1~3월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형사법령 검토·정비	1~3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1~3월	
2/4분기	○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등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관련 입법 개선	4~6월	
	○ 촉법소년 관련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방안 검토	4~6월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형사법령 검토·정비	4~6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4~6월	
3/4분기	○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등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관련 입법 개선	7~9월	
	○ 촉법소년 관련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방안 검토	7~9월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형사법령 검토·정비	7~9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7~9월	
4/4분기	○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등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관련 입법 개선	10~12월	
	○ 촉법소년 관련 「소년법」,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통과 추진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방안 검토	10~12월	
	○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위한 형사법령 검토·정비	10~12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피해자, 피의자 등 형사사범 관련자를 포함한 국민
- (이해관계집단) 형사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국회, 학계, 법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교정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등

□ 기대효과

-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형사사법체계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	59	58	47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간 실적이 하향 추세인 점, 법령 제·개정 실적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영향이 큰 점 등을 함께 고려, 기계적인 목표 상향 지양</li> <li>○ 형사관계 법령 및 제도 마련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 및 법령 마련 건수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인 46건 보다 약 5% 상향한 48건으로 설정</li> </ul>	법령안 제·개정검토 및 제출·공포·시행(건수), 학술대회·세미나 참가 및 개최(건수), 공청회 참가 및 개최(건수), 연구 용역 발주(건수), 책자발간(건수), 보도 자료 배포(건수) 등 합산	법령안 제·개정 검토 및 제출·공포·시행 근거자료, 학술대회 및 공청회 참가 및 개최 자료, 연구용역 발주서, 책자발간 공문, 보도자료 등

## (1) 주요내용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검찰·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체계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인권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전문성 제고 및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배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교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교육 등을 통해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명)(공통)	1,514,474	1,414,269	1,306,307	1,476,334	①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수는 지속적 감소 추세인 점*과 ②2023년부터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이관되어 법률구조 실적에서 제외됨으로 높은 실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3년 평균 실적치에 5% 가산**하는 수준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시행의 영향으로 기존 민사법률구조의 절반 이상 차지하던 임금채불근로자 법률구조 사건 감소 ** 민가사 등 법률구조는 측정산식에 따라 3년 평균실적치 x 5년 평균 승소율로 설정 ※2023년 성과계획서상 목표와 일치	당해연도 법률상담+민·가사등법률구조(단, 본안사건 승소율 적용)+형사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상담소 및 상담원 월별통계 보고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수)	29.5	26	17.5	30.5	○인권관련 법령·제도는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목표치 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므로 '22년 다소 하향된 실적을 일부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 목표치(30.5)로 설정	(제도개선건수(건당 1점) + 법률안 및 정책관련 의견제시 건수(건당 0.5점) + 법령 제·개정 건수(건당 2점))	의견제시 공문, 개선 법령·제도 관련 공문 등의 자료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감호위탁 활성화 추진 관련, 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담인력 확대 배치 및 진술조력인의 상근 배치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활성화를 위해 여가부(해바라기센터 관리), 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형성 필요

#### (4) 기 타

##### 관련 기관 및 주요 사이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이크로페이지([www.범죄피해.com](http://www.범죄피해.com))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www.kcva.or.kr](http://www.kcva.or.kr))
- 스마일센터 대표 홈페이지([www.resmile.or.kr](http://www.resmile.or.kr))
- 법률홈닥터 대표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http://lawhomedoctor.moj.go.kr))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I-2-①)

#### □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개별적·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신속·편리하게 연계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 법무부(검찰청)·여가부·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편익 증진 필요성 제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추진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진행
-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일 공익신탁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옹호,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다링행사',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범죄피해자 작품 전시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개선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서비스 확대

-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연중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생업 종사 등으로 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법률상담 실시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운영매뉴얼 개정,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전국 스마일센터 장 회의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안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리플릿을 발간하여 정부부처부터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단체까지 배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	1월	
	○ 전국 스마일센터 권역별 간담회	1월~2월	
	○ 전세사기 피해자 출장 법률지원 등 실시	2월	
	○ 법률구조서비스 ISP 수립 회의	2월	
	○ 법률홈닥터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2월	
	○ 스마일센터 운영규정 및 매뉴얼 개정	3월	
2/4분기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ISP 수립 착수	4월	
	○ 스마일센터 지도·점검	5월	
	○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	6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포상계획 시행	6월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현장점검	6월	
3/4분기	○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실무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7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다량행사 개최	8월	
	○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실시	9월	
	○ 법률구조 제도 통합 홍보·안내 실시	9월	
	○ '법률홈닥터 실무수습 교육 매뉴얼' 편찬	9월	
4/4분기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11월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정부포상 수여	11월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마련	11월	
	○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 법률구조서비스 대상·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	12월	
	○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12월	
	○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12월	
	○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개최	12월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12월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기 지도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 및 그 가족
-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체계화로 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 피해자 지원 공백 해결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
- 사회적 취약계층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집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IV-1-일반재정⑤)				
①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1100, 1135)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59	341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300)			178	173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301)			46	32
▪ 범죄피해구조금(302)			105	100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306)			30	36
법률구조(IV-1-일반재정②)				
① 법률구조(1101, 1131)	일반회계		671	646
▪ 법률구조(300)			624	598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301)			47	48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점수)	90.6	90.8	91.0	90.8	-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점 이상 임계치에 올라와 만족도 상승이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도 목표와 동일한 90.8점을 목표치로 설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제 정책 체감도를 측정 (이전과 동일하게 중 사자 만족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과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 -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 정책수혜 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5점 척도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14,060 (신규)	14,134 (신규)	14,898 (신규)	15,386	- 최근 3년간 추세 평균이 2.97% 이므로 평가표상 적극적 목표 설정 기준을 고려하여 추세 평균에 10%를 상향한 3.27%를 전년도 실적에서 상향하여 목표 설정	- 사회적 취약계층(소 상공자영업자, 소년 소녀가장, 범죄피해 자, 장애인, 플랫폼 종 사자 등) 법률지원 건수의 총합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집계
법률홈닥터 만족도 (점수)	87.84 (신규)	87.8 (신규)	87.91 (신규)	88.0	- 최근 3년간 실적이 등락을 반복 하고 있으나 평가표상 적극적 목 표 설정 기준을 고려하여 전년도 보다 만족도 점수 0.1점 상향한 적극적 목표 설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 정책수혜 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 ~ 매우만족 5점 척도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

##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I -2-②)

### □ 추진배경

- (아동인권증진) 아동학대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아동인권 중심으로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진술조력인 지원)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 지원 요구 증가
  - ※ ('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후 신규 자격부여, ('14년~) 진술조력인 지원을 시작하여 '23. 2.까지 총 18,540건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절차 출석, 의견진술 등 형사절차 참여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 수요 증가
  - ※ ('1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23. 2.까지 총 237,184건 지원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복지부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아동인권 보호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배치로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지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 조사를 통한 여성·아동·장애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배정 및 용도지시	1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	2월	
	○ 아동인권증진 관련 연구용역 실시(1차)	3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검사) 교육	3월	
	○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	1~2월	
	○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1~3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	1~3월	
	○ 상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 실시	1~2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22년 하반기) 실시	1월	
2/4분기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수사관) 교육	4월	
	○ 감호위탁 실무지침 및 실행방안 마련	5월	
	○ 아동인권증진 홍보동영상 제작	5~6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마련	6월	
	○ '23년 진술조력인 신규 교육 대상자 서류 및 면접전형 실시	6월	
	○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6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장점검 실시	5~6월	
3/4분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상반기 실적 점검	7월	
	○ 아동인권증진 관련 연구용역 실시(2차)	7~9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8월	
	○ 감호위탁 시범 실시	9월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과정 실시	7~9월	
	○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7~9월	
	○ 하반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 실시	7~9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전문화교육 실시	7~9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23년 상반기) 실시	7월		
4/4분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하반기 실적 점검	10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10~12월	
	○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12월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10~11월	
	○ 진술조력인 자격부여	12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전문화교육 실시	10~12월	
	○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장점검 실시	10~12월	
	○ 아동학대 대응인력 법무부-보건복지부 합동 교육	연중	
○ 신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피해 아동이나, 아동이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유지·발전시키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증진 사업의 2차적 수혜자는 피해아동의 가족이며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민 전체임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이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현장 종사자 교육을 통한 피해아동 지원 실무역량 강화 및 사건관리회의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피해 최소화하고,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 추가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개선을 통해 선진적 아동인권 보호체계 구축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IV-1-일반재정(2))				
②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113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05 (80.0)	111 (105.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305)		92	97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300)		13	14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인원 (명)	331	215	411	510	○ 최근 3년간 평균 교육인원 319명보다 60%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한 사 이버 교육 실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 측정	아동학대 대응역 량 강화교육 결 과보고
성 폭 력 · 아 동 학대범죄 피해자 형사사법절차 지원 실 적 ( 건 ) ( 공 통 )	28,691	42,632	42,983	43,669	○ 최근 3개년 평균치인 33,012건 대비 3개년 연평균 증가율 24.0% 상회하는 30.0% 반영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건수 합산	진술조력 활동보고서, 검찰청 통계

기 본 방 향

□ 독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주가조작, 무자본 M&A, 가격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부당내부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중요 경제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마약범죄 및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성폭력,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불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여 법질서 확립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 · 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 제정 이후 약 60여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대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운영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 제도 구축을 위한 국가 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비위 변호사 엄중 제재,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등

## 기 본 방 향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공증제도개선위원회·연구용역 등을 통한 제도개선 의견의 발굴 및 법제화, 정기적인 공증사무소 관리감독을 통한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민·상사규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규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결된 협약의 국내적 시행을 통해 ‘민·상사규범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적극 추진하고, 법률 ODA 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하여 국격 제고에 기여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효율적 대응·체계적 예방 교육 및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체계적 수행으로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 운영에 기여
- 변화된 국가송무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소송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소송 송무 역량을 강화
- 9988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활성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의 원활한 창업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연구 및 남북교류협력 법제 선제적 정비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 변호사시험 답안작성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시행 지속 추진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18	3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li> </ul>
	II-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li> <li>▪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li> </ul>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li> </ul>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li> </ul>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사범 단속 및 치료재활 실적</li> </ul>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li> </ul>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li> </ul>
	⑥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 인원</li> <li>▪ 엄정대응 홍보 실적</li> <li>▪ 유관기관 간담회</li> </ul>
	⑦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공조 실적</li> <li>▪ 범죄수익 환수역량강화 실적</li> </ul>
	⑧ 부패대응 공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대응 공백 방지 제도개선</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li> <li>▪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li> </ul>
	①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개정 및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운영</li> </ul>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등</li> <li>▪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li> <li>▪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li> </ul>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li> </ul>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 도입</li> <li>▪ 법률 ODA</li> </ul>
	⑤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분쟁대응</li> <li>▪ 국제투자분쟁예방</li> <li>▪ ISDS 제도개선</li> <li>▪ 투자협정(FTA,BIT) 및 기타 국제분쟁법률 지원</li> </ul>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손실 환수 실적</li> <li>▪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li> </ul>
	⑦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실적</li> </ul>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건수</li> </ul>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 운영실적(점수)</li> <li>▪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수)</li> <li>▪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점수)</li> <li>▪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점수)</li> </ul>
	⑩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li> <li>▪ 변호사시험복수정답 인정률 2%이하 달성</li> </ul>

(1) 주요내용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확립

- 마약범죄 및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 민법 개정,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남북·국제관계 법률업무 등 법무행정 영역에서 미래지향적 법률개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범 도입 및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 전자공증,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친숙하고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56	52.5	62.5	65	미정	67.5	'22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치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26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의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상 검찰 신뢰도(4점 만점) × 25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자료(사회통합실태조사 상 '검찰 신뢰도'를 근거로 산정)

## (1) 주요내용

## □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 조직적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수사시스템을 지속 유지하여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적극 대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회계부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부당내부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 범죄수익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대상 자료 통보 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 및 불법행위 연루재산 환수 철저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수사·조사 협력체계를 통해 역외탈세·자료상 등 탈세사범 적극 대응

##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부처·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등을 활성화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 □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전담검사 지정·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 수사 전문화 교육, 여성·아동범죄 분야 전문검사 워크숍 등을 통한 수사 노하우 및 우수 수사사례 공유 등 수사 전문성 강화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 협업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 건설 현장 등에서 채용강요, 금품갈취 등 집단적 이익 목적으로 만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범집행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철저
-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범죄인인도, 범죄수익환수 관련 해외 공조담당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공조망 확충 노력 지속

□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수사·공판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형사절차 정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공통)	11.7	15.0	14.7	13%	○ 집행수사권 조정의 지속적 영향으로 '23년 전체 처분건수의 예측이 어려운 정책적 환경임 - 그럼에도 구공판 처리 건수가 약 157,000건, 처분건수는 약 1,174,000건으로 예측되는바 목표치를 13%로 설정	(구공판 건수 / 전체 처분 건수) X 100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및 검찰통계 시스템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공통)	76.85	76.58	79.3	80.12	○ 최근 3년간('20~'22) 평균 집행률(자유형 56.53%, 재산형 98.6%) 실적이 77.57%임에도 엄정한 형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23년도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7.57%) 보다 약 3% 상향('22. 4.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한 검거활동 강화로 자유형 5% 상향하여 61.53%, 재산형 0.1% 상향하여 98.7%)한 80.12%로 설정	(자유형 집행인원 / 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 건수 / 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및 검찰통계 시스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대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직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 단순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 전개
  -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계속 강화
-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주요한 구조적 비리에 대해 적극 수사 및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 범죄 등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대검·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범죄 수익을 적시에 보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

##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집중 단속
  - 검찰,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하여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등 합동 수사 전개
  - 전국 6대 권역에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국정원 등 간에 마약범죄 대응협의 등을 위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 □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학계, 대한변협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사준칙」 개정 방안 논의 및 유관기관 의견 조율
- 「수사준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행안부 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

##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최근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및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범죄 엄단 노력
  - 여성·아동분야 수사 전문화 교육 실시, 개정 수사매뉴얼 전파 및 적극 활용 등 수사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건설현장에서의 이익관철을 위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노사관계에서의 법치주의 확립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
- 고용부·행안부·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제도개선 병행

□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범집행

-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범죄인인도, 범죄수익환수 관련 해외 공조담당자들과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망 확충 노력 지속

□ 부패대응 공백 방지

- 형사법령의 정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각 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Ⅱ-1-①)

#### □ 추진배경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국회 논의 지원
-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대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범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검찰청법 관련 규정 개정(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의 지원	3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협의	3월	
2/4분기	○ 검찰청법 관련 규정 개정(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의 지원	6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협의	6월	
3/4분기	○ 검찰청법 관련 규정 개정(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의 지원	9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협의	9월	
4/4분기	○ 검찰청법 관련 규정 개정(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의 지원	12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협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피해자, 피의자 등 형사사범 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회, 행안부, 기재부 등

□ 기대효과

- 검찰청법 및 불합리한 직제 개정을 통해 효율적 범죄 대응 및 검찰의 중립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신규	100	100	○검찰이 할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시행 실적	○검찰청 직제 개정안 행안부 협의(30점) ○검찰청 직제 개정안 행안부 제출(40점) ○개정안 입법예고 (10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점) ○개정안 시행(10점)	검찰청 직제 개정안 협의 내용, 행안부 제출 자료, 개정안 시행 자료 등

## ②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Ⅱ-1-②)

### □ 추진배경

- 조직적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제범죄가 계속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엄정 대응 필요
-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왜곡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신속·효율적 수사 전개하고,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 집중 수사
  - 전국 7대 권역에 구축한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 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하고, 검찰·경찰·국토부 2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지속 실시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 등에 대한 강력한 합동수사 진행 및 말단 조직원이 아닌 조직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 검거에 주력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비리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직접수사 부서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범죄 엄단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당 내부거래, 입찰담합 등 집중 수사
  - 공정위와 정보공유·주요현안 협의 등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
-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탈세범죄 및 국가재정 비리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범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수사
  - 역외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협력 강화
- 검찰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 세탁범죄를 끝까지 추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1~3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1~3월	
	○ 공정거래사범협의회(실무협의회) 개최	1~3월	
	○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1~3월	
	○ 7대 권역 전세사기 대응 검·경 핫라인 구축	1~3월	
	○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1~3월	
	○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실무 개정판 집필	1~3월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수단 통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중점 단속	1~3월	
	○ 보이스피싱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해외거점 단속	1~3월	
2/4분기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4~6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4~6월	
	○ 검·경·국토부 2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지속 실시	4~6월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수단 통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중점 단속	4~6월	
	○ 보이스피싱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해외거점 단속	4~6월	
	○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양형기준 강화 안건' 양형위원회 상정	4~6월	
	○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실무 개정판 발간	4월	
	○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실무회의 참석(국조실 주관)	4월	
3/4분기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7~9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7~9월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수단 운영성과 분석 및 운영 연장여부 결정	7월	
4/4분기	○ 공정거래사범협의회(실무협의회) 개최	7~12월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10~12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제정의·공정사회 실현을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공정위·국토부 등

#### □ 기대효과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이상 유사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원칙이 바로 선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마련
- 대형 경제비리를 엄단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경제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점수)	96.5	104	107	88.9	<p>-주가조작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128명)을 목표치(5.1점)로 설정</p> <p>-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행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13건)을 목표치(4.3점)로 설정</p> <p>-조세포탈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79명)을 목표치(5점)로 설정</p> <p>※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 추세 반영</p> <p>-전세사기 단속 실적 : 1년 평균 단속 예상 명수(290명)를 목표치(33점)로 설정</p> <p>-보이스피싱 단속 실적 : 1년 평균 단속 예상 명수(570명)를 목표치(32.5점)로 설정</p> <p>-유관기관(국세청, 경찰, 국토부 등) 회의 개최수 : 연간 총 6회를 목표치(9점)로 설정</p> <p>※ 경제질서 저해사범(주가조작사범) 등 단속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단속원</td> <td>90명</td> <td>107명</td> <td>128명</td> <td>108명</td> </tr> </tbody> </table> <p>※ 중견기업 이상 기업비리 단속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단속건수</td> <td>5건</td> <td>7건</td> <td>27건</td> <td>13건</td> </tr> </tbody> </table> <p>※ 조세포탈사범 등 단속실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단속원</td> <td>112명</td> <td>45명</td> <td>80명</td> <td>79명</td> </tr> </tbody> </table> <p>※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해 단속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근본적 부패원인 발본색원에 주력(최근 3년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p> <p>※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관리대상 항목 추가(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합수단 실적이 취합되기 시작한 '22.8.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예상 단속 명수를 계산하여 목표치로 각 설정)</p>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원	90명	107명	128명	108명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건수	5건	7건	27건	13건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원	112명	45명	80명	79명	<p>-주가조작 단속실적 1명당 0.040점 부여</p> <p>-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행위 단속 1건당 0.33점 부여</p> <p>-조세포탈 범죄 단속 실적 1명당 0.063점 부여</p> <p>-전세사기 단속실적 1명당 0.114점 부여</p> <p>-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및 각 검찰청 단속실적 1명당 0.057점 부여</p> <p>-유관기관 회의 개최 횟수 1회당 1.5점 부여</p>	<p>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 형사1과, 마약 조직범죄과로부터 자료 취합</p>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원	90명	107명	128명	108명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건수	5건	7건	27건	13건																																	
년도	20년	21년	22년	평균																																	
단속원	112명	45명	80명	79명																																	

###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Ⅱ-1-③)

#### □ 추진배경

- '22년 마약사범은 총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여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마약류 압수량도 '17년 154.6kg에서 '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
- 최근 SNS 등 통신망의 발달,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수단의 다양화 및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 등에 기인하여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직장인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 확산
  -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17년 15.8%에서 '22년 34.2%로 불과 5년만에 2.4배로 증가하였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마약범죄 급증 우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 전국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검찰 69명[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검찰 마약수사관 54명(다크웹 수사팀 10명 포함)],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씩 합계 4명, 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출범('23. 2. 21.)
  - 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①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②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③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계획
-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23. 1. 현재 '인천, 수원,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주요 권역에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완료(서울지역 추가 구축 예정)

- 검찰, 경찰, 해경,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및 수사단서 제공 등 협업체계 구축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마약류 수사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범죄단서 정보 발굴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시 수사 환경 확립
-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
  - 다크웹 전담수사팀에 전담수사관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마약 유통사범 수사 전개,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 삭제·차단, 마약통제 정책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활용
-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 엄정처벌
  - 공공서비스 영역 종사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행정관리·조치 등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영역 종사자의 자격 여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처분 및 신고 결과 통보
  -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신 기소하는 방안 검토
-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UNODC, 미국·일본·ASEAN 국가 등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마약류 밀수출, 수입 범죄 적극 단속
- 검찰 단계별 치료·재활 기회 제공
  - 구속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 초범, 단순투약자 등 기소유예 대상자 상대로 중독 정도에 따라
    - ①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조건부, 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③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치료·재활 및 교육 실시
  - 불구속 구공판 대상자의 경우 ① 중독치료 의사 확인하여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를 받도록 하고 공판 단계에서 양형

에 반영, ②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치료명령·보호관찰이 부가되도록 적극 의견 개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검·군(軍)합동 마약범죄 수사실무 교육(법무연수원) 실시	3월	
	○ UN마약위원회(CND) 회의(오스트리아 빈) 참석	3월	
2/4분기	○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4~6월	
	○ 마약류 통제·정책 수립을 위한 「2022 마약류범죄 백서」 발간	4월	
	○ 마약수사 장비(영상감시 장비) 구매 및 배부	6월	
3/4분기	○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총회 개최	7~9월	
	○ 미국 마약단속국(DEA) 주관 국제마약회의 참가	7~9월	
	○ 한·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태국 마약청(ONCB) 소속 수사관 대검 파견 근무	9~12월	
4/4분기	○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시스템」 구축	10~12월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11월	
	○ UN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석	10~12월	
	○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집중 단속	연중	
	○ 일선 청(서울·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상시 운영	연중	
	○ 몽골 대상 마약퇴치 지원사업(ODA)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관세청,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 기대효과

-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인터넷 마약유통망의 와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억제 등
- 마약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마약사범 단속 실적 및 치료재활 인원 (점수)	- (101.2)	- (112.1)	신규 (125.7)	135 (60+75)	-마약사범 단속 실적 : 최근 5년간 평균실적(16,251명)의 120%인 19,501명을 목표치(60점)로 설정 -치료재활 인원 : 최근 5년간 평균 실적(1,124명)의 150%인 1,686명을 목표치(75점)로 설정 ※ '20. ~ '22 마약사범 및 치료재활 인원	-마약사범 325.0명당 1점 부여 * 총 인원 81,255명÷5 ⇒16,251명에 50점 부과하여 환산하면 325.0명당 1점 -치료재활 인원 22.5명당 1점 부여 * 총 인원 5,620명÷5 ⇒1,124명에 50점 부과하여 환산하면 22.5명당 1점	일선청 단속 및 처분 실적 취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th> <th>'21</th> <th>'22</th> </tr> </thead> <tbody> <tr> <td>마약사범(명)</td> <td>18,050 (55.5)</td> <td>16,153 (49.7)</td> <td>18,395 (56.6)</td> </tr> <tr> <td>치료재활(명)</td> <td>1,029 (45.7)</td> <td>1,403 (62.4)</td> <td>1,554 (69.1)</td> </tr> </tbody> </table>	구분	'20	'21	'22	마약사범(명)	18,050 (55.5)	16,153 (49.7)	18,395 (56.6)	치료재활(명)	1,029 (45.7)	1,403 (62.4)	1,554 (69.1)		
구분	'20	'21	'22																
마약사범(명)	18,050 (55.5)	16,153 (49.7)	18,395 (56.6)																
치료재활(명)	1,029 (45.7)	1,403 (62.4)	1,554 (69.1)																

#### 4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Ⅱ-1-④)

##### □ 추진배경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경의 송치·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범위 등 제한
  - 직접 수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수사 비효율 사례 증가
  - 사경 송치사건 보완수사절차로 인한 수사 지연
  - 사경 불송치 송부 사건의 부실처리 우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책임있게 수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관행 근절
  -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절차 신속성·효율성 제고
  - 사경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제도 정비
  - 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력 실질화
-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행안부 협의 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 계속 진행
  - 법무부 주관 전문가 자문기구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준칙」 개정 초안 마련하여 현재 행안부 협의 중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수사준칙 개정안 행안부 협의	3월	
	○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3월	
2/4분기	○ 국무회의 의결	5월	
	○ 개정 수사준칙 시행	6월	
3/4분기	○ 개정 수사준칙 시행 경과 모니터링	7~9월	
4/4분기	○ 개정 수사준칙 시행 경과 모니터링	10~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검·경의 신속·효율적인 수사를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대검, 경찰, 해경, 행안부 등

#### □ 기대효과

- 검·경 수사 책임소재 명확화
- 수사지연 및 부실수사를 방지
-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책 임 수 사 시스템정비	-	신규	70	100	○ 22년도에 '감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구성·운영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 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초안 마련하였음 ○ 22년도 추진 실적의 후속 절차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한 행안부 협의,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시행을 목표치로 설정	○ 수사준칙 개정 초안 행안부 협의 (30점) ○ 수사준칙 입법예고 (30점) ○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40점)	행안부 협의 자료, 수사준칙 개정안 등

##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Ⅱ-1-⑤)

### □ 추진배경

-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은 상황



-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검사 지정을 통해 형사처분·피해자지원 등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책임수사 전개, 전담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 11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여 각 청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 전문 대응체계 내실화
  - 주요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 계속 추진
- 여성·아동대상 범죄 수사실무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범

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처리기준, 성범죄 관련 검찰사건처리기준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관련 범죄 업정 대응
- 성폭력 수사매뉴얼('21. 12. 개정), 아동학대 수사매뉴얼('21. 12. 제정)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22. 4. 제정) 등 여성·아동범죄 관련 수사매뉴얼 적극 활용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입체적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1월	
	○ 전국 청 여성·아동대상범죄 전담검사 지정현황 점검 등 전담 대응체계 점검 실시(상반기)	2월	
	○ 아동학대·성폭력 전담검사 역량강화 교육	3월	
2/4분기	○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상반기)	4월	
	○ 디지털성범죄 업정 대응을 위한 전담검사 세미나 개최	6월	
3/4분기	○ 전국청 여성·아동대상범죄 전담검사 지정현황 점검 등 전담 대응체계 점검 실시(하반기)	8월	
	○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하반기)	9월	
4/4분기	○ 전국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 개최	10월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11월	
	○ 유관기관과의 공동포럼, 간담회,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 등 협업시스템 강화 활동	연중	
	○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출장강연(성폭력, 아동학대, 기타 폭력예방 관련)	연중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 등 전문화 교육(사이버 강의)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 기대효과

-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체계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 대응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의견 적극 청취, 사건의 적정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국민 안전 사회구현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 (점수)	2,334	2,601	2,897	2,906	성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 포럼, 세미나, 실무협의회 등 협업 활동 실적  전담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화 교육 등 수사 역량강화 활동 실적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 횟수를 성과지표로 채택  ※ 전년도 실적보다 0.3% 목표 상향 설정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포럼, 세미나, 실무협의회 등 개최 횟수, 매뉴얼 발간 (×10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대책 회의 개최(횟수×5점)  전담검사 및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횟수×교육 시간×참여 인원×1점)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수강(횟수×수강인원×0.5점)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 (횟수×0.5점)	유관기관과의 공동 포럼 및 간담회 자료, 교육자료, 일선 청의 정보보고, 언론 보도 자료 등

## ⑥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Ⅱ-1-⑥)

### □ 추진배경

- 불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결과 집단이익 관철을 위한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동수사단계부터 적극적 신병처리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처벌
- 수사·공판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에 만전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 공공수사 검사 워크숍 개최	1~3월	
	건설현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응 사례 홍보		
	유관기관 간담회		
2/4분기	건설현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4~6월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응 사례 홍보		
3/4분기	건설현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7~9월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응 사례 홍보		
	유관기관 간담회		
	불법집단행동 사건처리 기준 강화		
4/4분기	건설현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10월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응 사례 홍보	11월	
	공공수사 역량 강화 교육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건설현장 사업자, 불법집단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대검, 고용부, 행안부, 국토부 노동청 등

□ 기대효과

-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집단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의 경제적 손실 및 국민의 불편 해소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집단불법행위 엄정 대응(점수)	-	-	신규	100	○ 목표치 산출근거  - 구속인원  - 집단불법행위 엄정대응 홍보  - 유관기관 간담회	○ 활동실적×가중치  - 구속인원 (명수) x 10  - 집단불법행위 엄정대응 홍보 횟수 x 5 - 유관기관 간담회 횟수 x 5	정보보고, 보도자료 등

## 7]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범집행(Ⅱ-1-⑦)

### □ 추진배경

- 범죄를 저지른 후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거듭 반복되어 사법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범감정 악화
- 국외도피자를 형사처벌하고, 이에 더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여야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없앨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외도피한 범죄자를 적극 송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점검('23. 4.)
  - 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 연중 지속 추진(연중, '23. 12.)
-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등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연중, '23. 12.)
-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23. 3., 6., 10., 12.)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실무그룹회의 참석('23. 3., 9.)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참석('23. 8., 11.)

-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총회 참석('23. 3., 6., 10.)

※ 위 회의를 포함하여 반부패·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 예정

○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노력

-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전담수사관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교육('23. 4.)

- 범죄수익환수 관련 커뮤니티(TF 포함) 등 활성화,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담당자 역량 제고 노력(연중, '23. 12.)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특별관리대상 국외도피사범, 자유형 미집행자 및 범죄 수익환수 대상 금액 점검	3~4월	
	○ OECD뇌물방지 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3~4월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무연수원 교육	4월	
2/4분기	○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총회 등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석	6월	
3/4분기	○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 포상	7월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등 국제 형사협력 및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8월	
4/4분기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실무그룹회의 등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관련 국제회의 참여	10월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관련 커뮤니티 및 동호회, 세미나 등 개최(연중)	12월	
	○ 국외도피 등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및 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 추진 (연중)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외교부, 경찰, 해외 법집행기관

□ 기대효과

-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과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
- 국제 형사사범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조 필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 송환 및 증거확보 등 가능
- 법집행 회피 사범을 엄단하여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	'23
일반재정(I-1-일반재정②)				
①	검찰운영(1333)	일반회계	120,713	130,031
			(120,713)	(130,031)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8,014	7,87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제형사공조 실적(점수)(공통)	82.4	92.16	123.9	99.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등의 업무 특성상 소요기간 장기화, 상대국과의 관계, 국제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목표치 설정	(이행건수/요청건수×100+이행건수/접수건수×100)/2 ※ 측정산식은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건수 합계임	자체통계 (외국의 주권적 결정·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평가시 고려 필요)
범죄수익환수 역량강화 실적(점수)  ※ 국외도피 재산 환수는 법원의 판단 외에도 상대국의 협력정도, 외교관계, 법제도, 조약상황 등이 성과달성에 절대적이며, 국제업무 특성상 통상 재산 환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환수역량강화'를 성과지표로 설정	77	106	135	106.0	-국제정세 급변으로 국제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법률안 제정, 개정, 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적정 목표치 설정	○범죄수익환수 및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50점 상한) -국제회의의 1회(×10점) -국제 실무협의 등 1회(×5점) ○법무연수원 교육 -교육 1회(×10점) ○법률안 제정, 개정 등 지원 -법령 제·개정(×5점) -법령 국회 제출(×4점) -법령 발의(×4점) -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3점) ※ 부패재산의 몰수및 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안 추진 중 ○범죄수익환수 관련 커뮤니티(TF), 세미나 등 활동수 -커뮤니티, 동호회 등 활동 1회(×6점)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등 1회(×6점) -그 외 선진범죄수익환수기법 해외연수 등 범죄수익환수역량강화 관련 활동 1회(×6점) ※ 측정산식은 각 점수 합계임	공문서, 최종결과문서, 보고자료 등

## ⑧ 부패대응 공백 방지(Ⅱ-1-⑧)

### □ 추진배경

-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인정 규정(§24①②)이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에 대응하여 인권침해와 수사지연 등을 방지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 부패대응역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2.1.)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 마련 등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 방안 검토
  - 디지털증거의 중요성 증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등 관련 법체계 전반의 현대화·고도화 추진 방안 검토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1~3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1~3월	
2/4분기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4~6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4~6월	
3/4분기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7~9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7~9월	
4/4분기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10~12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피해자, 피의자 등 형사사법 관련자를 포함한 국민
- (이해관계자집단) 공수처, 경찰,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 기대효과**

-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대응 공백을 방지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부패대응 공백 방지 제도개선 ( 점 수 )	-	-	60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 정상화, 형사사법제도 정비 등 부패·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과정을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li> <li>○ 과거 실적·목표를 반영하되, 과제 성격상 국내 정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 전년도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5% 상향한 63점을 목표치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별로 추진항목마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산정</li> <li>○ 추진항목(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청회·여론조사·세미나 등 의견 수렴(각 10점)</li> <li>-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분석·연구(각 10점)</li> <li>-유관기관 등 협의(각 10점)</li> <li>-법령 제·개정안 검토·마련(각 10점)</li> <li>-법령 제·개정 입안 보고·입법예고·제출·공포·시행(각 10점)</li> <li>-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각 5점)</li> <li>-국회 논의 지원·대응(각 10점)</li> <li>-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각 8점)</li> </ul> </li> </ul>	관련 보고서, 공문서, 법령 제·개정안, 보도자료 등

## (1) 주요내용

## □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민법개정위원회) 제정 이후 약 60여 년간 유지되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을 국격에 맞게 개정하여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전형계약 규정을 도입
- (인격표지영리권) 성명·초상 등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그 구제수단을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기틀 마련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도모
- 2년간 시범운영한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을변호사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전자공증 문서의 온·오프라인 호환성 부여 및 활용처 제한 개선,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추진
- 정기적인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적 기능 강화
- 공증사무소에 대한 정기적 감사 및 반복적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전국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공문 시행, 징계위원회 정기 개최 등 공증사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민·상사규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협상 참여와 체결된 협약의 국내적 시행, WTO·FTA 등 통상협상 참여 및 자문,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정비 지원

##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강화

- 국제투자분쟁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
- 투자협정(FTA·BIT) 회담 참석 및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내 외국인투자 증대와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
- ISDS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및 ICSID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정부 입장 반영

## □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고손실 적극 환수 추진
-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및 지원

## □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변화된 국가송무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소송 관련 법령·제도 중 개선의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체계 실현

## □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

- 9988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활성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의 원활한 창업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관계 법제에 관한 선제적 연구정비 추진 및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변호사시험 답안작성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시행 지속 추진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	-	-	276	304	○22년 전자공증 완료건수에서 10% 상향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전자공증 완료건수 × 0.1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집계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점수)	-	-	70	75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적정 목표 만족도를 작년도 기준에서 5% 상향	○연구 및 연수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평가	○인터뷰, 설문조사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미래변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민법개정위원회) 과거 있었던 두 차례의 민법개정위원회에 대하여는
  - ① 소수의 학자들만이 개정안을 마련한 점에 대해 다른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비판(제1차), ② 개정시안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제2차)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인격표지영리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공청회,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집단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제도 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

## □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공증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대한공증인협회와 공증실무협의회를 통한 공증 실무계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 가속화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거래(물품, 매매)를 넘어서 기술(전자상거래, 블록체인), 우주·항공, 가족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이에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필요성 증대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14년) 이후 여러 이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아동반환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지연되면서 아동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협약 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지정

- 국격에 걸맞은 ODA 사업 확대,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ODA 추진 등 국정과제에 맞추어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확대 필요

## □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 강화

- 국내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법적 지원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예방이 필요함

## □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복잡·다양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송무 환경을 고려할 때, 환수 소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각급 검찰청·소관부처와의 실무자 간담회 및 소송총괄관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건 유형 및 소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전조치 및 소송제기를 검토하는 민사환수시스템 구축

## □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국가 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음
- 국민의 높은 권리의식으로 인해 국가송무행정은 고도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요구됨
- 송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통일적·효율적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송무 행정 실현

## □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복합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정책 효용성 제고 필요

##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비, 북한법제 및 남북교류협력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등 지속적 연구 필요
- 통일법제를 준비하고 실현할 전문가 발굴·양성 필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및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운영
  - 통일법제 학술대회 개최,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통일 대비 연구 활동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위기 탈북민'에 대한 법률 지원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법률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온라인·모바일(카카오톡)·대면 법률상담 실시

- 위기 탈북민 대상 지원변호인 1:1 연계 서비스 제공

○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속재산 처분 및 재산관리인 감독 등 관리 효율화 필요

-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

#### □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각계 의견수렴 및 TF 구성·활동 등을 통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신속하고 내실 있는 개선 사항 시행으로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미래변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Ⅱ-2-①)

#### □ 추진배경

- (민법개정위원회) 6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경제규모와 빨라진 경제활동의 속도 및 전통적 재산권 외 새로운 권리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거래방식과 동기화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도 정비할 필요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콘텐츠·서비스·데이터의 제공 및 소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를 규율하는 계약규범이 부재\*
  - \* 현재 많이 사용되는 약관의 경우 약관마다 편차가 크고 제공자 위주로 작성되어 이용자 보호에 취약
- (인격표지영리권) 성명·초상 등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그 구체수단을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기틀 마련할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법개정위원회)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래와 같이 민법에 반영할 필요

구분	개정필요 분야
일본식 표기 한자, 오탈자	▶ 一町步(\$1008의3), 蒙利者(\$233), 溝渠(\$229①), 承役地(\$293) ▶ 임의후견임감독인(\$959의15④) ⇨ 임의후견감독인
60년 전 법제 유지	▶ 현대사회의 빠른 거래주기를 고려한 채권 소멸시효 합리적 조정(10년 ⇨ 5년 이하) ▶ 물권임에도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 분쟁을 야기하는 부동산 유치권 폐지
시대변화 미반영	▶ IT 기술 발전에 따른 거래관계를 민법에서 규율(디지털콘텐츠, AI 등) ▶ 초상·성명 등 인격적 가치 보호를 위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이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계약법 등 민법

대개정을 완수('02 독일, '16. 프랑스, '17. 일본)

-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운영하여 개정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집중 연구·검토함으로써 국격에 맞게 민법을 개정

※ 1차(99년~03년), 2차(09년~13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민법 전면 개정을 시도했으나, 1차 개정안은 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차 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되어 전면 개정은 사실상 실패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을 위한 전형계약을 별도로 신설하고 위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전범을 제시

- 법제처 심사('23. 3.), 국회 제출('23. 6.)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예정

- **(인격영리표지권)** 성명·초상 등 사람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그 구제수단을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기틀을 마련

- 법제처 심사('23. 4.), 국회 제출('23. 6.)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예정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계부처 이견해소를 위한 자문계약 발주(디지털콘텐츠계약법)	2월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면담	2월	양창수 교수
	부처간 협의 실시(디지털콘텐츠계약법)	3월	
	민법 개정안(디지털콘텐츠계약법) 법제처 심사	3월	
	한국민사법학회 임원단 면담	3월	
2/4분기	민법 개정안(인격표지영리권) 법제처 심사	4월	
	민법개정위원회 발족	5월	
	이해관계자(유관기관,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	6월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6월	
	민법개정위원회 분과회의 논의	6월	
3/4분기	민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전문위원실 방문·설명 등)	7~9월	
	민법 개정 공청회 개최	8월	
	민법개정위원회 전체 회의 논의	9월	
	민법 개정 관련 자문·연구용역 발주	9월	
4/4분기	민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전문위원실 방문·설명 등)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사법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존재하는 대부분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개인과 기업들이 수혜자이자 이해관계인이 될 것임
- 디지털콘텐츠계약법과 인격표지영리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산업계 등이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 (민법개정위원회) 6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경제규모와 빨라진 경제활동의 속도 및 전통적 재산권 외 새로운 권리가 출현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민법상 거래방식을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거래방식과 동기화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본법 마련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디지털콘텐츠·플랫폼 관련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용될 전범을 자율규범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거래를 촉진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약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거래계에 적용될 최소한의 기본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분쟁 감소 효과 도모
- (인격표지영리권)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그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 감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민법 개정 및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운영	-	-	신규	200	신규 관리과제이므로 이와 유사한 관리과제인 '22.년도 '경제플랫폼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제출' 및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규정 마련 및 국회 제출'을 감안하여 '23년에 200점을 목표로 설정	○ 활동실적×가중치 -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20점) - 민법개정위원회 전체 회의(1회×10점) - 민법개정위원회 분과 회의(1회×5점)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1건×10점) - 공청회(1건×20점) - 입안보고(15점) - 입법예고(15점) - 전문가 의견수렴 (1건×5점) - 유관기관과의 협의 (1건×10점) - 법제처 심사(20점) - 차관회의(15점) - 국무회의(15점) - 국회 제출(15점) - 국회 설명(1건×10점) -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 (1건×15점) - 대국민 홍보(1건×20점) ※ 홍보 방법 : 홍보 자료 · 홍보 영상 제작, 언론 인터뷰 등	시행공문, 결과보고 및 개선 실적자료 등

##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Ⅱ-2-②)

### □ 추진배경

####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도모

####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조환경 조성

※ '22년의 경우 징계위원회 3회 개최(4월·9월·12월)

#### ○ 법률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확대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및 운영

####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기관 확대 및 예산 대응

####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 지속적인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

####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제도 확대 운영

- 마을변호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강화를 위해 경기 광주시에서만 운영 중인 화상상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제도 관리를 체계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월~3월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개설 희망 지자체 조사	3월	
2/4분기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통합선발공고 등	4월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4월~6월	
	○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6월	
3/4분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7월~9월	
	○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프로그램 운영 등	8월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신규 자지체 개설 완료	9월	
4/4분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0월~12월	
	○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12월	
	○ 마을변호사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연중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 (수혜자) 청년변호사, 국가기관, 국민(법률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변호사·변호사단체 등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 (수혜자) 국민(법률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변호사·변호사단체 등

○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 (수혜자)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읍·면·동 주민
- (이해관계집단)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

기대효과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 및 법치행정 강화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 비위변호사 엄중 징계를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 마을변호사의 화상상담창구를 확대하여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편의 증진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등	-	687	1,184	1,100	-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선발기관 확대 및 예산대응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 - 최근 2년 평균실적(935.5)보다 약 30%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 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공고(기관별×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서류전형(지원자 1인×0.5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면접(면접자 1인×1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최종 선발(선발인원 1인×1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관련 예산 대응(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세미나(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재판참관 프로그램(1회×10점) - 기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업무 지원(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대상 의견 조회(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제도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참석(1회×10점)	공문 회의자료 등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602	639	687	740	- 변호사 징계 관련 처분 및 행정소송 수행 등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 - 최근 3년 평균 추세치보다 높	○ 변호사징계 관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건수(1회×30점)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행정소송 판결문,

			은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의건수(심의 1회 ×10점) - 변호사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승소시 1회 ×10점 패소시 1회 × 5점) - 변호사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급별 건수(7차결정시 1회 ×5점, 인용결정시 1회×25점) - 등록 취소 명령 건수(1회×3점) - 변호사징계 관련 자문 건수(1회×5점) - 징계심의조서 작성 건수(1회×15점) - 징계심의결과 통지 건수(1회×10점) - 징계위원 위촉 건수(1회×10점)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908 1,680 2,036	3,225	'23.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전국 단위 확대 운영이 예정된바,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제도 운영 지자체 수를 지표에 반영하였고, 기존 지나치게 복잡했던 마을변호사 성과 관련 산식을 통폐합하여 정리함. 다만 목표치는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함.	- 마을 변호사 화상상담 창구 운영 사업 참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 개수 x 100점 -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전화상담 건당 0.5점, 현장상담 또는 화상상담 건당 1점) - 홍보물 제작 건수 x50점 - 홍보물 게시·업로드 건수 x50점 - 마을변호사 관련 제도관리 대상인원 (마을변호사, 담당 공무원, 서포터즈 포함) x 0.5점	법무과와 제도 유관기관 (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 또는 개별 지자체와 주고받는 문서 법무과 내부 제작 문서 등

###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Ⅱ-2-③)

#### □ 추진배경

- 전자공증의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원인으로 ① 복잡한 사용절차, ② 시스템 노후화, ③ 제한된 문서 활용처 등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공증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관계법령을 실정에 맞게 개정 필요
- 공증제도 이용률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지적되어, 제고를 위해 공증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추진
  -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공증문서 작성·관리 및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공정증서 작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공증관계법령 개정절차 진행
  - 정기적인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한공증인협회 등 실무계로부터 제도개선 안건 발굴
  - 「공증인법」, 「공증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등 공증관계법령 개정절차 진행
- 공증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 공증사무소 정기감사, 재외공관 공증 영사 지도점검 실시
  - 공증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증인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증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국 공증사무소에 징계사례·요주의 사례 주기적 전파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임명·인가공증인 공모진행	2월	
	○ 신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직무교육 실시(1차)	2월	
	○ 공증인 징계위원회 개최(1차)	3월	
2/4분기	○ 공증 제도개선위원회 개최(23차)	4월	
	○ 임명·인가공증인 공모진행	4월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5월	
	○ 신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직무교육 실시(2차)	6월	
3/4분기	○ 공증관계법령 개정	7월	
	○ 공증실무협의회 개최	8월	
	○ 공증 연구용역 발주	9월	
	○ 제17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 홍보 실시	9월	
4/4분기	○ 신규 임명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직무교육 실시(3차)	10월	
	○ 공증 제도개선 관련 자문계약 발주	11월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관련 홍보 실시	12월	
	○ 공증제도 홍보 진행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증축탁인 등 공증제도 이용자, 공증인
- (이해관계 집단) 대한공증인협회 및 협회 소속 각 공증인

□ 기대효과

- 차세대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하는 공증사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증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공증실무 현장의 합리적인 개선의견을 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공증인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공증인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통한 공증제도의 공공성 강화, 예방사법 기능 강화를 통한 국내 사법시스템 운영비용 절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li> </ul>	-	-	-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사에 따른 성과지표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li> <li>- 총괄 사업자 선정 30점</li> <li>- 개별 사업자 사자 30점</li> <li>- 자문회의 사업자 교육 등 사업 진행 관리 횟수 x 10점</li> <li>- 관련 지문 건수 x 10점</li> <li>- 사업 완수시 100점</li> <li>- 온라인 공정증서 작성 건수 x 0.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서, 과기부등 유관기관 발행 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li> </ul>	960	3,041	5,929	3,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3년 간의 성과실적 평균치(3,310)의 10%를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 관련 법령 개정</li> <li>- 입안보고 (제·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입법예고 (제·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관계기관 협의(제·개정 조문 1개당 4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 제개정에 따른 입안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공증인제도 개선위원회 회의 자료, 공청회 결과물, 법령안, 보도자료,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 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처 심사(제 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국무회의 심의(제 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법률안 국회제출(제 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국회심의 중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1회 ×20점</li> <li>- 법률안 국회통과(제 개정 조문 1개당 10점)</li> <li>- 하위법령 공포(제 개정 조문 1개당 5점)</li> <li>- 각종 지침 제 개정 (조문 1개당 5점)</li> <li>○ 공증제도 개선 노력</li> <li>-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건수×20점</li> <li>- 공증실무협의회 회의 건수×20점</li> <li>- 제도개선 의견수렴 건수×10점</li> <li>-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참여 건수×20점</li> <li>- 간담회 세미나 참석 건수×20점</li> <li>○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법인 지칭 고시 (고시개 법인당 1점)</li> <li>○ 공증제도 관리 연구</li> <li>- 공증법령 유권해석 건수×10점</li> <li>- 공증연구용역 건수 ×30점</li> <li>- 공증지문 실시 건수 ×10점</li> <li>- 공증 감사 후 계도 공문 실시 건수×10점</li> <li>- 공증인 보조자 제외 공관 공증담당자 교육 건수×20점</li> <li>○ 공증 홍보 건수×20점</li> <li>○ 전자공증시스템 유지 보수</li> <li>- 헬프데스크 질의 응답 건수 ×0.1점</li> <li>- 전자공증이용건수 ×0.5점</li> <li>-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 ×0.05점</li> <li>- 시스템 기능개선 건수×50점</li> <li>○ 재외공관 공증제도</li> </ul>	<p>제도개선 관련 계도 공문 사본 유권해석 자료, 연구용역 홍보물 전자공증 시스템 앱스 도어 기록 등</p>
--	--	--	--	---

					개선 -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건수×10점 -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횟수×10점 - 검열결과 통보 및 의견 제시 건수×10점		
▪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	238	600	756	793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실적이 마달되었으나 '21년 및 '22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완화로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을 재개하고, 국내 공증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적극 실시하여 접수 대폭 증가 ○ '23년의 경우 최근 실적치의 상승기조를 고려하여, '22년 성과 실적치의 5%를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공증서류 검열 - 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사정 조차된 압명 인가공증인 공증담당 변호사 1인2점 -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 자체점검표 횟수 ×10점 - 장기감사의 특별감사 실시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건수×30점 - 공증인징계위원회 심의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후 계도 공문 실시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관련 행정 소송 삼급별 종결 건수 (승소시 1회×10점, 패소시 1회×5점) - 공증인 징계 관련 집행 정지 삼급별 건수 (기각시 1회×5점, 인용시 1회×25점)	공증검열보고서 공증인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재외공관 공증사무 자체점검표, 행정 소송 판결문 등

####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Ⅱ-2-④)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 추진배경

○ 국제교류 증대의 영향으로 기술(전자상거래, 블록체인), 우주·항공, 가족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확립된 민·상사규범(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필요성 증대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도 도입('14년) 이후 여러 이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지속

※ 미국 국무부, 자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아동반환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지연되면서 아동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지정

○ 기존 개도국 법제정비 지원 중심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참여하여 만든 국제규범의 확산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리더십 발휘

※ (국정과제) 국격에 걸맞은 ODA 사업 확대,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민·상사규범 및 통상 협상 참여,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법무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협상 참여(연중)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5개 작업반(중소기업,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도산, 선박경매) 외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로 초국경적 거래(물품, 매매, 서비스, 금융), 가족법, 분쟁해결 등 주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 참여 및 협상단에 법률자문 제공(연중)

\* IPEF, 한-중 FTA 후속협상, CPTPP 가입 협의 등

- 국제거래규범 내용 및 동향 전파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개최

- 국제거래규범 연구 및 도입을 위한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 체결된 국제협약의 국내 도입 추진(국제협약 비준, 이행법률 제정 등)

- 국제조정에 집행력 부여 위한 싱가포르조정협약('19. 서명) 이행법률 제정 T/F 회의 개최('23. 2분기), 국제조정을 위한 규범 마련('23. 4분기)
- 작년 11월 채택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의 국내 법제와의 체계적 정합성 및 가입 필요성 검토 실시('23. 2분기)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업무 수행 및 제도 개선 추진

- 협약상 제도 관리자인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으로서 아동소재 파악, 우호적 해결 유도, 법률 자문 등 아동반환 지원 업무 수행(연중)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 강제집행 제도 개선 추진('23. 3분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개요)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12년) 후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13년)

→ 신청인은 탈취된 아동 반환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법률 ODA)

-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개도국 대상으로 우리 법제 전수 및 운영 경험 공유
- UNCITRAL, 세계은행(World Bank) 등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개도국 대상으로 국제거래규범 도입 촉진, 세계은행 준법 경영기준 활용 지원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 위한 활동 실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b>(국제 민·상사규범 성안 및 도입)</b>			
1/4분기	○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제도 개선 홍보 활동	1~3월	
	○ 통상법률 제158호 발간		
2/4분기	○ 국제법무자문위원회 회의	4~6월	
	○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개최		
	○ 통상법률 제159호 발간		
3/4분기	○ 국제거래법연구단 회의	7~9월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6차 본회의		
	○ 투자·비즈니스 가이드북 개정		
	○ 통상법률 제160호 발간		
4/4분기	○ 제9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	10~12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법률설명회 개최		
	○ 통상법률 제161호 발간		
연중	○ 국제민·상사규범 관련 국제회의 참여 ○ 통상협상 참여 및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지원 업무	협상 일정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b>(법률 ODA)</b>			
2/4분기	○ 무상원조사업 관계부처 회의 참석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연구용역 실시 ○ 개발도상국 공무원·법률전문가 연수 실시	4~6월	
3/4분기	○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발간(세계은행 공동)	7~9월	
4/4분기	○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제거래규범 도입 및 통상협상) 이해관계 집단으로는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외교부, 통상협상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있음
- (법률 ODA) 이해관계자는 개발도상국 법제 관련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법률전문가가 있으며, 수혜자는 법제정비 세미나 및 연수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수원국)의 공무원, 개발도상국 법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및 법률전문가가 있음

□ 기대효과

- 선진 법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범 인프라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 개발도상국 법제 지원을 통한 우리 법제를 해외로 전파하고, 우리가 참여하여 만든 국제거래규범을 확산시켜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국제 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거래비용 절감 및 법률 리스크 감소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익 증진(V-1-일반재정②)			
①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1032)	일반회계	9.67	9.0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300)		8.1	7.4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305)		1.6	1.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제민·상사규범 성안·도입(공통)	-	-	375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황 회복으로 국제기구 업무가 정상화된 점 고려하여 목표치를 5% 상향</li> <li>○ 국제회의 참석 이외에도 세미나 개최참석과 같은 국제규범 소개 및 동향 진파 활동, 가입필요성 검토 등 국제협약 도입 관련 산식 추가</li> <li>○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 국가로 언급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행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산식 추가</li> </ul> <p>※ '22년도 목표치는 직전 3개년 기준 연평균 국제회의 참석(15회), 행사 개최(3회), 아동반환사건 접수(9건), 연구 및 자료 발간(7건) 등 실적을 신규 측정산식에 대입한 값(445점)에 외생변수, 인력감축 등 고려하여 산출(350점)</p>	<p>&lt;UNCITRAL 등 국제회의 관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검토 및 의견수렴(5점)</li> <li>○국제회의 참석(5점)</li> <li>○국제거래규범 세미나 개최(10점)</li> <li>○국제거래규범 세미나 참석(5점)</li> <li>○국제협약 등 가입필요성 검토(5점)</li> <li>○국제기구에 국내 판례 등재(10점)</li> <li>○국제협약 가입(20점)</li> </ul> <p>&lt;싱가포르조정협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 등 국문본 발간(10점)</li> <li>○이행법률 TF 개최(10점)</li> <li>○이행법률 연구반 개최(5점)</li> <li>○관계기관 협의(5점)</li> <li>○조정 관련 규범 제정 및 개정(10점)</li> </ul> <p>&lt;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반환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건수×5점 우호적 해결 사건은 해결 건수×7점</li> <li>-아동 반환시 반환된 아동 수×5점 가산</li> </ul> </li> <li>○해외 중앙당국 간담회(10점)</li> <li>○제도 개선 홍보 노력(세미나 발표, 공청회 등)(10점)</li> <li>○관계부처(법원, 경찰) 협의(5점)</li> <li>○이행법률 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안 입안(10점)</li> <li>-국회 제출(20점)</li> <li>-하위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20점)</li> </ul> </li> <li>○국제기구에 국내 판례 등재(5점)</li> <li>○전문변호사 양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목록 업데이트(10점)</li> <li>-교육 프로그램 개발(20점)</li> </ul> </li> </ul> <p>&lt;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발간, 연구실적(각 10점)</li> <li>○법률자문 제공, 보도자료 등 홍보 실적(각 5점)</li> </ul>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공문, 회의참가 보고서 등
법률 ODA (공통)	-	-	135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상황 회복으로 외국 정부와의 교류가 본격 재개된 점 고려하여 목표치를 5% 상향</li> </ul> <p>※ '22년도 목표치는 직전 3개년 기준 연평균 교육/연수 제공(3건), 회의 참석(3건), 연구(2건) 등 실적을 측정산식에 대입한 값(155점)에 외생변수, 인력감축 등 고려하여 산출(1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 공무원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30점)</li> <li>○개도국 만족도 평가 실시(10점)</li> <li>○관계부처 회의간담회 등 참여(5점)</li> <li>○수원국 법제 개선 실적(30점)</li> <li>○연구실적(10점)</li> <li>○자료발간(10점)</li> <li>○보도자료 등 홍보 실적(5점)</li> </ul>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공문, 회의참가 보고서 등

## ⑤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강화(Ⅱ-2-⑤)

### □ 추진배경

- 국제투자분쟁의 효율적 대응·예방을 위해 전문성 축적 및 역량 강화
- 국제사회의 국제투자분쟁 제도개선 논의 참여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응 및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
  -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행 중인 7건(론스타, 쉘더리, 엘리엇, 메이슨,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다야니 2차)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소송수행
  - 국제투자분쟁대응단 및 관계부처TF, 실무자회의 참석·개최 등을 통해 사건별 추진현황 공유 및 정부 대응전략 수립, 현안 논의
  - 기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
-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교육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국인 투자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 적극 실시
  - ISDS 예방 교육 수요조사 실시 및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대상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한 교육 활성화 도모
- 투자협정(FTA·BIT) 및 ISDS 제도개선 활동
  - 투자협정 등 국제 규범 및 제도 마련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참석 및 법률자문
  - ISDS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제3실무작업반 회의 참여 및 정부 의견서 제출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제투자분쟁 세미나 진행	1~3월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4·45차 회의 참석	1~3월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시	1~3월	
2/4분기	○ 국제투자분쟁사건(중국투자자 ISDS) 문서제출절차 대응	4~5월	
	○ 국제투자분쟁사건(선들러 ISDS) 심리기일 참석·대응	6월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시	4~6월	
3/4분기	○ UNCITRAL 본회의 참석	7월	
	○ 국제투자분쟁사건(중국투자자 ISDS) 정부 측 서면 제출	9월	
4/4분기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6차 회의 참석	10월	
	○ 국제투자분쟁사건(중국투자자 ISDS) 심리기일 참석·대응	10~12월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시	10~12월	
	○ 국제투자분쟁사건 대응	연중 수시	
	○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		
	○ 투자협정(FTA·BIT) 협상 준비 및 참가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해외투자 국민 또는 기업, 외국인 투자 관련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투자협정 담당 관계부처 및 학계

### □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
- 체계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법적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
-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참석 및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국내 외국인 투자자 보호·증대와 해외에 투자하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V-1-일반재정④)				
①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1032)	일반회계		(64)	(66)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308)			52	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제투자분쟁 대응	-	440	460	485	○ 과거 회의 등 개최 건수 및 추세. '22년 실적 (460)보다 상향한 485점을 목표치로 설정	○ 국제투자분쟁대응단회의 및 관계부처 개최(각 10점) ○ 기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실적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세미나 개최 건 (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각 5점)	· 공문 · 계획보고서 · 검토보고서 · 회의안건자료 · 일일상황 보고 · 보도자료 등
국제투자분쟁 예방	-	150	188.18	240	○ 작년 예방 교육 개최 건수, 관련 자료 발간 등 작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22년 목표치(160점)보다 150% 상향한 240점을 목표로 설정	○ 국제투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각 20점) ○ 홍보 건수 (각 5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자수) ▷ 매우만족 30 ▷ 만족 20 ▷ 보통 10 ▷ 불만족 5 ▷ 매우 불만족 0	· 검토보고서 · 예방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계획보고서 · 공문 · 예방 교육 자료집 또는 연구 용역 결과 · 보도자료 등
ISDS 제도개선	-	160	160	160	○ 과거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의견서 제출 건수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석 (각 20점) ○ 제도개선 관련 검토의견 및 의견서 제출 (각 20점)	· 공문 · 회의 결과보고서 및 정부의견서 · 개정 규정 등
투자협정(FTA,BIT) 및 기타 국제분쟁 법률 지원	-	100	110	130	○ 과거 회의 참석 횟수, 법률검토 건수를 감안하여 '22년 실적(110점)보다 상향한 130점을 목표치로 설정	○ 투자협정(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 (각 10점)	· 공문 · 계획 또는 결과 보고서 · 검토의견서

##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Ⅱ-2-⑥)

### □ 추진배경

- 국가소송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부패·비리 및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경우, 소송 수행청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체계적인 국고손실 환수 송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법무부는 '15. 9. 22. 체계적인 환수소송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여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중
  - ※ 검찰에서도 '17. 2. 20. 국고손실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현 서울고검 국가1팀)을 출범하여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고손실 환수 가능 사례발굴 및 소송지원
  - 정보보고, 공정위 의결서, 형사판결문, 검찰 보도자료, 언론스크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고손실 사례 발굴 및 소제기
  -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지원 제공
- 환수가능 사례 발굴 등을 위한 소관청과의 실무자 간담회 개최
  - 각급 검찰청, 소관부처와의 실무자 간담회 및 소송총괄관 회의 등을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환수 사례 발굴
- 이론적 전문성 제고
  -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개정·배포 및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교육, 학계와의 교류 등을 통해 송무 역량 강화 및 관련 이론적 기반 구축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국고손실 환수소송 소관부처와의 협력으로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입찰 참가 기업 등 수범자와 국민에 대하여 ‘부패·비리, 불공정행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제고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언론 보도, 형사 판결문 등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제기 가능 사례 발굴	1-12월	연중
	○소제기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4분기	○국고손실 환수소송무 관련 교육 실시	4-12월	
	○각급 검찰청 등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관계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자료 제공 등 소송지원		
3/4분기	○소제기 관련 회의 개최 및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또는 유선, 이메일에 의한 업무 협의	7-12월	
	○언론보도 스크랩 및 언론보도 등 홍보		
4/4분기	○국고손실 환수소송무 매뉴얼 개정 및 배포	9-12월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고손실 환수의 주체로서 국가
-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송당사자
- 소송 대리 변호사 및 소송제도 연구 학자
-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 기대효과**

- 국고손실 환수소송무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환수소송 제기 및 소송 수행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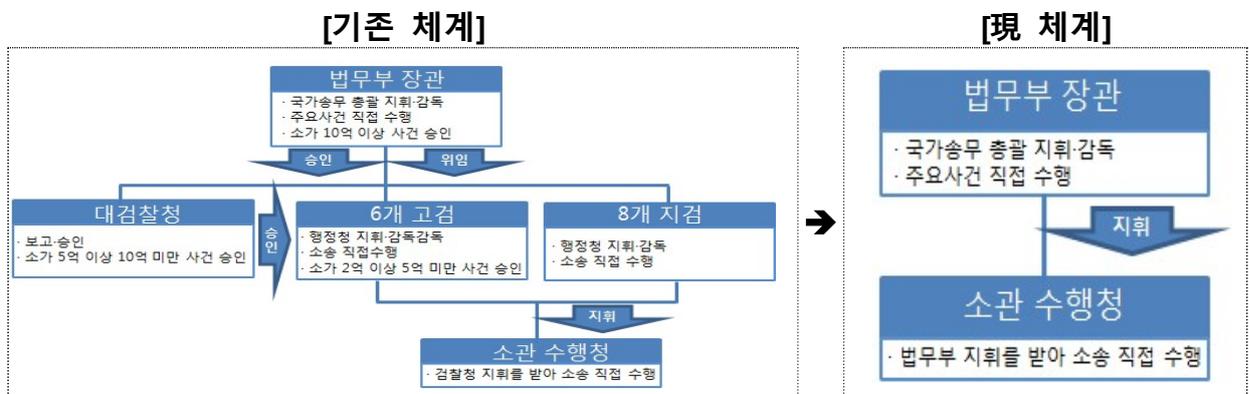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고손실 환수실적	2,388	11,869	9,349	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환수 금액에 큰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산식 개선 및 그간의 실적과 현재 계속 중인 소송의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목표치를 산출</li> <li>○ '18년~'22년 5년 평균 실적차에서 20% 상향하여 10으로 나눈 값을 '23년 목표치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환수금액 기준 백만 원 당 1점에서 천만 원 당 1점으로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건수 (건 당 20점)</li> <li>○ 심급별 승소 금액(천만 원 당 1점 최종심의 경우 환수 완료 금액)</li> <li>○ 주요 소송행위 승인 건수 (건 당 15점)</li> <li>○ 법률자문·지원(회 당 1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문, 관련 문서</li> <li>· 관련사건 조회</li> <li>· 소관부처·검찰청 첨부 자료</li> </ul>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	53	182	299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 대비 30% 상향된 값을 '23년 목표치로 산출하여 적극적 역량강화 추진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부패·비리행위 관련 정보 보고, 공정위의결서,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건당 10점)</li> <li>○ 회의, 간담회 개최 및 참석(회당 10점)</li> <li>○ 송무지도점검(회당 5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소송 관련 언론 보도 등 홍보(건당 20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개정 및 배포(회당 25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실시(회당 10점)</li> <li>○ 소제기 및 소송수행 관련 유관기관과 유선, 이메일 등에 의한 협의(회당 5점)</li> <li>○ 연구용역 및 자문 의뢰(회당 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문, 관련 문서</li> <li>· 보도자료, 언론 기사</li> </ul>

## 7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Ⅱ-2-⑦)

### □ 추진배경

- 변화된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 특히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지휘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20. 12. 28.)됨에 따라, 법무부가 소송지휘, 중요사건 지정, 정보보고 등의 업무 전반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
- 법령·제도 개선,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이 필요

### < 국가송무체계 개선 전후 비교 >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변화된 국가송무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소송 관련 법령·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효율화가 필요한 업무 절차를 찾아내어 개선하거나, 합리적인 새로운 업무 절차를 발굴하여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송무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 소송수행청에 대한 행정소송 송무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 해태 등을 사전에 방지
- 소송총괄관회의를 비롯한 송무 관련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송무정책 수립에 반영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송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송 수행·지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

-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송무역량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상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계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계획 수립	1~2월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공익법무관 직무연수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3월	
2/4분기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공익법무관 직무연수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4~6월	
3/4분기	○ 상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7월	
	○ 소송비용회수 관련 지침 정비 및 조기회수 현황 파악	7월	대통령실 후속 보고 예정 (2.10 보고서)
	○ 하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계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계획 수립	8월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공익법무관 직무연수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9월	
4/4분기	○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공익법무관 직무연수 및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실시	10~12월	
	○ 하반기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소송총괄관 회의, 판례연구회 개최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연중	
	○ 행정소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개인·법인 등
-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 등

□ 기대효과

- 행정소송 수행·지휘 관련 제도 개선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통일적인 송무체계 구축·확립
-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송무역량 강화로 법치행정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국가송무수행(V-1-일반재정②)				
① 국가송무수행(1031)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300)	일반회계	23	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실적(점수)	-	-	160	180	○목표치 산출근거 - 법령·규칙 등 제·개정: 1건, 제도 개선: 1건(전년 제도 개선 1건) - 송무지도·점검: 70회(전년 64회) - 송무교육, 최신 판례 연구 등 세미나 개최: 42회(전년 40회) - 소송총괄관회의: 1회(전년 1회) - 국가송무자문위원회: 1회(전년 1회)	* 법령 및 제도 개선(최대 100점) - 법령·규칙 등 제·개정 건당 30점 - 제도 개선 건당 20점 *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최대 150점) - 송무지도점검(소송수행자 포함) 건당 3점 - 송무교육 각 2점 - 송무교육(민복 수강 가능한 강의 활용) 각 10점 - 최신 판례 연구 등 세미나 개최 각 5점 - 소송총괄관회의 각 10점 *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운영(최대 100점) -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자문 사건 당 20점	공문서, 결과 보고서, 보고자료 등

##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Ⅱ-2-⑧)

### □ 추진배경

- 법률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비용 지원 등 9988법률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9988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문,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기성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위주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수혜자폭 확대를 위해 ‘22.2월 한도 변경, 200만원→100만 원)

- 스타트업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함으로써 지원 확대

※ ‘스타트Law’ 주요구성 : ❶창업절차에 대한 기본 가이드 제공, ❷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자료 및 법무정보 제공, ❸창업가와 스타트업 법률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 마련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활동	1~3월	
	스타트Law 홈페이지 오류 해결·보수	2월	
2/4분기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활동	4~6월	
	스타트Law 홈페이지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	6월	
3/4분기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활동	7~9월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간담회	9월	
4/4분기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활동	10~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과 창업 준비중인 청년 및 법률적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기대효과

- 법률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결 및 창업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청년 등에 대한 법률정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들의 원활한 창업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건수	법률지원 건수 73	57	87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 이래 실적이 감소하던 추세였다가 '22년 목표치였던 80건보다 실적을 초과달성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실적의 평균(72건) 보다 10% 향상된 높은 수치를 '23년의 목표치로 설정</li> <li>○자체평가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대국민 홍보 실적을 1건 당 5점으로 하여 목표치 90점으로 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지원 건수건 당 1점</li> <li>○팜플릿 배포, 인터넷 광고 등 대국민 홍보 (건 당 5점)</li> </ul>	법률지원단 및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법률지원 건수에 팜플릿 배포 등 홍보실적 건수를 더하여 산정

## 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Ⅱ-2-9)

### □ 추진배경

- 새로운 체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필요
- 선진적 통일법 쟁점 연구를 통한 미래번영의 토대 마련
- 통일법제를 준비하고, 실현할 법률전문가 양성
-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북한인권 향상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2개 소위 구성)
    - ※ 북한법제 및 베트남 사례 연구
  - 통일법제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 계간 발행 및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 남북관계 일일스크랩, 북한 실태 분석 등을 통한 통일·남북관계 관련 언론 보도 내용 파악·분석
  - 「통일법제 DB」(www.unilaw.go.kr) 운영(국·영문 홈페이지)을 통한 통일법제 연구 결과 공유 및 연구자료 제공
  - 통일부·법제처 등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통일법제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강화
- 위기 탈북민 발굴·지원 중심의 법률안전망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법률교육 실시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온라인·모바일·대면 법률상담 실시

- 위기 탈북민 대상 지원번호인 1:1 연계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교육 제공을 통한 지원번호인 역량 제고 효율화

- 적극적 제도 홍보를 통한 취약 탈북민에 손내밀기

※ 「동포사랑」 (남북하나재단 격월 발간, 정착사례·지원제도 등을 소개)에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기고 및 포스터·리플릿 배포

○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 북한주민 소유의 남한 내 상속재산 처분 허가 및 재산관리인 감독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 보호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53호 발간	2월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법률지원 교육	2월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3월	
2/4분기	○ 전문직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 개최	4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4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54호 발간	5월	
3/4분기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55호 발간	8월	
4/4분기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10월	
	○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10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56호 발간	11월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2월	
	○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 개최	12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개최	12월	
	○ 베니스위원회 연례보고서 발간	12월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시	연중	
○ 법무연수원 통일교육 실시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북한이탈주민 포함)
- (이해관계 집단) 대법원, 통일부, 법제처, 남북관계·통일법제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및 기타 민간 연구단체

## □ 기대효과

- 남북관계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정비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최소화 준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 정착 지원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운영실적 ( 점 수 )	269.8	336	365	396	○ 최근 4년간 실적 추세치 7.7%보다 10%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8.5%) 설정 ※ 2019년 실적 : 299.8	○ A~D를 합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100점) ▷ 만족이상 80%(90점) ▷ 만족이상 70%(80점) ▷ 만족이상 70%미만(60점) -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 - 기타 통일법무 교육(D) (1회 10점)	· 공문 · 수강자· 수료자 명단 ·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 적 쟁 점 연구 실적 ( 점 수 )	319	409	473	565	○ 최근 4년간 실적 추세치 17.6%보다 10%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19.4%) 설정 ※ 2019년 실적 : 293	○ A~E를 합산 - 학술 등 회의 점수(A) ▷ 학술대회 개최(1회 10점) ▷ 연구회의 개최(1회 5점) ▷ 주제발표(1회 5점) ▷ 토론(1회 2점) ▷ 회의 참석(1회 1점) ※ 개최·참석·발표·토론이 중복 되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계산 - 법령 개정 점수(B) ▷ 법률 개정(1건 10점) ▷ 대통령령 개정(1건 5점) ▷ 부령 개정(1건 3점) ※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회의 등 점수 준용 - 자료집 점수(C)(1건 10점, 200쪽 이상 20점, 등재지 30점,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학술지 게재 1건 5점, 논문 공모전 점수 1건 2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 ▷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 ▷ 위원회 활동(1회 5점) - 연구용역 점수(E)(1건 10점)	· 공문 · 보고서 · 자료집 · 주제발표문 · 지정토론문 · 위원회 운영 현황 · 연구용역 계약서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 ( 점 수 )	319.1	155	146	225	○ 북한 국경 봉쇄 정책으로 인한 탈북민 감소로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횟수 또한 감소 추세이나, 최근 4년간 실적 추세치(-14%)보다 10%이상 상향하고, 최근 4년간 실적 평균(224) 보다 높게하여 목표치 적극 설정 ※ 2019년 실적 : 277 ※ 하나원 법률교육생 현황 - '19년 922명, '20년 214명, '21년 45명, '22년 43명	○ A~D를 합산 - 법률교육 점수(A)(1회 7점)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90%(30점) ▷ 만족이상 80%(25점) ▷ 만족이상 70%(20점) ▷ 만족이상 70% 미만(15점) -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교재 제작 점수(C) (1건 20점) -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 (1건 2점)	· 공문 · 법률교육 현황 ·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 ( 점 수 )	615	708	852	1,018	○ 최근 3년간 실적 추세치 17.7%보다 10% 이상 적극 상향하여 목표치(19.5%) 설정	○ A와 B를 합산 -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점수(A)(1건 3점) - 소송구조 연계 점수(B)(1건 6점)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현황 통계 등

## 10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Ⅱ-2-10)

### □ 추진배경

- '17. 12. 「사법시험법」 폐지로 법조인 선발방식이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수요에 맞는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선발·양성 및 선진 법률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변호사시험제도 도입 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체제로 법조인 배출 형태를 전환한 것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시행 지속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

- 4일간(중간 휴식 1일 포함 시 5일) 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사례형) 시험이 한 번에 치러지는 전 과정(출제·인쇄·집행·채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실력 있는 다수의 검토위원 및 과목별 총괄위원장이 문형별 쟁점 중복 방지, 난이도 조정 및 출제오류 차단 등 문제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
- 가채점회의\*, 채점위원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수렴,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합격인원 결정

\* 채점위원별 채점편차의 최소화와 채점기준의 객관화를 위해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의 채점기준표 작성회의 개최

○ '23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 충실히 구축된 문제은행 및 검토 시스템을 통해 오류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
- 변호사윤리, 법관윤리, 검사윤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변호사 시험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및 절차 개선 추진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및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운영을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 법조인 선발 등 시험방법 개선,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 출제 및 채점기준 수립 등

※ CBT 변호사시험 프로그램 개발('23. 8.) 및 시행('24. 1. 제13회 변호사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및 「법학교육위원회」 참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각 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육제도·시험방법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관련 협조
- 해외 주요국의 시험제도 및 법조인 선발·양성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활동 지속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	1월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1월	
2/4분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4월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4월	
	'24년 시험계획 수립	6월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	6월~7월	
3/4분기	제14회 법조윤리시험 문제 출제	7월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8월	
	제14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9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9월	
4/4분기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11월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변호사시험 응시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졸업생
- 이해관계집단 : 변호사시험 수험생 단체,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단체

기대효과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법적·지적 수준 및 사고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법조인 선발로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법제 선진화와 법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편의 증진(V-1-일반재정④)			
①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1000-1038)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305)		42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점수)	760	736	762	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시험 전반사항을 보다 내실화시킬 수 있는 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준비 및 시행과정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정하고 그 합계를 목표치로 산출</li> <li>- '23년 목표치는 평균 추세치(최근 3년)의 10% 이상 상향하여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문제 이외제기 신청률 10% 이하 달성 - (점수) = 25점 + (10-신청률) × 1점 ※(신청률)=이외제기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li> <li>○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건수×20점)</li> <li>○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 개정(건수×50점)</li> <li>○ 제도개선 실적</li> <li>- 변호사시험 CBT 도입 추진</li> <li>· CBT 관련 계획 수립(건수×5점)</li> <li>· 현장점검·모니터링 (건수×5점)</li> <li>· CBT 프로그램 개발(5점)</li> <li>· CBT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 테스트(건수×5점)</li> <li>· 학생·교수 등 대상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 수립 (건수×5점)</li> <li>·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의 건의 사항 반영 (건수×5점)</li> <li>· 예산 신규·증액 등 확보(건수×5점)</li> <li>- 기타 제도개선 시행(건수×30점)</li> <li>○ 제도 연구·용역 등 (건수×20점)</li> <li>○ 해외자료 연구 및 자료 수집 실적(건수×20점)</li> <li>○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공청회·토론회·내부 회의 참석 및 개최 (건수×20점)</li> <li>○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회의(건수×20점)</li> <li>○ 시험문제 은행구축 (건수×20점)</li> <li>○ 장애인 편의제공(명수</li> </ul>	<p>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보도자료, 관련 공문 등</p>

					<p>×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시험위원회 개최(건수×10점)</li> <li>○시험관련 민원검토 (건수×5점)</li> <li>○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20점)</li> </ul>	
변 호 사 시 험 복 수 정 답 인 정률 2 % 이하 달성(점수)	114	120	114	115	<p>○과거 사법시험의 평균 복수정답 이의제기율(4.1%)과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평균 복수정답 이의 제기율(6.5%)을 함께 고려하여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을 성과지표로 설정</p> <p>- '23년 목표치는 평균 추세치(최근 3년)의 10% 이상 상향하여 설정</p> <p>○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p> <p>- (점수) = 100점 + (2-인정률) × 10점</p> <p>※(복수정답인정률) = 복수정답 인정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p>	정답확정회의 등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기 본 방 향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수사역량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훼손 및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및 다수 시민과 접촉 가능성 있는 업종에의 취업제한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추진

○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범죄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 범죄예방 주요 정책 등을 국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체감도 향상 추진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비행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전문 상담·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소년원 교육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우 제공 및 친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을 교정교육 효과 제고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의사 등 의료인력을

## 기 본 방 향

확보하고,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및 피치료감호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 ○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이 깊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제 실시, 사범별 매뉴얼 활용 등 개별 범죄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도감독 및 맞춤형 상담 지원 강화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정신질환 대상자 상담·치료적 개입 강화

###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 확대를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기반 마련
-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안전 확보,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출소자 등 대상자 적극 채용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 역량 강화,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

### □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수용동 증·개축 사업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노후 교정시설 개선 사업추진을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개선

## 기 본 방 향

-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홍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튜브 및 소셜네트워크 등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교정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정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접견 시스템 구축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개선으로 더 나은 대국민 교정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재범고위험군 범죄자 대상 정밀분류심사를 통한 처우계획 수립으로 심리치료,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집중처우를 실시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평가 후 가석방 실시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유망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교도작업을 통한 실무중심 기술 숙련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외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취·창업 교육 및 맞춤형 취업 알선으로 사회복귀 지원
- 다양한 수형자 교정교육과 귀휴,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효과 극대화
- 교정시설 내 각종 의료환경 개선 및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 효과 달성
-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중독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사범 등 특정 수형자에 대해 전문화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15	2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재범률(%)</li> </ul>
III-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small>(공통)</small></li> <li>▪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li> </ul>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li> <li>▪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li> </ul>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홍보활성도(점수)</li> <li>▪ 온라인홍보실적(점수)</li> </ul>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예방교육평가점수(점)</li> <li>▪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li> </ul>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달성도(건)</li> </ul>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율(%)</li> </ul>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li> </ul>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 사회복귀율</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li> <li>▪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li> </ul>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실적(점수)</li> <li>▪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노력 실적(점수)</li> </ul>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홍보활성도 (점수)</li> <li>▪ 온라인 홍보 실적(점수)</li> </ul>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li> <li>▪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li> </ul>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센터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체계 수립 실적</li> <li>▪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가석방 심층면접 실적</li> </ul>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공통)</li> <li>▪ 직업훈련수형자 만족도(점수)</li> </ul>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명)</li> <li>▪ 사회적처우 실적(점수)</li> <li>▪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li> </ul>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li> <li>▪ 건강검진 실시율(%)</li> <li>▪ 향정신성의약품 교부허가 감소율(%)</li> </ul>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li> <li>▪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점수)</li> </ul>

(1) 주요내용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수사역량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훼손 및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및 다수 시민과 접촉 가능성 있는 업종에의 취업제한 등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추진

□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 성폭력·아동학대·마약·스토킹 범죄 및 정신질환자 등 재범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현장 위주의 밀착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및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대면상담 등 전문 처우프로그램 실시 확대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분류센터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로 범죄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집중처우계획 수립, 수형생활 중 처우 이행평가 내실화로 재범률 감소 및 사회안전 기여
- 강력사범 등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개선 정도, 출소 후 취업·치료 계획과 재범환경 등을 확인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재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 다양한 교정정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현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건축 추진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인권

친화적 민원 서비스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형자 교정교육 등 처우 강화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심리치료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교정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및 재범방지

## (2) 성과지표

###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보호관찰 재범률(% (하향지표)	7.2	7.2	7.3	6.4	6.0	6.5	최근 3년간 평균 6.57%보다 0.07%p 감소한 6.50%를 '27년 목표치로 적극 설정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 /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보호관찰통계분 석시스템

## (3) 기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http://www.moj.go.kr))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http://www.cppb.go.kr>)
-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www.pist.go.kr>)
-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corrections.go.kr>)
- 교정본부 TV(교정본부 유튜브)
- 교정본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jcor>)
- 교정본부 트위터(<https://twitter.com/mojcor>)
-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wUAXed](https://pf.kakao.com/_wUAXed))

## (1) 주요내용

##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감독 체계 확립, 체계적 심리치료 운영시스템 구축,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수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 점검을 위한 디지털 분석 확대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 실시
-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운영효율성과 수사 전문성 제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범죄 대응력 강화
- 강화형 전자장치 업무 현장 적용 추진, 맞춤형 감독정보 알림 기능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훼손 및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다른 범죄로 수감 중 전자장치 부착기간 정지, 배달대행업 등 다수 시민과 접촉 가능한 업종에의 취업제한 등 실효성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 추진
-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체점검 강화, 전자감독대상자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정확성 제고,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등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

## □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국민적 관심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 이해도와 신뢰도 강화
- 우수사례, 미담사례 발굴과 국민의 시선에 부합하는 정책홍보로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개별상담 강화 및 개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비행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학교·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년원생의 비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실시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조성하여 친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
-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 여부 확인 및 자립 역량 제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등을 통한 출원생 지원 강화

###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정신과 전문의, 일반진료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인력 등 적정 의료인력 확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실당 병상 수 축소(8→6인실),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1~1.5m) 등 시설 개선
-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치료방안 마련
  -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병동별 작업치료 실시
  - 피치료감호자 심신안정을 위한 스노젤렌\*, 원예치료활동 등 정신 재활 치료프로그램 운영

\* 스노젤렌(snoezelen)은 빛, 소리, 냄새, 촉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 주의집중력 향상 및 시각, 청각, 후각 등 발달에 효과적임

- 「발달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력 향상

#### □ 재범방지를 위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사범에 대해 수시 출장면담 등 현장중심 위주의 지도감독 실시 및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
  -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기적 사례관리 회의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 등 정보공유 확대
  - 성폭력·마약 사범 등 사범의 변화 동기 유발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프로그램 진행
  - 성폭력·마약사범 및 정신질환 대상자 고위험군을 판별, 전문가 연계 상담, 병원 연계, 증상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제공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신종 마약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마약류 약물검사가 가능한 ABON 약물검사 간이시약 검사 확대 실시
  -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대면상담 등 소년보호 관찰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운영
- \* 상담전문가가 소년 외출제한명령 야간시간대에 전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층상담 등을 진행
- 인권친화적인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감독방식 확대를 통한 소년 대상자 재범방지 역량 강화

##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법무보호 대상자 자립지원 추진 역량강화 및 고용기반 확대
- 법무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조속한 자립 성공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지원사업, 숙식 제공 등 부가서비스 강화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정책 홍보 활성화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공통)	89.03	89.17	88.31	88.37	'18.~'22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 실적평균값 87.88%에 연평균 증가율 0.56%를 반영한 값 88.37%를 '23년 목표값으로 설정 ※ 사회정착률 : 소년원 출원 후 6개월간 사회정착 현황(적응, 위험, 부적응) 중 “적응” 상태의 매월 누적 측정값 ※ 사회정착 현황 : 적응(재학, 취업, 진학·취업준비), 위험(무직, 가출), 부적응(재비행)	[인정적 사회정착 인원(누계) / 소년원 출원(9·10호)인원(누계)] × 100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입력결과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입력결과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하향지표)	10.6	10.5	10.4	10.3	강력사범, 성폭력 등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적극적 개입 및 재범방지를 위해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 재범률(10.5%) 이하로 적극 설정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자수 /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실시인원 × 100	보호관찰통계정보시스템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조○○·박○○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 및 주거이전 이슈 등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감독체계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및 다수 시민과 접촉 가능한 업종에의 취업제한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마련 추진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등록·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 등록 등 엄정 관리

#### □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현안을 홍보하여 국민적 관심 유도
- 국민여론, 언론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국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 소년범 재범률 증가 등으로 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초기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상담·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초기 비행예방 기능 강화

## □ 소년원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 협력 강화 필요

- 소년원학생 중 학업연계 수요 증가로 초·중등교육과정은 증설되었으나, 이에 따른 교사인력은 필요만큼 증원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 발생
-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목 및 소양교육이 일반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필요

##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정신과 전문의, 일반진료과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 '22. 12 기준 의사 충원율 525%에 불과하여, 의사 확보 등 의료공백 최소화
    - ※ 민간대비 낮은 급여,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
- 간호인력 충원 등 의료인력 확보 시급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병실당 병상 수 축소로 유희병동 개설·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
  - 피치료감호자 진단·심리치료 및 사회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필요
    - ※ 발달장애인 전문병동 운영을 위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확충
- 과밀수용 해소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320병상)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 및 간호인력 확보 필요
  - '20. 12. 착공, '23. 10. 완공 예정으로 운영 인력 수급 필요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범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늘고 범죄도 더욱 흉포화되면서 한정된 보호관찰 인력 및 예산으로 관리·감독에 한계 발생 우려

- 재범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

□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대상자를 취업 시킬 수 있는 취업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 및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 강구 필요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Ⅲ-1-①)

#### □ 추진배경

-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강력범죄 방지대책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실시

-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출소 전 선제적 관리\*, 1:1 전자감독 지정 확대\*\*, 주간 생활계획보고를 통한 허위진술 확인 및 행동통제 강화 등 고위험자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감독 체계 확립

\* 출소 전 사전접견,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변경, 1:1 전자감독 사전 지정 등

\*\* 1:1 전자감독 대상자 '22년 72명 수준에서 '23년 98명 수준으로 확대

- 본소 단위 전문 심리치료 요원 배치, 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등 체계적 심리치료 운영시스템 구축
- SNS를 이용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수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 점검을 위한 디지털 분석 확대

※ 디지털 분석 적극적 활용을 위해 디지털 분석 획득장비 도입 추진

##### ○ 신속수사팀 수사 전문화를 통한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범죄 대응력 강화

- 허위보고 등 지도감독 불응자, 효용유지의무 위반 의심자, 치료 프로그램 불응자 등 수사분야 확대를 통한 피부착자 행동통제 강화
- CCTV 분석\* 전문요원 양성, 보호장구 사용훈련 및 체포술 교육 정례화 등 수사·검거 역량 강화

\* CCTV 영상분석 시스템 도입 추진

- 전자장치 훼손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국 단위 특별수사대\* 편성 및 운영 추진

\* 수도권, 남부권 2개 권역의 특별수사대 편성·운영 추진

- 지역 경찰청 및 철도경찰대 등 훼손사건 대응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기관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 추진

## ○ 첨단기술을 활용한 훼손 및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 훼손 방지성능을 강화한 강화형 전자장치\* 시범운영 및 업무 현장 적용 추진

\* 훼손 방지를 위해 스트랩 내장재 대폭 강화, 금속프레임 기반 외형으로 훼손 욕구 억제

※ '22. 12. 개발 완료, '23.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적용 추진

- 대상자의 범행시간, 범죄수법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감독정보 알림 기능\* 개발 및 주거침입범죄 대응 역량 향상\*\* 추진

\* 대상자의 범행시간·범죄수법 등을 고려, 대상자가 유사 범죄환경에 노출 시 담당직원에게 정보 전달

\*\* 주거침입범죄 대응 시스템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 추진

##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마련 추진

- 우리나라의 제도 및 현실적 환경을 고려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 정지 추진

※ '22. 12. 28. ~ '23. 2. 6.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가 배달대행업 등 불특정 시민과 접촉 가능한 특정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및 이행 여부 관리 철저

○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

-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 매월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일치 여부 점검
- 전자감독대상자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정확성 제고
  - ※ 신상공개된 전자감독대상자의 거주지 정보가 보호관찰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면밀히 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하고, 공개정보에 즉시 반영
-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상등록 대상자 관리 협업체계 강화
  - ※ 연 3회 정기회의 개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	1월	
	○긴급상황 시 경찰 정보공유를 위한 MMS 전송기능 개발	1월	
	○신규 전담 보호관찰관 및 전담직원 간담회 개최	2월	
	○디지털 분석 획득장비 도입	3월	
	○경찰 신상정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3월	
2/4분기	○맞춤형 감독정보 알림 기능 개발	4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체포술 교육 실시	5월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6월	
3/4분기	○전자감독 심리치료 집행체계 개편	8월	
	○신규 전담 보호관찰관 및 전담직원 간담회 개최	8월	
	○전자감독대상자 준수사항 부과·운영실태 점검	9월	
4/4분기	○신상정보등록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10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워크숍 개최	11월	
	○전자감독 심리치료 집행매뉴얼 개발	12월	
연중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실태 점검	연중	분기 1회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실무과정 교육 실시	연중	분기 1회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 및 직권정정	연중	매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운영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여성가족부(신상정보 공개·고지 주관), 경찰청(신상정보 확인 및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공조), 검찰청(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수사·송치 및 교육 관련),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CCTV 연계 관련)

□ 기대효과

-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효과적 운영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최대한 억제
  - ※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 '21. 1.65% → '22. 0.99%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추진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생활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 I -1-일반재정②)				
① 보호관찰(1635)				
▪ 전자감독(301)	일반회계		274	30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 (1.68)	- (1.65)	신규 (0.99)	1.37	○ 최근 3년('20년~'22년) 평균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1.44% 대비 약 5% 감소한 1.37%를 목표치로 설정	○ 연중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건수/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건수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통계자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속입력률(%)	92.5	92.7	96.4	97.4	○ 판결문과 신규제출서 접수(등록요건)한 날로부터 6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된 입력률로 측정 - '22년 등록 기준일을 30일 → 6일로 단축*하여, '22년 실적(96.4%) 대비 1% 상향한 97.4%를 목표치 설정 * 법정 제출기한인 30일 경과 후 등록하여야 하는 직권등록 사건을 산식에서 제외	○ (6일 이내 등록건수/ 신규*등록건수) × 100 * 직권등록사건 제외	신상정보등록관리 시스템 통계 보고

##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Ⅲ-1-②)

### □ 추진배경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 범죄예방 주요 정책 등을 국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여 정책, 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체감도 향상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 홍보 활성화)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집중 홍보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추진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현안을 홍보하여 국민적 관심 유도
    - ※ 전자감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과 현안은 기획보도, 보도자료, 홍보물(영상, 포스터 등)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주요 내용과 계획 등을 상세히 제공
  - 국민 여론, 언론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국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등 적극적 대응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추진
  - 소관업무별 우수사례 등 다양한 미답사례를 발굴하여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 미답사례·우수사례집,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국민 등 정책고객(약 22,000명)에 배포

- (온라인 홍보 강화) 확산성과 영향력이 높은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매체 활성화 및 대표 홈페이지 등 정보 접근성 개선
  -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정책, 소관 업무 등을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웹툰, 영상 등으로 제작·배포하여 국민의 정책이해도 제고
    -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 행사, 교육자료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로 제작하여 유튜브(범죄예방 365) 등 온라인 매체에 적극 홍보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홈페이지 등)을 상시 개선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모바일 UI 최적화 추진
- (만족도 의견 수렴) 대표 웹사이트 게시판, 홍보물 포스팅 댓글 등을 통해 홍보 만족도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 노력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언론매체 인터뷰 및 직원 기고	1~3월	
	○ 범죄예방정책국 홍보영상 제작	2월	
2/4분기	○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영상 제작	4~5월	
	○ 아시아 태평양 보호관찰 컨퍼런스 개최	5~6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5~6월	
3/4분기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7~8월	
	○ 신상정보 등록제도 홍보영상 제작	7~9월	
4/4분기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11~12월	
	○ 범죄예방정책국 웹진(소식지) 발간	11~12월	
	○ 미담·우수사례집 발간	11~12월	
	○ 범죄예방정책국 주요 정책, 방송 등 기획보도	연중	
	○ 주요 정책, 행사 등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	연중	
	○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등 세부 개편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홍보 강화를 위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언론기관 및 관련 유관 단체 등

## □ 기대효과

- 정책, 현안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이해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미담사례와 국민의 시선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책홍보활성도 (접수)	-	-	신규	180	○신규 관리과제로 전년도 정책 홍보실적을 기준으로 실적 대비 5%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 '22년 보도·설명자료 배포건수 19건, 홍보 웹진 발간 2건, 홍보영상 제작 24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4건	○보도·설명자료, 기고, 인터뷰 등 배포 (건당 1점) ○범죄예방정책국 홍보 웹진 발간 (건당 10점) ○홍보기획 영상물 제작 (건당 5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 제작 (건당 3점) ○정책홍보행사 기획 등 (건당 10점)	해당자료, 결과보고, 동영상 등 관련 자료
온라인 홍보실적 (접수)	-	-	신규	2,130	○신규 관리과제로 작년 말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2,007명과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 21건 등을 기준으로 실적 대비 5% 상향 하여 목표 설정	○유튜브 구독자 수 (명당 1점) ○홍보영상 (유튜브 등) '좋아요' 건수 (건당 1점)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일반) (건당 1점)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기획) (건당 5점)	온라인 홍보제널 구독자 현황 및 포스팅 자료 등

###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Ⅲ-1-③)

#### □ 추진배경

- 소년범죄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에 따라 초기 비행단계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개입을 통한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초기비행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비행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생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 동기 강화 및 특성 파악,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 비행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청소년 마약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교육 의뢰된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실시
  - 마약퇴치본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강사 활용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 강화
  - 마약류 관련 교육생에 대해 재비행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전문기관 연계 상담 추진
- 유관기관 연계 강화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학교·검찰·법원에서 교육 의뢰 된 초기비행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체계적인 비행예방교육 실시
- 비행예방교육 및 비행원인진단(상담조사) 전문성 강화
  -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향상 교육 실시
  - 법원 의뢰 상담조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상담조사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상담조사서 평가 확대 및 피드백 제시, 사례회의 개최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점검 계획 수립	1월	
	○ 직원 직무향상(비행예방교육 실무) 교육 과정 운영	2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계획 수립	2월	
	○ 상담조사관 전문성 향상 계획 수립	2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간담회 개최	3월	
2/4분기	○ 상담조사서 1차 평가	4월	
	○ 상담조사 권역별 사례회의(수도권·충청·강원)	5월	
3/4분기	○ 비행예방 전문 교육과정 운영 평가	7월	
	○ 직원 직무향상(상담조사 실무) 교육 과정 운영	9월	
	○ 상담조사서 2차 평가	9월	
4/4분기	○ 상담조사 권역별 사례회의(영남·호남·제주)	10월	
	○ 상담조사서 3차 평가	11월	
	○ 비행예방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소유예·보호처분 대상자 등 초기 비행 청소년 및 보호자, 지역사회 일반학생 및 교사 등
- (이해관계집단) 교육청(학교)·경찰·검찰·법원·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 □ 기대효과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개입, 선도 활성화를 통해 재비행 예방 및 상습 비행자로의 전이 차단
-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및 보호자 교육·교원 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소년보호(II-1-일반재정③)				
① 소년보호(1632)			57	58
▪ 청소년비행예방(301)	일반회계		57	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점)	91.8	93.08	92.83	91.4	대안교육·상담조사 교육이수자 대상 무기명 교육만족도 조사 지표로써,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균(90.9)보다 0.5% 상향한 91.4점으로 목표치 설정	교육수료자 교육평가 점수의 합 / 교육평가 참여 인원	비행예방교육평가결과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입력결과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	-	-	신규	72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하반기 각 2회 비행예방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문교육과정: 개별상담 등을 통한 교육생 특성 파악,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 편성·운영, 교육 평가 실시 등	전국 18개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비행 예방 전문 교육과정 운영 실적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자료

####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Ⅲ-1-④)

##### □ 추진배경

- 소년원생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준별, 특성별 맞춤형 처우 제공
- 시설개선을 통한 친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 및 교정교육 효과성 제고 도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년원 인성교육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소년원생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 비행성을 개선
  - ※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
- 기초학력이 부족한 소년원 학생들의 학업 신장 소년원학교 교육 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교사 파견 등 교육부 협력 강화
- 다인실 위주의 소년원 생활관을 정원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조성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실시
  - ※ 전국 10개 소년원 중 8개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완료, '23년 서울 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중
-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을 조성하는 등 비행원인진단 및 분류심사 전문성 향상 노력 계속
  -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분류심사원'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개정 추진
- 교정교육 효과성 확인을 위해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여부를 확인하고 출원생 중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교육·수용전담제 근무 체계 개편	2월	
	○ 소년원학교 교육지원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3월	
	○ 위탁소년 마약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통합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발간·배포	4월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점검 계획 마련	4월	
	○ 전국 인성교육 강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5월	
	○ 소년원학교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6월	
3/4분기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전국 확대시행	7월	
	○ 촉법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배포	9월	
	○ 전국 교무과장회의 개최	9월	
4/4분기	○ 전국 소년보호기관 분류심사관 컨퍼런스 개최	10월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시설조성 기본 설계 완료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10호), 법원소년부의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18조),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각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 (이해관계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대한결핵협회 등

**□ 기대효과**

- 소년원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처우 프로그램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 실시 및 자립역량 마련
- 학업연계, 취업알선,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년	'23년
소년보호(II-1-일반재정③)				
① 소년보호(1632)		일반회계	291	310
▪ 소년원생수용(300)			234	2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 달성도(건)	4.06	4.01	4.36	4.35	최근 3년간('20.~'22.) 평균실적 (4.14건)에 5%를 상향한 4.35건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연간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이수자 교육실적 (검정고시 합격, 자격취득, 경시 대회 입상, 진학, 학적회복, 전·편 입학, 졸업장취득) / 학과 및 직업 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수료자	소년보호교육종합 관리시스템(TEAMS) 입력결과

## ㉔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Ⅲ-1-⑤)

### □ 추진배경

- (목적)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등 피치료감호자별 증상에 맞는 치료·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 (치료활동)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 약물치료, 정신 재활치료교육, 단약교육, 인지행동치료, 직업훈련 교육, 심신안정실 운영 등을 통해 증상개선 도모
- (사후관리) 국립법무병원 출원 후 증상악화로 인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외래진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 ※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최장 20년 동안 무상으로 외래진료 지원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인력 채용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
  - 의사 채용방법 다양화를 통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 각 의과대학, 의사협회, 메디케이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뉴스레터’ 등 의료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채용 홍보 강화, 퇴직 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 보건복지부 업무협의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및 공중보건 의사 증원 요청
    - ※ 공중보건 의사 운영지침 개정의견 제출 : 국립법무병원에 치과·한 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외에 의과 1인 추가 배치 요청
  - 민간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신과 전문의 처우개선 추진
    - ※ 보수·수당 인상, 관사 리모델링, 해외학술대회 활동 지원 등
  - 병동 근무여건 개선 및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증원 추진

※ '23년 간호인력 12명 증원, '24년 간호사 등 35명 의료인력 증원 추진

○ 치료환경 개선으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환경 제공

- 수용과밀 해소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320병상 규모의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완공 예정('23.10.)
- 병실당 병상 수 단계별 축소, 병상간 이격거리(1~1.5m이상) 확보
- 피치료감호자의 심신안정을 위한 스노젤렌\* 프로그램, 원예치료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스노젤렌 효과 :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범주장애, 치매 대상군에게 감각경험 제공, 인지기능 향상 치료, 주의집중력 및 시지각 향상

- 피치료감호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23.5~11.) 하는 등 치료감호 내실화 촉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피치료감호자 참여기회 제공,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유동적 운영 예정

- 1인 가구 및 무의탁환자 등 보관금이 부족한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 생활 지원을 위해 갱생보호육성기금 연계를 통한 보관금 지원 추진

※ '21년 1,200만원, '22년 1,000만원, '23년 1,100만원

- 향정신성 등 의약품 처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실시간 연계 추진

○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 「발달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등 외부 연구용역 및 자체 임상연구를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정신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계획 수립	2월	
	○ 공중보건 의사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보건복지부)	2월	
	○ 의무직 채용 완료 배치	3월	
2/4분기	○ 각종 연구용역 프로그램 등 계약	4월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조달계약 진행	4월	
	○ 갱생보호육성기금 활용 피치료감호자 원호 계획 수립	4월	
	○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진행 상황점검	6월	
3/4분기	○ 각종 연구용역 프로그램 등 중간 점검	9월	
	○ 병동 등 노후시설 개선 추진 상황점검	9월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 진행 상황 점검	9월	
4/4분기	○ 원예치료시설 조성 진행 상황점검	10월	
	○ 전공의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보건복지부)	10월	
	○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진행 상황 점검 및 개원 준비	10월~12월	
	○ 각종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점검 및 완료	12월	
	○ 의료인력 및 병동 운영인력 채용 절차 진행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립법무병원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와 피감정유치자 및 출원자
- (이해관계집단) 보건복지부(국립법무병원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 치료 및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법원·검찰청(형사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 참여)

□ 기대효과

- 내실 있는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료의 질 향상
- 정신질환,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등 피치료감호자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정신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실화로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치료감호( I -1-일반재정②)				
① 치료감호(1634)		일반회계	99	117
▪ 치료감호자수용관리(300)			99	1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수료율(%)	- (71)	- (93.9)	신규 (76.5)	82.1	○ '23년 신규 지표, 국립범무병원 수용환자의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산출 ※ 3년 평균(79.7%) 대비 103% 상향 설정	○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율 {(당해년도 수료인원/ 당해년도 실사인원)} ×100 *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대상자	국립범무병원 실적 보고

##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Ⅲ-1-⑥)

### □ 추진배경

- 보호관찰 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재범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강력범죄를 방지함으로써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구현할 수 있음
-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자 적극 보호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초기 고위험자 선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연계상담 및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 실시
  -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대상자의 피해자 정보 파악, 주기적 재피해 여부 확인 등 피해자 적극 보호
  -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미부과자에 대해 준수사항 추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와 비대면 면담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등 피해자 보호 대책 실시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약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월 1~2회 정기 및 수시 약물검사 실시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철저
  - 최근 마약범죄 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펜타닐·페타민 등 신종 마약 투약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진단시약으로 검사도구

## 교체\* 적용

\* 舊 간이시약기(ACCU, 6종 검사) → 신규 간이시약기(ABON, 19종 검사)

- 중독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연계상담 등 치료적 개입 병행
- 국조실 주관,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참여, 마약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강화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지속 점검
-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 치료적 개입 강화
  - 정신질환 의심자 전원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증상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조기 개입
-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를 활용 전문 프로그램 실시 확대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프로그램,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사 간 1:1 멘토링 프로그램, 범죄피해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적극 실시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원호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하여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 학업 중단 대상자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실시, 정신질환 심리치료 지원 등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3년 보호관찰기관 지도방문 및 상시점검 계획 수립	1월	
	· 마약류 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안 수립	2월	
	·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관 간담회 개최	2~3월	
	· 소년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개발 및 시범실시 확대	3월	
2/4분기	· 제재조치 전담팀 시범운영 확대 추진	4월	
	·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공동 개최	5~6월	
	· 위험요인별 개별처우 체계화(콜코칭, 회복적사법 등)	6월	
3/4분기	· 소년 보호관찰 실무역량 교육 강화	9월	
	· 조사업무 신규담당자 직무교육	9월	
4/4분기	· 정신질환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10월	
	· 한국보호관찰 추계학술학회 개최	11월	
	· 소년 보호관찰 업무 여건 개선 및 소통 강화	12월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중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업무편람 개편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 프로그램, 상담, 교육 등을 처우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 기대효과**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통해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II-1-일반재정①)				
① 보호관찰(1635)		일반회계	38,320	44,679
			(38,320)	(38,320)
▪ 보호관찰활동(300)			13,277	14,002
▪ 전자감독(301)			25,043	30,6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신규지표)	- (5.7)	- (5.2)	신규 (5.3)	5.3	최근 3년간 평균인 5.3%를 '23년 목표값으로 설정	당해연도 고위험대상자 재범자 수/ 당해연도 고위험대상자 실시인원 x 100  ※ 고위험대상자 :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유괴, 마약, 보복 등 7개 사범 및 가중료·가출소,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 형집행정료 후 보호관찰, 치료명령	보호관찰 통계 정보시스템

## 7]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Ⅲ-1-⑦)

### □ 추진배경

- (목적)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억제로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 (성공적인 사회정착)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로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도모
- (사회안전망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안전 확보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보호 대상자 자립 지원 추진 역량 강화
  - 취업지원사업 '23년 사업계획인원 8,000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참여 수혜자 확대 추진(연중)
  -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및 직무교육을 통해 최근 고용분야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전담 인력의 현장감 있는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추진(3,4월)
  - 권역별 실무자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취업지원 성과 사례 자체 분석 및 발전방안 공유(분기)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감안한 대면·비대면 병행 지원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 유지 및 강화 추진(연중)
  -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직업훈련교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현장과 소통하는 효율적 사업 여건 마련 추진(연중)
  - '22년 성과 분석 결과 공유 및 차년도 중점 추진 사항 논의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개최(12월)

○ 지역사회 참여 독려를 통한 법무보호 대상자 고용 기반 확대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 채용 희망 고용협력기업 지속 확보를 통해 출소자 등 대상자 일자리 기반 확대(연중)

※ '09. ~ '22. 고용우수기업 67개 기업체 인증

- 취업분야 자원봉사자 조직인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지속 운영을 통한 대상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일자리 기반 확대 분위기 조성(연중)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정책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법무보호위원\*, 기업, 민간단체 등 대국민 정책 홍보 및 대상자 지원 활동 동참 독려 추진(연중)

\*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자원봉사자

- 법무보호사업 홍보 인쇄물(브로슈어) 및 정책 성과 언론보도 추진, 법무보호연감 발간 및 배부를 통한 정책 홍보 추진(2,3,7월)

- 법무보호명문가\* 인증 실시로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추진(분기)

\*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이 법무보호사업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가정

○ 대상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지속 운영

- 3자 협의회\* 지속 운영으로 대상자의 법무보호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합동 노력 추진 (분기)

\* 범죄예방정책국(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 교정본부(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산하 공공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검찰과 협업을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법무보호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갱생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 추진(연중)

○ 조속한 자립 성공을 위한 부가 연계서비스 강화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대상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연중)
  - ※ '22년 신규 지원물량 154호('06.~'21. 임대주택 2,688호, 대상자 3,645명 지원)
- 무의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지원을 통해 출소 직후 사회적응 기반 제공 지속 추진(연중)
  - ※ 전국 지부(소) 26개소에서 '숙식제공지원 생활관' 운영 중
- 숙식제공지원 생활관의 내실있는 운영 및 생활 대상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관제시스템 확대 운영 및 1인 생활관 리모델링 실시 추진(연중)
  - ※ 중앙관제시스템: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 취약시간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단일화
- 교정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자녀학업 지원 및 민간기업(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가족지원 사업 전개(연중)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무보호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2월	
	○ 취업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부	3월	
	○ 공단·보호관찰·교정 3자 본부 협의회 개최	3월	
	○ 법무보호 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성과 언론 보도 추진	3월	
2/4분기	○ 취업 전담 인력 전문화 교육 실시	4월	
	○ 공단 소식지(아름다운 동행) 발간 및 배부	5월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6월	
	○ 공단 숙식제공 생활관 중앙관제시스템 확대 운영	6월	
3/4분기	○ 상반기 취업지원사업 실적 점검 및 개선 대책 수립	7월	
	○ 법무보호사업 관련 법무보호연감 발간 및 유관기관 배부	7월	
	○ 제1호 '법무보호명문가' 인증	7월	
	○ 공단 소식지(아름다운 동행) 발간 및 배부	8월	
	○ 교정기관 송출용 보호사업 안내 동영상 제작	9월	
4/4분기	○ 성과지표 중 미진 분야 점검 및 달성 방안 마련	10월	
	○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11월	
	○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실시	12월	
	○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출소(예정)자 등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 국민(광의의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주, 취업알선 보호위원 등 법무보호사업 지원 활동 자원봉사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

## □ 기대효과

- 취업을 기반으로 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 안착은 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의 경제활동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대상자 스스로 뿐만이 아닌 가정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범죄에 대물림 방지 효과에도 기여
- 대상자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자원봉사자 위촉, 활동 독려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호적 여론 형성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대
-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 지원은 조속한 사회복귀에 따른 재범억제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기여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수혜자사회복귀율 환산 점수	60.8	61.1	62.9	63.0	○목표치 산출근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근 3년('20~'22) 평균 실적과 직전연도 실적 중 높은 실적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나, '22년도 신설된 지표로 전년도 실적 대비 0.1 증가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	주요 갱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복귀율에 대한 환산 점수 ※(일자리확보율×0.375)+ (안정적 주거확보율×0.325)+ (자립성공율×0.300)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자료 표집

## (1) 주요내용

##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이전과 수용동 증·개축으로 추가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인권보장

##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정행정 주요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교정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거나 SNS 홍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 업무 실무자 간담회 개최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굴

##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고위험군 수형자 개인별 처우계획에 따른 집중처우 강화
  - 재범고위험군 대상 심리검사, 상담 등 정밀분류심사, 재범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처우계획(교육·심리치료 등) 수립 및 처우

이행평가 내실화로 재범위험성 관리

- 강력사범 등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개선 정도, 출소 후 취업·치료 계획과 재범환경 등을 확인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재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출소 전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 취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생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형자 직업훈련의 품질개선 지속 추진
- 직업훈련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소년수형자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과교육 특화 기관 운영 등 교정교육 강화 추진
- 인성 변화를 통한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주제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중인성교육 운영
- 귀휴, 가족 접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수형자 개개인의 맞춤형 사회적 처우 실시
- 수형자 교정·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송콘텐츠 개편 및 개발

##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다각적인 의료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으로 의료인력 직무역량 강화
- 정신질환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강화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정시설 내 돌연사 예방
-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의료장비 현대화와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확대를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전담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수형자에 대해 중독재활·치료 역량 집중
  - 성폭력사범 등 특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원인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정을 구분하고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실시
  - 스토킹사범 등 신규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특성 연구 및 특화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추진
- ※ '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수명령 신설
-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수용자 전문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 국가자격증 취득지원, 민간자격증 취득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원 전문성 강화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공통)			104.3	104.3	-최근 5년간('18년~'22년) 수용률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정원×100	자체통계 자료
교육 교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74	74.5	75	75.5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방식, 수용생활 도움여부, 출소 후 도움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설문조사하여 전체 응답자수 중 만족 이상 응답한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산정  -최근 2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 실적이 둔화되었으나,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범위(0.5%)내 성과 목표 설정	(만족이상 응답자 수/총 응답자수) ×100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분석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 교정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국민과의 거리감 상존

- 주요 교정정책 시행 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언론인,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교도관, 수용자)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정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 대응 강화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등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사후 조치 강화
  -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언론기사 등 잘못된 언론보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 정정 요청, 설명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통한 언론 대응 강화

##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코로나19 완화되었음에도 스마트접견 이용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주기적으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운영실태 점검·개선 필요사항 발굴하여 적극 반영

##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현재 4개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대상 심리검사, 심층 상담 등 정밀분류심사를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체계적 집중관리는 흉악범죄자 일부만 되고 있는 상황
- 강력사범 등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개선의지 및 심리상태, 사회복귀 준비상태 등 재범위험성에 기초한 실질적인 가석방 심사를 위해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내 심층면접관 등 전담인력 증원 필요

## □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코로나19가 완화되었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 원자재가격 인상 등 경제 상황 악화로 교도작업 생산실적 및 정역집행률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취업 협력 업체 경영난 및 폐업 등으로 구직 활동이 쉽지 않지만 교도작업 성장동력 발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다양한 구직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시행

- 수형자의 취업장벽 해소와 안정적 취업처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각종 수형자 취업연계 확대 및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후관리 도모

##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한정된 예산과 시설 등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교정에 대한 인식 제고
  - 내부 전문인력 양성 및 외부 전문 강사진 풀을 지역별로 통합관리
  -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등과의 연계로 상호 보완·협력
  - 국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팸플릿 등 홍보

## □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활동 강화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반입 전면 제한으로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의 반발 예상 → 수용자 및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철저 및 초빙·원격 진료 확대
    - ※ 개정 사항 : 의무관의 진료(초빙, 원격, 외부병원 진료 포함) 이외 대리처방에 의한 오·남용 약물의 교부(차입) 허가 원칙적 금지
  - 교정시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도입 시 교정기관 명칭 노출로 수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시스템상 교정시설 명칭 변경 등 개인정보 강화 시스템 도입 필요

##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22년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통합정원활용제 시행으로

마약류사범 전담 치료·재활 부서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

-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내의 역할,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한시)조직 신설 등 마약류사범의 중독치료·재활체계 구축에 각고의 노력

#### (4)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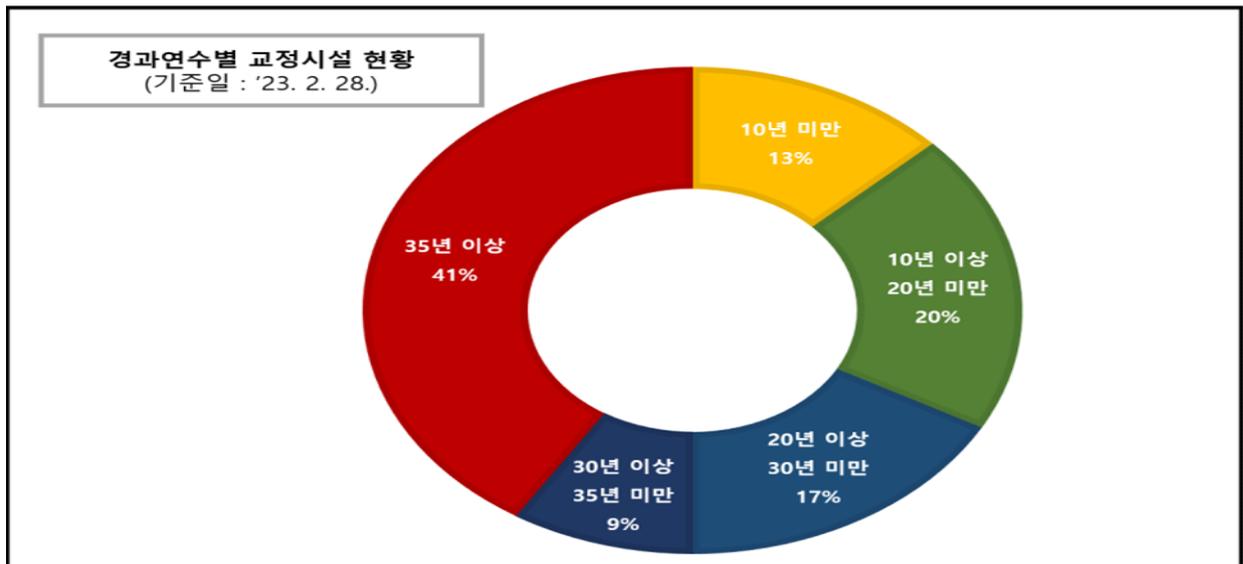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http://www.moj.go.kr))
-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corrections.go.kr>)
- 교정본부 TV(교정본부 유튜브)
- 교정본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jcor>)
- 교정본부 트위터(<https://twitter.com/mojcor>)
-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wUAXed](https://pf.kakao.com/_wUAXed))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Ⅲ-2-①)

#### □ 추진배경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으며, 수용비율이 100% 이상인 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밀수용 해소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시설이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전 및 신축, 시설환경 개선이 시급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신축 및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련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관계 부처·국회·지자체·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 수용동 증·개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개선
  - 기존의 수용동 증·개축 및 시설 내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수용거실 추가 확보 및 과밀수용 완화
  - 노후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 현대화 추진
- 수용자 인권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생활 환경 개선 지속 추진
  - 노후된 보호실·진정실의 냉·난방 및 방음 설비 보완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 보호
  - 교정시설 석면 함유 건축자재 철거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확보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간접난방 방식에서 직접난방인 온돌방식으로 개선하여 수용자 처우 향상
  - 수용거실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여 청결한 수용생활 환경 조성 및 수용자의 인권신장 도모
  - 수용동 내진보강 사업을 통한 수용 생활의 안전성 확보
  - 수용동 외벽단열, 노후 창문 교체, 옥상 누수 보강으로 단열효과 극대화 및 에너지 절약
  -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유사시 초동대처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23. 1~3월	
	○ 신·증축 관련 기관 협의	'23. 1~3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23. 3월	
2/4분기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23. 4~6월	
	○ 신·증축 관련 기관 협의	'23. 4~6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23. 6월	
3/4분기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23. 7~9월	
	○ 신·증축 관련 기관 협의	'23. 7~9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23. 9월	
4/4분기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23. 10~12월	
	○ 신·증축 관련 기관 협의	'23. 10~12월	
연중	○ 소속기관 실무자 워크숍 등 직무교육 시행	'23. 1~12월	
	○ 수용환경 개선 공사 착수 또는 준공	'23.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생활 환경 개선으로 인권이 향상되는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기능 강화로 안전한 사회가 보장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설 조성 및 수용생활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재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

□ 기대효과

- 과밀화된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 처우 향상 및 건전한 수용생활 유도
- 인권 친화적인 교정시설 건축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 쇄신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교정행정 이해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교도소 운영(Ⅱ-2-일반재정①)				
① 교도소 운영(1531)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302)	일반회계		106	107
②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300)	일반회계		240	25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실적(점수)	112	120	130	139.9	<p>-「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으며, 수용 비율 100% 이상인 교정기관 등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p> <p>-28개 교정시설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시설로 이전 및 신축, 시설환경 개선이 시급함</p> <p>-3년의 평균 추세치는 9점이고, 평균 추세치에서 10% 상향하여 9.9점을 더한 139.9점을 목표치로 적극적으로 설정</p>	<p>-수용환경 개선 점수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개보수 기관 수×2점</li> <li>·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생활 환경개선 기관수 ×2점</li> </ul>	시행공문 및 개선 실적 자료 등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 해소 노력 실적(점수)	신규	95	116	127.6	<p>-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시급하나, 일부는 갈등 관리 과제로 관리되고 있을 만큼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 진행이 쉽지 않아 민원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협업 및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p> <p>-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축·이전은 장기과제로, 기존의 시설에서 수용 거실 확충을 위한 유희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각 교정기관별로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 하는 등 각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p> <p>-2년의 평균 추세치는 10.5점이고, 평균 추세치의 10% 상향한 11.6점을 더한 127.6점을 목표치로 적극적으로 설정</p>	<p>-협업 관련 점수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민원 해소 (50점)</li> <li>· 관계기관 협의 (5점)</li> <li>· 민원관련 협의 또는 현장방문 (10점)</li> <li>·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10점)</li> <li>· 수용기관현장점검 (2점)</li> </ul>	협조공문 및 결과보고 등

##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Ⅲ-2-②)

### □ 추진배경

- 시대변화에 따른 교정행정의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정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전략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본부 소식지인 월간 「교정」을 기존의 문화 교양지 형식에서 교정관련 전문정보를 수록한 학술지 형식\*으로 전면 개편('23. 1.)하여 교정지 질적 수준 향상 및 교정정보 공유 확산
- \* 교정관련 전문가 연구자료, 교정공무원 논문, 교정판례, 해외 교정사례 등 수록
- 교정정보시스템에 '업무개선 게시판'을 신설 운영('23. 2.)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와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 「교정직제 영문 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23. 3.)하여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손쉽게 교정직제 등의 영어표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업무 효율성 제고
- 교정본부의 조직, 기능, 주요정책 등을 담은 '교정행정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23. 4.)하여 교정행정 홍보자료로 활용
- 6. 25 전쟁과 교정업무 수행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직 교정공무원을 위한 충혼탑을 건립\*('23. 6.)하여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건립장소 :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23. 8.)하여 효율적인 교정행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교정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정책자문단과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23. 10.)하여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 확산

○ 병역과 인권이 조화된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반기 1회)하여 외부 의견을 수렴, 교정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 학계·법조계·병역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주요 추진정책 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교정정책, 교도관 업무**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교정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홍보영상 게시를 위해 유튜브에 ‘교정본부 TV’ 개설·운영 중

○ 적극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취재요청 협조** 등을 통해 교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정하고 발전적인 언론보도 유도

○ 주요정책 시행, 사회적 이슈 발생 등 언론홍보 필요시 보도·설명자료를 적시 배포하여 교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3년도 월간 「교정」 전면 개편 - 기존의 문화 교양지 형식에서 교정관련 전문정보를 수록한 학술지 형식으로 전면 개편	'23. 1월	
	○ 교정정보시스템 '업무개선 게시판' 신설 운영	'23. 2월	
	○ EBS <자이언트 팽TV> 촬영 협조 - 팽수(캐릭터)의 수용생활 체험 소개 등	'23. 3월	
	○ 「교정직제 영문 표기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3. 3월	
2/4분기	○ 2023년도 「교정행정 홍보 브로슈어」 발간 - 교정본부의 조직, 기능,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교정행정 브로슈어 제작	'23. 4월	
	○ 교정본부 「민원톡」 방문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2. 5~6월	
	○ 상반기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	'23. 5~6월	
	○ 순직 교정공무원 증혼담 건립 - 건립 위치 :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	'23. 6월	
3/4분기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행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강화	'23. 8월	
4/4분기	○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23. 10월	
	○ 하반기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3. 11~12월	
	○ 월간 「교정」 발행(책자 및 웹매거진 발행, 영상 제작)	'23. 1~12월	월 1회
	○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카카오토타리 등) 및 유튜브 운영	'23. 1~12월	
	○ 홍보영상 제작	'23. 1~12월	
	○ 보도·설명자료 배포	'23. 1~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 민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 교정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
- 교정정책 홍보 및 교정행정 이미지 형성에 영향이 큰 언론기관 및 문화산업 종사자

□ 기대효과

- 교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강화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정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책홍보 활성도(점수)	1,083	1,591	1,791	1,880	지난 '21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등으로 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어 그에 대한 정책 추진 및 대응한 결과 그 해 실질적이 과도하게 급상승(전년대비 45% 이상)하였음 이로 인해 성과지표의 적극적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5% 상향하여 목표를 설정함	- 보도·설명자료 배포(건당 1점)  - 월간「교정」발간(건당 10점)  - 홍보기획 영상 제작(건당 5점)  -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건당 5점)  - 홍보행사 참석(건당 10점)	해당 자료, 결과 보고, 결과 책자 등
온라인 홍보 실적(점수)	62,616	91,374	100,688	110,723	지난 '21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등으로 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어 그 해 비대면 홍보실적이 급상승(전년대비 45% 이상)하였음 이로 인해 성과지표의 적극적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10% 상향하여 목표를 설정함  또한 온라인 홍보실적 목표점은 사회환경 변화, 유동적인 SNS 이용자 수 등 대내외적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 유튜브 구독자수*4  - 페이스북 팔로워수*2  - 카카오톡스토리 구독자수*2  - 카카오톡친구 친구수*2	온라인 홍보채널 구독자 자료 등

###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Ⅲ-2-③)

#### □ 추진배경

-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생업 종사 등으로 원거리 교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23. 3.)
  -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서식 개선 등 직원 의견 조회(‘23. 6.)
    - ※ 각 지방교정청별로 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여 현장 직원이 느끼는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점 파악
  -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 필요사항 발굴에 활용(‘23. 11.)
-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발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23. 5.)
  - SNS를 통한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홍보(‘23. 7.)
    - ※ SNS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통합접견시스템 관련 운영실태 점검
  -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운영실태 점검(‘23. 9.)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각 지방교정청 별 개최	'23. 3월	
2/4분기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	'23. 5월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서식 개선 등 의견 조회	'23. 6월	
3/4분기	○SNS를 통한 스마트접견 및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홍보 ※ 교정기획과와 협의하여 SNS 홍보 추진	'23. 7월	
	○통합접견시스템 관련 실태 점검 ※ 각 지방교정청별 실시	'23. 9월	
4/4분기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민원인 및 수용자 대상 실시	'23. 11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기관과 주거지가 비교적 원거리에 있음에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고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노약자·장애인 등 민원인과 해당 수용자

### □ 기대효과

- '스마트접견 제도'는 교정기관과 주거지의 원거리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인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어 민원인과 수용자 간의 접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용(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민원인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89	91	86	90	<p><b>(강점)</b> 전년도 실적(86%)이 목표치(92%)에 비해 약 6% 감소하였지만 통합접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영상·음성 등 접견 품질 개선 기대</p> <p><b>(약점)</b> 정책고객이 상용 영상통화의 편리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보안 절차 등으로 인해 스마트접견 영상·음성 등 품질 개선에 대한 체감도 반감 우려</p> <p><b>(산출)</b> 전년도와 전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하향(91%→86%)한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 90%로 조정</p>	(만족이상 응답자수 / 총 응답자수) ×100%	스마트접견 이용 민원인 및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	8,727	9,087		9,100	<p><b>(강점)</b> 민원증명서 발급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에 대한 접근성과 발급 활성화 기대</p> <p><b>(약점)</b> 민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 시행 후 민원 발급 절차에 유의미한 변경사항이 없는 점 등</p> <p><b>(산출)</b> 강·약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9,087)건 과 비슷하게 목표치를 9,100으로 조정</p>	수용 및 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수	형사사법포털 통계자료 활용 (연간 실적)

####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Ⅲ-2-④)

##### □ 추진배경

- 최근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출소로 사회불안을 야기, 분류센터 고위험군 수형자 대상 심리치료 등 집중처우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내실화 등 관리 방안 필요

**서울신문**

---

### “전자발찌 차고 또 다른 범죄 가능... 김근식, 조두순보다 더 위험하다”

입력 : 2022-10-06 18:02 | 수정 : 2022-10-07 05:57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10월 17일 출소한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이미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70)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재범 방지를 위해선 지금의 전자감독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라며 맞춤형 보안처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6일 “김근식은 법무부에서 만든 재범 위험도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많은 것을 보면 정신질환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그건 형벌로 억제되는 게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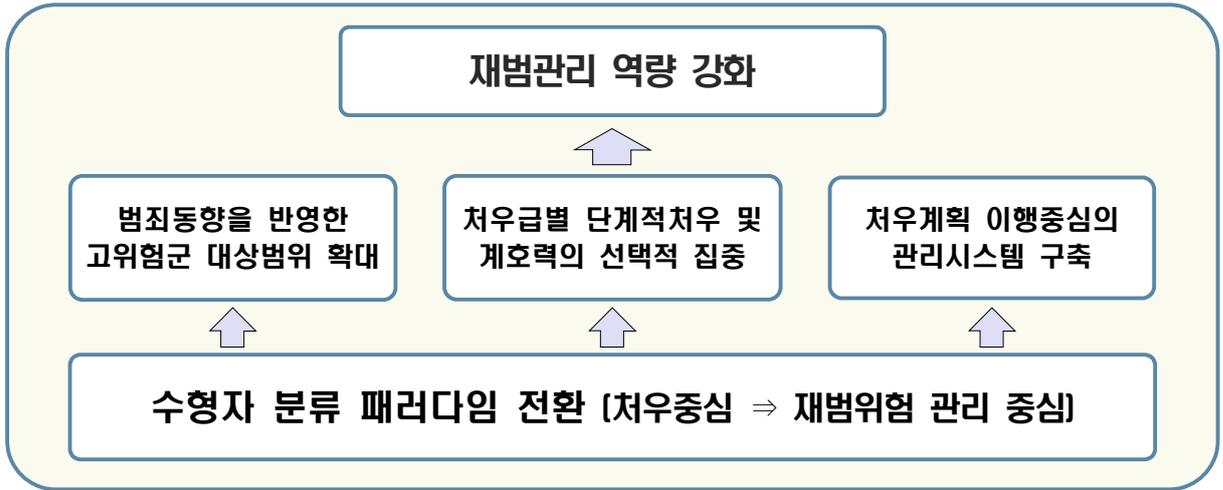
《 언론보도 》 성폭력 범죄자 출소 관련 기사

- 강력범죄 등 고위험군 범죄자 및 재범우려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 심도있는 가석방 심사 등을 통한 가석방 절차의 전문화 요구
- 반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사회 안전에 기여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범위험 관리’ 중심으로 분류 패러다임을 전환,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집중처우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방안」 수립('22. 12.)



○ 분류센터의 재범고위험군 정밀분류심사 강화

- 정밀분류심사 대상인 고위험군 범죄유형 확대

※ (기존) 살인, 성폭력, 방화, 폭력 등의 범죄로 2년 이상 수형자  
 (확대) 마약(제조·판매), 디지털성범죄, 정신질환, 소년범 등 추가

- 사회물 의사범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 대상 외부 심리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심층상담 및 전문심리검사 활용

※ '23년 중 외부전문가 심리검사 등 평가 의뢰 방안 마련

○ 재범고위험군 집중처우계획 이행평가 강화

- 재범고위험군의 재범유발 요인을 감안,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심리치료,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개인별 처우계획 수립
- 처우계획 이행평가 업무는 기존 일선 교도소에서 담당하였으나, 이행평가 전담 분류센터 지정으로 사후관리 강화

○ 수형자 재범예측지표 등 분류지표 개선

- 전문 연구기관 위탁 연구를 통한 「분류지표」 도구 개선
- 심리치료 등 처우성과 반영 및 문제행동 가능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개선하여 수용관리, 가석방 등에 활용

※ 재범예측지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교정심리검사를 개선, '23년 반영 예정

○ 고위험군 수형자 재범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분류센터의 고위험군수형자 관리기능 강화 및 각종 검사, 상담 등 수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재범위험 관리시스템 마련

※ ①정밀분류심사 → ②위험관리등급 부여 → ③집중 개별처우계획 수립 → ④개인별 종합프로파일 작성 → ⑤유관기관 연계

○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가석방 심사와 전문성 강화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층면접관\*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개선 정도, 출소 후 취업·치료 계획과 재범환경 등을 확인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재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 (심층면접관 제도)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수형자 대면면접, 심리검사, 건강상태, 보호자 및 보호시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하는 제도

※ 심층면접 인원 : ('21년 4월 이후) 252명, ('22년) 476명

- 수형자의 재범유발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가석방 시행
  - 정신질환자 및 중독사범에 대한 치료조건부, 출소 후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조건부 등 맞춤형 조건부 가석방 실시

※ 치료·취업조건부 가석방 실시 현황 (단위 : 명)

총계	'19년	'20년	'21년	'22년
251	65	47	53	86

- 가석방자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관계 강화
  -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 등),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적극적 심사
  - 환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형집행법이 '특별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극 심사

- 자격취득,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 교화프로그램 참여 우수자 등 모범수형자에 대해 수형생활 성과를 고려한 적극 심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분류센터 정밀분류심사 개선 시범운영	'23. 1월	서울청
	○ 가석방 심사 개선 계획(안) 시달	'23. 1월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심사 계획(안) 시달	'23. 1월	
	○ 분류심사 제도개선 T/F팀 구성	'23. 2월	
	○ 가석방 심층면접 계획 수립 및 실시	'23. 2월	
2/4분기	○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계획 수립	'23. 4월	
	○ 가석방 심층면접 계획 수립 및 실시	'23. 4월	
	○ 가석방 업무담당자 교육	'23. 4~5월	
	○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계약	'23. 5월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재범예측지표 시범검사	'23. 5월	
	○ 「분류처우 업무지침」 규정 개정	'23. 5월	
3/4분기	○ 「분류센터 운영지침」 규정 개정	'23. 7월	
	○ 분류센터 정밀분류심사 개선방안 시행(방문심사 등)	'23. 7월	
	○ 가석방 심층면접 계획 수립 및 실시	'23. 7월	
4/4분기	○ 분류지표 개선(안) 적용 계획 수립	'23. 10월	
	○ 가석방 심층면접 계획 수립 및 실시	'23. 10월	
	○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완료	'23.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수혜자)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안전한 사회가 보장되는 일반국민
- (이해관계 집단) 심사대상 수형자, 출소자와 관련된 범죄피해자와 시민단체,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경찰 등 정부 부처

□ 기대효과

- 정밀분류심사 대상자 확대로 고위험군 수형자 전반에 재범위험성 관리를 위한 집중처우 기반 마련
- 재범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집중처우로 재범위험성 관리,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로 사회안전망 확보
- 강력사범 등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등의 면밀한 평가 후 가석방 실시로 재범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
- 치료·취업 조건부 등 다양한 가석방과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가석방으로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일반회계(110)-공공질서 및 안전(020)-법무 및 검찰(022)-교정활동(1500)			
① 재소자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0.69	0.69
▪ 가석방심사위원회(기본)(301)	일반회계	0.18	0.18
▪ 가석방심사위원회(초과)(301)	일반회계	0.03	0.03
▪ 분류센터 운영 경비(301)	일반회계	0.48	0.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분류센터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개별처우 계획 수립 실적	-	신규 1,343		1,477	'23년에는 심사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여 목표치를 전년 실적보다 +10% 증가한 1,477명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22년도 신설 지표로써 분류센터에 적극 지시하여 '22년도에 기존 '21년 실적인 1,074명 보다 +25% 증가한 1,343명 달성	분류센터 신입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개별처우 계획 수립 실적 (집금이송 곤란한 수형자 방문하여 수립한 실적 포함)	법무샘, 교정정보시스템 등 자체 통계자료 활용
재범고위험군 수형자가석방 심층면접 실적	-	신규 476		500	'22년도 실적은 총 476명으로, 심층면접관 부족, 출장심사의 어려움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목표치를 전년 실적보다 +5% 이상 증가한 500명으로 적극적으로 설정  ※ 재범고위험군 : 무기·장기수형자, 살인 등 강력범 및 심리상태·출소 후 환경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23년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인원(명)	법무샘 등 자체통계 자료 활용

## 5]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III-2-5)

### □ 추진배경

-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출소자 생계형 재범이 최근 사회의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소 전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 ('22년 교정통계) 출소 후 3년 이내 재범역률 24.6%,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는 50.9%

-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생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형자 직업훈련의 품질개선 지속 추진
- (교도작업)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인력 부족 상황을 맞아 외부 산업수요에 적합한 숙련된 인력을 지원하고 작업을 통하여 출소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교도작업 성장동력 발굴 및 작업장 신축을 통해 정역집행률을 높이고,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제작, 신제품 개발로 생산성 증대 및 근로의욕 고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관 협력 기반 교도작업 성장동력 발굴 및 마케팅 활성화
  - 봉제 임가공 직영작업 추진 및 다양한 민간참여 교도작업을 발굴하고, 공공기관 기념품(GOODS) 개발 등을 통하여 교도작업 제품 판매·홍보 강화를 통한 교도작업 활성화

※ 대전(교) '재단전문센터' 운영 및 직영작업 시범운영 계획

○ 교도작업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작업장 신축을 통한 교도작업 기반을 마련하여 수형자 정역 집행률을 제고하고,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김천소년(교) 등 2개 기관 신축 계획 등

○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 취업 사양직종 등을 폐지하고, 취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향상(산업기사)과정 등을 확대하여 출소 후 수용자 취업역량 강화

※ 취업 유망직종 훈련 확대 : 화성(직) 건축산업기사 과정 등 6개 과정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향상과정 확대 : 화성(직)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 등 21개 과정

○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도작업 연계 기술교육 확대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교도작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기술숙련으로 취업경쟁력 강화

※ 서울남부(교) 웹툰콘텐츠, 서울동부(구) 카페바리스타 등 교도작업 연계 직업훈련 확대

○ 2023년도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 직업훈련 개선사항 및 개설 희망직종 등 만족도 조사결과를 2024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직업훈련교사의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보수 교육 참석 지원 및 학점은행제 진행을 위한 평생교육사 취득과정 교육비 지원
- 해당 분야에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업훈련 효과 제고 및 직업윤리교육·직업상담·심리상담 등의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2011년~2023년까지 13회 수도권\* 중심의 교정작품전시회 개최에서 탈피하여, 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 개최를 통해 각 지역에 균형 있는 대국민 교정홍보 효과 제고

\* 과천시민회관 및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

- 수형자의 기능향상, 정서함양 및 창작능력 계발의 기회제공으로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교정'을 알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심과 이해증진

○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활성화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자본 창업교육, 실전 창업교육, 기쁨과 희망은행 창업교육 등의 실시로 출소 후 안정된 사회정착 도모
-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출소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20) 3,627명 → ('21) 4,094명 → ('22) 4,223 → ('23) 3,900명 목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 작업장 신축 계획 알림	'23. 1월	
	○ 대전교도소 재단전문센터 운영(안) 시달	'23. 1월	
	○ 상반기 직업훈련	'23. 1월	
	○ 출소예정자 취업·창업 강화를 위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알림	'23. 1월	
	○ 「교도작업 운영지침」 개정(안) 시달	'23. 2월	
	○ 권역별 직업훈련과장 간담회 개최	'23. 3월	
2/4분기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등을 위한 직업훈련 담당자 워크숍	'23. 3월	
	○ 공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23. 4월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23. 4월	

3/4분기	○ 하반기 직업훈련	'23. 7월	
	○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	'23. 9월	
4/4분기	○ 전국 기능경기 대회 참가	'23. 10월	
	○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23. 10월	
	○ '23년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23. 11월	
	○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연중	
	○ 출소예정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시설 수용기간 동안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전문기술인으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의 1차 수혜자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범방지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일반 국민임
- 취업·창업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기업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이해관계집단으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기대효과

-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향상 과정을 통해 고급 숙련 기술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 출발 도모
- 교도작업을 통해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실무중심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현장 적응력 배양 및 출소 후 취업을 통한 사회 정착과 재범의 악순환 차단
- 취업연계 인프라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 사회정착 도모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교도소 작업운영 및 직업훈련(Ⅱ-2-일반재정(3))				
①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1535) ▪ 교도작업(300) ▪ 직업훈련(301) ▪ 시설보완(302)	교도작업 특별회계	663	660	
	교도작업 특별회계	552	554	
	교도작업 특별회계	42	40	
	교도작업 특별회계	69	6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곽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공통)	93.5	93.3	93.5	93.5	-최근 정역 집행률은 90% 이상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 작업장 부족 등 정역집행을 위한 공간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적극 적인 정역집행률 상승은 곤란함  -다만, 정역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용자가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매년 작업장 신축을 추진 중이며, 목표치는 최근 3년치 (’20 ~ ’22년) 정역 집행률 실적 평균보다 0.1% 상승한 93.5%로 설정	(당해연도 정역 이행자 수 / 당해연도 정역 집행 적격자수) ×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직업훈련수행자 만족도 (점수)	74.3	74.9	77.1	77.4	-만족도 측정방식은 전체 직업훈련 수행자 중 순수 만족 이상 답변한 인원을 측정하여 직업훈련의 궁극 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측정방식으로 직업훈련의 다양화,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인해 매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22년의 경우 코로나19 완화로 실질적 훈련 실시 및 직업훈련과정 개편 등으로 이례 적인 만족도 상승을 보임  -매년 직업훈련의 만족도가 상승 추세임을 반영하여 작년 목표치인 74.4% 보다 3% 상향되고 최근 3년치 실적의 평균보다 2% 상승한 77.4%로 설정	(만족이상 답변 인원 / 총 응답 자수) ×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Ⅲ-2-⑥)

### □ 추진배경

-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 일환으로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문화 확산 노력
- 소년범죄 종합대책(22. 10. 26. 법무부) 발표와 관련하여 소년수형자 교정교육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다양한 사회적처우 실시로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유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집중인성교육을 통한 폭행사고 예방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 집중인성교육 과정 내 수용자 감사쓰기 습관 조성을 위한 교과목 추가 및 감사쓰기 공모전 개최
  - 수용자 감사습관 조성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 수용자 대상 경기 규칙 등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준법정신·스포츠맨십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준법 인성교육' 도입 추진(시범 실시 후 전 교정기관 확대 시행)
- 소년수형자 교정교육 강화를 위한 소년전담시설 설치
  - 소년수형자의 학과교육 특화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만델라 소년학교'를 설치하여 체계적 교육환경 조성
  - 교육 전담을 위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반원(5명)을 포함 총 6명의 전담팀 구성·배치 및 자체교육 계획 수립

-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사회적처우 확대
  - 가족과 직접 만나는 처우가 가족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경조사 귀휴를 적극 실시하고, 가족접견 및 가족만남의 집 등 다양한 사회적 처우 실시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형 가족접견 실시
  - ※ '23년 흥성교도소, 거창구치소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예정
  - 효과적인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용자 자녀 지원팀'의 역할 강화(요보호 수용자 미성년 자녀 발굴 및 지원)
  - ※ 직원 및 외부지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2022년 6월부터 전국 지방교정청으로 확대·운영
  - 직업훈련, 취업 기회 제공 등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희망센터\*)를 평택에 확대 운영
  - \*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모범 수형자가 지역사회 내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반인과 같이 출·퇴근하고, 일과 후에는 정서함양 교육 등 인성프로그램을 실시, 휴일에는 귀휴·사회문화체험 등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처우 실시
- 수형자 교정·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송콘텐츠 개편 및 개발
  - 교양·지식,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발굴·확충 및 월드컵, 올림픽, 선거 등 사회적 이슈 행사 관련 방송 편성 확대를 통해 수용자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교화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방송 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및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자기 계발, 감염병 예방, 재난 대응 등의 영상을 각 과와 연계하여 수시로 제작 및 방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사회복귀과 업무추진 유의사항 등 수립	'23. 1월	
2/4분기	'22년 교정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23. 4월	
	전국 수용자 대상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23. 4월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시행	'23. 4월	
	교화방송 반응도 조사	'23. 5월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	'23. 6월	
3/4분기	평택 희망센터(가칭) 설치·운영	'23. 8월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시행	'23. 8월	
4/4분기	대국민 교정정책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23. 10월	
	교화방송 반응도 조사	'23. 11월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	'23. 12월	
	아동 친화형 가족접견실 증설	'23. 12월	
	사회적 처우(가족접견, 귀휴 등) 시행	연중	
	집중인성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및 건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갖는 수형자
- 실질적 재범방지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 속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민
- 가족관계 회복·유지프로그램을 계기로 가족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형자 가족
- 프로그램 운영에 협업하는 관계부처·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 □ 기대효과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확실한 재범방지 효과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통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자에게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
- 수용자 자녀 보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수용생활 도모 및 수형자 자녀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유도
- 다양한 방송 콘텐츠 개편 및 개발로 수형자의 교정교화 효과 향상 기대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교도소 운영				
①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104	105
	▪ 교정교화(301)		104	10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명)	4,917	7,187	5,720	6,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든 교육이 제한됨</li> <li>'20~'22년 3년 평균이 5,941명이며, '23년은 약 10% 이상 적극적으로 상향한 6,676명으로 설정</li> </ul>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기본교육 +재교육 합산)	자체 통계 자료 활용 (연간 실적)								
사회적처우 실적(점수)	- (308)	- (963)	신규 (3648)	4,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사회적처우 계획 대비 실시율(%)'은 단년도 계획 대비 실시율만을 측정하고 있어, 연도별 추세(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li> <li>따라서 연도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처우 실적을 점수로 산정하여 성과지표 변경</li> <li>가족과 직접 만나는 사회적처우가 가족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을 감안하여,</li> <li>경조사 등 가족과 함께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귀휴와 소규모 처우로 가족 단위로 집중할 수 있는 가족 접견의 실적(인원)을 점수로 집계</li> <li>다만, 귀휴의 경우 교정시설 외부로 나가는 처우로써 가중치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어 2점 부여</li> <li>사회적처우의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은 1,640점이며, '22년의 실적 점수가 3,648점임을 고려할 때, '23년의 목표치 '22년 실적 대비 10% 상향한 4,020점으로 적극적 설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연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r> </thead> <tbody> <tr> <td>실적</td> <td>308</td> <td>963</td> <td>3,648</td> </tr> </tbody> </table>	연도	'20년	'21년	'22년	실적	308	963	3,648	(귀휴 실시 수행자 인원 X 2점) + (가족접견 실시 수용자 인원 X 1점)	자체 통계 자료 활용 (연간 실적)
연도	'20년	'21년	'22년												
실적	308	963	3,648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	-	신규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으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li> <li>이에 따라, 교정본부는 수도권에 교육 중심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23. 3.)하여 학업과 단절된 소년 수형자에게 학과교육 등을 실시</li> <li>전체 수형자 초·중·고 검정고시 3년 합격률 평균은 74.2%으로, 소년수형자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전체 수형자 3년 평균 합격률에 10% 증가한 81.6%로 적극적으로 설정</li> </ul>	소년수형자 초·중·고 검정고시 응시 인원 대비 합격 인원	자체 통계 자료 활용 (연간 실적)								

## 7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Ⅲ-2-⑦)

### □ 추진배경

-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의료처우 강화 필요
-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위한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및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도모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 확대 운영
  - 원격진료 협력병원 추가 지정, 원격 의료장비 보강 등 원격진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진료과목 다양화
-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수용자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증진
- 예방 의료활동 강화
  - 코로나19 백신접종, 4가 독감 백신접종, 폐렴구균 백신접종
  - 교정시설 외부 방역전문업체 주기적 소독 실시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
-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수용자의 주요 사망 원인(돌연사) 중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지표인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구축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지원단 정기회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 의료인력 직무역량 강화

-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의무관 등 의료과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의료처우 질적 개선 도모
- 현장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한 의료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장 워크숍 개최

○ 의료인력 확보 노력

- 적극적인 의무관 채용 노력, 간호사·방사선사 증원
- 상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교정직 공무원 응급 구조사 양성
- 채용 공고 중심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와 개별 접촉 (공문 발송 등) 확대 및 지원 가능 의사에 대한 인력풀 관리

○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운영 확대 추진
-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징 및 증상 이해를 통한 수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 조정 교육과정 개설

○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용자 약품 오남용 관리 강화

-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 제한 전면 시행
- 「KIMS」 의약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교부허가의약품 통계관리를

- 통해 교정시설 내 의약품 반입실태 분석 및 오남용 사례 확인
-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지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라미시스템에 「DUR」 도입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장 워크숍	'23. 2월	
2/4분기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허가 제한 전면 시행	'23. 4월	
	○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 조정 강의 신설	'23. 4월	
	○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확대 검토	'23. 4월	
	○ 「KIMS」 의약품 관리프로그램 도입	'23. 5월	
	○ 국가지급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23. 5월	
	○ 혈액투석 공통품목 선정 회의	'23. 6월	
	○ 의료장비 현대화	'23. 3~6월	
3/4분기	○ 원격의료시스템 고도화 및 협력병원 확대	'23. 7월	
	○ 보라미시스템에 「DUR」 프로그램 도입	'23. 7월	
	○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23. 8월	
	○ 교정공무원 응급구조사 위탁교육 실시	'23. 8월	
4/4분기	○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23. 10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23. 10월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23. 10월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23. 7~12월	
	○ 교정기관 외부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연중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	연중	
	○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중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관리지원단 정기회의	연중	
○ 의무관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외부 전문기관 건강검진 대상 수용자 및 기관 내 원격의료센터 적용 대상 수용자
- 수용자 건강검진 외부 의료전문기관
- 원격의료시스템과 연계된 협력병원
- 교정 현장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처치하는 교정공무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 관련 중앙부처

□ 기대효과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건강한 수용생활 보장 및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강화·유지하며 수용자에게는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효과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 및 예방 의료활동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통한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2	'23
교도소 운영(Ⅱ-2-일반재정②)				
①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251,4	262,8
	▪ 수용관리(300)		240,9	252,2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97.3	117	118.8	121	'20~'21년도 코로나19 초기 상황으로 수용자 전수 검사 및 교정시설 운영 제한 등으로 실적차가 19.7%로 나타남에 따라 '23년도 에는 '22년 실적인 118.8%에 3% 이상을 상향한 값인 121%를 목표치로 설정	(진료실적 증감률 /수용인원증감 률) × 100  · 진료실적 원격의료건수+ 외부의료시설 건수+ 정신과진료건수	기관별 의료처우실시율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건강검진 실시율(%)	- (73)	- (78)	신규 80.3	77	'22년 신설 지표 -최근 3년간 실시율이 '20년 73%, '21년 78%, '22년 80.3%로 나타나고, 작년도 신설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최근 3년간 실시율의 평균인 77%로 설정	(당해연도 건강 검진 인원/ 당 해연도 일평균 수용인원)x100	건강검진 실시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허가 감소율(%)	-	-	신규 (1268) (73.5)	51	-신설 지표('21년 신규 통계) -수용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2년 10월부터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교부허가 제한을 실시하였고, '21년 126.8%, '22년 73.5%임을 감안하여, '23년도 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율을 적용시킨 51%로 설정	(당해연도 향정 신성의약품 차 입 건수/ 당해 연도 일평균 수 용인원)x100	교정통계

##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Ⅲ-2-⑧)

### □ 추진배경

- 연쇄 성폭력 범죄, 스토킹, 마약류사범 급증 등 최근 흉악범죄로 인한 사회적 우려와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리치료 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
  -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및 이수명령 집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팀) 신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치료·사회재활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강사 양성 과정 운영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에 대한 리플렛 배포 등 대외적 홍보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집중'과정 실무 매뉴얼 개발 추진
-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이해 제고를 위한 담당직원 워크숍 실시
  - 상·하반기 성폭력 특별과정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사범 선정 및 집중 심리치료 실시
  - 소년 성폭력사범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소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이해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신규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 체계 구축

- 가정폭력사범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이해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보라미시스템상 동물학대사범 이수명령 현황 신규 등록
-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스토킹사범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수용자 전문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직원 역량 강화
  - 임상심리사 등 심리치료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 중독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심리치료 분야 민간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운영
  - 이수명령자 교육 담당자 실무 과정, 전문상담 실무 과정 등 내실 있는 직무 교육과정 운영
  - 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을 위한 '상담사례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마약류 치료·재활 유관기관과의 공동회의 참석	'23. 1월~12월	
	○ 디지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담당직원 워크숍	'23. 1월	
	○ '임상심리사(2급) 자격 취득' 지원	'23. 3월	
	○ 마약류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팀) 신설	'23. 3월	
	○ 가정폭력사범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원교육	'23. 3~4월	
2/4분기	○ 상반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	'23. 상반기	
	○ 보라미시스템상 동물학대사범 이수명령 현황 신규 등록	'23. 4~6월	
	○ 소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	'23. 1~4월	
	○ 소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원 교육	'23. 5~8월	
	○ '중독심리사(전문가,심리사) 자격 취득' 지원	'23. 4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에 대한 리플렛 배포 등 홍보	'23. 5~6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3. 6월	
3/4분기	○ '범죄심리사(1·2급) 자격 취득' 지원	'23. 7월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집중'과정 실무 매뉴얼 개발 TF 회의	'23. 9월	
	○ 하반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	'23. 하반기	
4/4분기	○ 마약류사범 재활교육강사 양성 과정	'23. 10~11월	
	○ 스토킹사범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23. 하반기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수형자 본인과 그 가족이 1차 수혜자이며, 궁극적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국민이 수혜자임
- 재범성이 강한 이상심리 범죄 수용자의 문제행동의 치료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수용자가 1차 수혜자이며, 또 다른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의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이해관계 집단이며, 범국가적으로 연계된 대응체계 구축 및 협업으로 마약류사범의 실질적인 치료·재활 효과성 제고

##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중독재활·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안정된 수용생활 보장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일반회계(110)-공공질서 및 안전(020)-법무 및 검찰(022)-교정활동(1500)			
①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기본)(301)	일반회계	25	25
▪ 담당자 교육(기본)(301)	일반회계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250	260	300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TF회의, 사례분석 회의, 자문위원단 회의, 직원 전문화 교육, 전문인력(중독 제외) 양성 등을 실시한 실적을 점수화 함</li> <li>과거 실적(추세)과 '22년 실적(300)을 고려하여 적극적(10% 이상 상향) 목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횟수×5점)</li> <li>프로그램 시범 운영(건수×10점)</li> <li>전문인력(중독 제외) 양성(당해 연도 전문인력 / 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 프로그램 시범 운영, TF회의, 사례분석 회의, 자문위원단 회의 등 연간실적 활용</li> <li>직원 전문화 교육 연간실적 활용</li> <li>전문인력(중독 제외) 양성 연간실적 활용</li> </ul>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점수)	-	-	신규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류사범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팀) 신설 유무,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실적, 중독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에 대한 홍보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li> <li>'22년 중독관련 자격증 취득 실적치(128명)와 마약류 관련 유관 기관 회의 참석 실적치(4회)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기구 신설 (팀 신설15점, 과 신설 20점)</li> <li>전문가 및 유관 기관의 대책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5점)</li> <li>중독재활 관련 정책 홍보실적 (횟수×1점)</li> <li>중독관련 전문가 양성 인원(당해 연도 전문인력 / 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정본부 자체 부서 신설 관련 계획 실적 활용</li> <li>유관 기관과의 공동 회의 실적, 교육자료 등</li> <li>소속기관 리플렛 배포, 언론보도, 정보보고 등 연간 실적 활용</li> <li>중독관련 자격증 취득 연간 실적 활용</li> <li>※ 재활강사 양성 포함</li> </ul>

기 본 방 향

□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 안전한 국경관리와 승객이 편리한 심사 환경 마련을 위해 과학적 승객정보 분석, 자동심사 확대,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한 출입국 심사방안 마련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출국금(정)지 이의신청제도 활성화 및 출국대기실 국가 운영으로 권리 구제, 인도적 처우 향상 도모
-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적극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로 국가경쟁력 확보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체류외국인의 편의 증진 및 포용적 외국인 정책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로 국민 치안 불안감 및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에 따른 국민과의 갈등을 해소.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기반 이민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연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정책 이해도 개선과 긍정적 인식 향상에 기여하는 대국민 홍보 강화로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이민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기 본 방 향

### □ 국력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분야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및 국익기여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 발굴을 통해 국적취득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국적증서수여를 통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 과거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할린동포 관련 정책·제도 개선, 적극적 정책 홍보와 국적 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제도 개선
- 이민자 생애주기·체류단계별로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유입시켜 자립과 통합을 유도
- 국제적 기준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합리적 난민제도 추진 및 난민인정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10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민원 만족도(점수)</li> </ul>
	IV-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TA 신청자 대비 자동심사 건수 비율</li> </ul>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심사 이용객 만족도(점수)</li> <li>▪ 제도개선 실적(점수)</li> </ul>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li> <li>▪ 하이코리아 (<a href="http://www.hikorea.go.kr">www.hikorea.go.kr</a>) 이용자 만족도(점수)</li> </ul>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외국인 출국 조치 실적(명)</li> <li>▪ 개선된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수)</li> </ul>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li> <li>▪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li> </ul>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홍보활성도</li> <li>▪ 홍보만족도</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만족도</li> </ul>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노력(건)</li> <li>▪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li> </ul>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정체성 함양(점수)</li> <li>▪ 제도개선(점수)</li> </ul>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li> <li>▪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점수)</li> </ul>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담당자 및 통역인 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li> <li>▪ 난민제도 정비(점수)</li> </ul>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이의신청 보고서 품질 향상 (점수)</li> <li>▪ 이의신청 심의체계 개선(점수)</li> </ul>

(1)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인구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적정 외국인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비자·체류 정책 추진
- 재한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기반 이민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연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및 엄정한 체류질서 구축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전자여행허가(K-ETA) 다국어 입력 서비스 제공 등 편리한 출입국심사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탑승 전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정밀 심사 대상을 분류하는 등 철저한 입국심사 수행과 감시정을 활용한 승선 검색을 통해 항만에서의 국경관리 강화
- 외국인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감축 노력

□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수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확충,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참여하기 위한 정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기반 마련
- 국민과 이민자들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내·외국인 상호문화 이해 제고 교육 운영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기반 마련
- 국제적 기준과 국민 공감대를 고려한 합리적 난민제도 추진,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난민인정자 등의 국내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체류민원 만족도(점수)	-	-	-	산규	835	87.8	○ '22년 실적(83.5점) 대비 매년 1%이상 상향하여 87.8점으로 목표치 설정	○ 전자민원 및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 / 참여자 수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 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40), 매우 불만족 1(20))	체류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 (1) 주요내용

##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안전한 국경관리와 민원인에게 편리한 심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등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심사 방안 마련
- 양양공항·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 시행, 환승 무사증 제도 재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관광객에 대해 관광상륙 허가 확대 적용 등 출입국심사 제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시 다국어 기능 추가(7개 언어) 및 단체신청 가능 인원 확대, 출입국우대카드 지침 개선, 출국대기실 운영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고

##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국민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로 산업현장 및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 지원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보를 위한 비자신청센터 확대 및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등 추진
-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자정책 추진

##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주거권자 및 관계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고 단속 거부 및 방해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엄정 대응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유흥·마사지업소, 국민안전·일자리분야 집중 단속,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고용 방지 제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 개방성이 확대되는 새로운 모델의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보호 시설 환경 개선

## □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속화된 디지털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세계적인 방역완화 정책으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체류 외국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민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 기반 마련

## □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생활환경에 적합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고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내·외국인과의 양방향 소통 확대로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 SNS, 홈페이지, 정책메일 등을 통해 이민행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책 고객에 대한 홍보 효율성 제고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전략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향상

-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디지털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K - E T A 자 동 심 사 비 율 ( % )	-	-	71.4	73.5	○ '22년 자동심사비율(71.4%) 대비 3% 증가 값  ※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에 대한 심사관의 분석심사 등 불법입국자 흐름에 따라 수동 분석 대상자 변동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	(자동심사건수/K-ETA 신청자 수) × 100	K-ETA 업무시스템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그간 사증 없이 입국하던 외국인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소지의무화로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국어 입력 서비스 제공, 주소 입력 기능 개선, K-ETA 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 무사증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취득하여 여행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21. 9. 전면 시행)

###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일자리 침해 논란, 반이민주의 확산 등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 노동시장 보호, 외국인 투자 특정부문 편중

방지, 사회 안전 강화 등 정책리스크 요소를 관리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립

####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슬럼가 형성, 서민 일자리 잠식 등 국민 치안 불안감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한 외국인 관리 대책 수립
-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 등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통제 위주의 보호에서 개방형 시설 운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 공간 등을 확대하여 건강 개선 및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보호생활 유도

#### □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ICT 기술의 발전 및 4차 산업 시대로의 사회적 변화 등 급속도로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
-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정보연계가 활성화되고 있어, 정보 수신 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조치 확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철저

#### □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코로나-19 회복세로 이민자 유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화적 갈등 고조,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등 불안감에 따른 반(反)이민 정서 확산
- 세계화 흐름 속에 강조되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재한 외국인의 미담 사례 발굴 및 우수 인재 유치 등 국익과 국민 실생활에 기여한 이민정책 홍보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이주 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는 가짜 뉴스 확산에 적극 대응

#### (4) 기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immigration.kr](http://www.facebook.com/immigration.kr))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Ⅳ-1-①)

#### □ 추진배경

-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검증 강화 및 감시정을 이용하여 승선검색을 확대, 대테러 업무 수행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 연장 검토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전자여행허가(K-ETA) 다국어 입력 기능·단체신청 인원 확대 등을 통한 편리한 출입국심사 제공을 위해 제도 개선 노력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 출국대기실 운영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처우 개선 노력 지속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관광상륙허가제 지침 개정('23. 3.)
  -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그간 얼굴정보를 전송한 승객에게만 적용되었던 관광상륙허가를 무사증 입국 가능 국민에게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크루즈 승객 유치 지원
-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 시행 ('23. 3.)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자국에서 출발,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무사증 입국 허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23. 9~10.)
  -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번체)·일본어·태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말레이어 등 7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단체 신청 가능 인원을 30명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
-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기법 발표회 개최('23. 12.)
  - 공항만 출입국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입국심사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소통의 장 마련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 형태로 개최 가능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사업 ('23.1.~12.)
  - 김해공항 확장, 내용연수 도과 등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확대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교체 사업(22식)
    - ※ 예산: 총 33.84억 원
- 외교·국제행사 참가자 출입국심사 편의 지원 (연중)
  - 지문과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 제공 의무 면제, 전용심사대 운영, 전자여행허가(K-ETA) 신속 심사 지원
    -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즈대회 및 각종 외교·공무 행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2월	
	관광상륙허가제 시행지침 개정	3월	
	2022년 대테러활동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 추진계획	3월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시행	3월	
2/4분기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마련	4월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 제도 연장 검토	5월	
	환승 무비자 제도 재개 검토	6월	
3/4분기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6월	
	APEC 기업인의 이동 지원 실무 그룹(BMG) 회의 참석	8월	
	전자여행허가제(K-ETA) 다국어 지원 서비스 추가	9월	
4/4분기	단체신청 가능 인원 확대	10월	
	출입국심사 이용객 만족도 조사	11월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	12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교체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제공·항만을 이용하는 출입국 승객(국민, 외국인) 및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
- (이해관계집단) 전자여행허가·탑승자사전분석 등 정책 시행 관련 관계부처(문체부·외교부·국토부 등), 공공기관(공항공사) 및 운수업자 등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출입국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지지 확보

**□ 기대효과**

- 승객정보 사전분석, 승선검색 등을 통한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으로 국경 안전 강화 및 공공질서 보호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무사증 제도 시행, K-ETA 제도 개선 등으로 편리한 출입국심사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가능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출입국심사 이용 만족도	-	91.8	93.0	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 및 승무원의 만족도 조사</li> <li>○ 승객/승무원 출입국 행정 이용 특성에 맞는 설문지 개발, 모집단을 나누어 승객/승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하여 나눈 값을 결과 값으로 함</li> <li>※ '21→'22:1.3% 증가, 증가율의 15%를 상향하여94.3점(1.5%△)을 목표치로 설정</li> </ul>	(설문항목별 평가점수 합계/참여자 수) ※국제공항 및 외항선 운항항만을 이용하는 승객/승무원의 평가지표에 대한 만족도 설문(7점 척도) 조사	출입국심사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도개선 실적	380	430	520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개선 실적(점수)</li> <li>-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실적(15건×20점=300점)</li> <li>-국민신문고, 탄원, 청원, 국민제안 등 채택건수(3건×20점=60점)</li> <li>-입법예고, 청원 등 국민 의견수렴 건수(4건×20점=80점)</li> <li>-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건수(12건×5점=60점)</li> <li>-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10건×5점=50점)</li> <li>※ 전년대비 5.7% 증가율을 반영하여 목표값을 550점으로 설정</li> </ul>	-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사항(건당 20점) -국민신문고, 탄원, 청원, 국민제안 채택 실적(건당 20점) -국민의견 수렴 건수(건당 20점)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건당 5점)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건당 5점)	관련 법령, 지침, 보고서, 정보보고 등 관련 문서

##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IV-1-②)

### □ 추진배경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요구
-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신규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농어업분야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필요
- 문화적·언어적 동질성이 높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를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포용하기 위한 동포정책 필요성 대두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편의와 처우는 개선하고, 기초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체류환경 조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 우수 운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실시 등
  -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숙련근로자의 유연한 도입
  -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인원 확대
  - 안정적 숙련근로자의 도입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성화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
  - 시범사업 지자체(광역 6, 기초 4)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본격 운영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영주제도 전면 재검토
  - 세금납부,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 실질적 심사 제도 도입
- 투자이민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투자이민제도의 부작용 최소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제도 개선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 계획 수립	1월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침 개정	2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3월	
2/4분기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본 발간	5월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및 지침 개정	5월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	5월	
3/4분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7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및 지침 개정	9월	
	영주(F-5) 자격 지침 개정	9월	
4/4분기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등) 지침 개정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침 개정	12월	
	체류·사증 담당자 역량강화 기법발표회	12월	
	동포체류지원센터 역할 강화(재지정, 간담회 개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및 국내 관광업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용주와 농·어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예정인 국내 기업
- (이해관계집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시행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 우수인재 및 관광객 유치,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비자·체류 관련 이민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및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50	67	73	80	'22년도 실적의 10% 상향된 값을 반영하여 '23년에 80건 제·개정할 것을 목표로 설정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 제·개정 건수	법령, 지침, 고시, 보고서 등 관련 문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이용자 만족도(점수)	77.96	79.4	81.1	82.8	하이코리아* 이용자 만족도 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9%로, '22년도 실적에 3년 평균 추세치(1.9%)의 10% 상향된 값(2.09%)을 반영하여 '23년에 82.8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국적 등 규정 안내, 온라인 체류민원 신청, 방문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참여자 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하이코리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IV-1-③)

#### □ 추진배경

- 코로나19 완화 후 중단되었던 사증면제제도를 재개하자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수 또한 급증, 외국인 유입 급증에 따른 서민 일자리 잠식 및 슬럼가 형성에 따른 국민 불만 및 치안 불안감 고조
- 보호외국인의 신체·사생활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 보호질서 확립 위주의 현 보호시설 개념을 탈피하여 「개방성」이 확대되는 새로운 모델의 인권친화적 보호시설 운영, 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거부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시행을 통한 단속 실시
  - 범정부적 차원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해 출입국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국민 불안 요인 해소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하여 체류질서 확립
-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
  - 보호시설 환경 개선 적극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1월	
	○ 특별단속지역 재지정 및 운영방안 수립	1월	
	○ 외국인 보호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	2월	
	○ 정부합동단속 실시	3~4월	
2/4분기	○ 집중단속 (국민안전 위협·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및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6월	
3/4분기	○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 위원회	9월	
	○ 집중 단속 (유홍 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9~10월	
4/4분기	○ 청주보호소 대안적 보호시설 전환 시범 운영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불법체류·취업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보호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외국인인권단체(NGO),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노총·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외국인 불법고용 기업체 등

**□ 기대효과**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
-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단속 강화로 체류질서확립
- 보호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1) 외국인체류관리(1233)				
	외국인보호관리(300)	일반회계	0.182	0.1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 신 규 ) 불법체류외국인 출국 조치 실적 ( 명 )	69,423	44,252	45,576	58,400	○ 최근 3년간 불법체류 단속 활동 및 자진출국신고를 통해 출국한 외국인의 평균값(53,083)에 10% 적극 상향 조정 < 최근 3년 단속 및 자진출국자 수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실적명 + 자진출국자수	출 입 국 관 리 정보시스템 (ICRM2019) 을 통하여 추출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20</td> <td>'21</td> <td>'22</td> </tr> <tr> <td>실적(명)</td> <td>69,423</td> <td>44,252</td> <td>45,576</td> </tr> </table>	구분	'20	'21	'22	실적(명)	69,423	44,252	45,576		
구분	'20	'21	'22												
실적(명)	69,423	44,252	45,576												
( 신 규 ) 개선된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점 수 )	-	-	신규	90	○ 정성지표(만족도)의 상승 한계를 고려하고 최초 설정 지표임을 감안하여 첫 해는 90%로 설정	(희생보호소 만족도 X 80%) + (울산사무소 만족도 X 20%)	만족도 조사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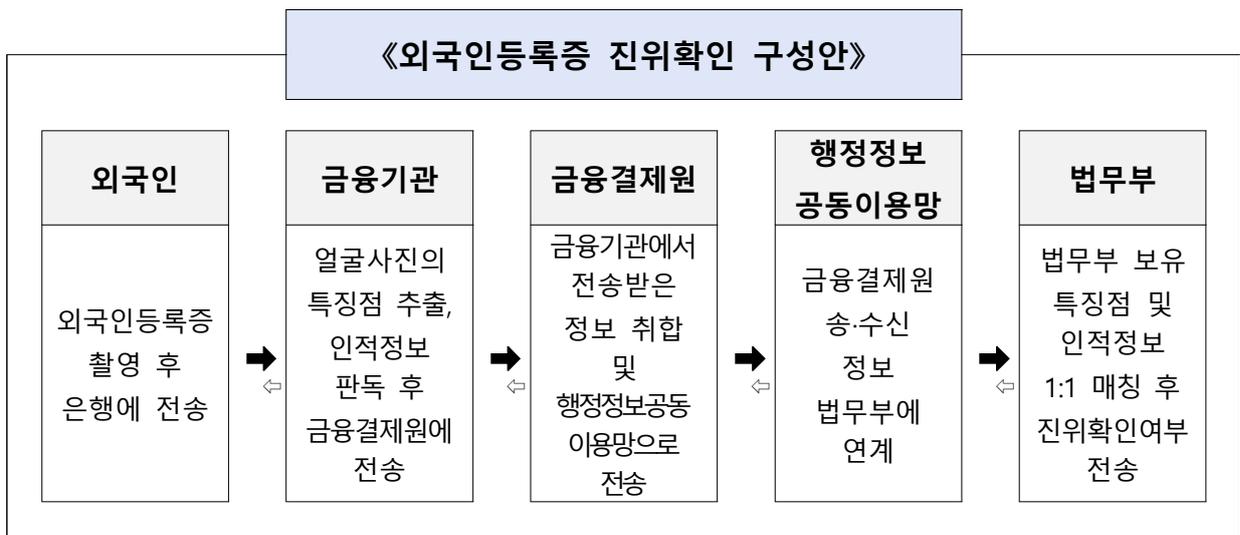
####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IV-1-④)

##### □ 추진배경

- 종이없는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필요성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연계 기획 및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 외국인도 인터넷 은행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22. 12. 13. 공포
  -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사업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3. 8. 진위확인 서비스 개시 예정



## ○ 새로운 외국인신분증 발급

- 2023. 4. 1.부터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 신분증(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그간 외국인 신분증 상 흑백사진에 대한 거부감과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의 차별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진 색상을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하고 사진 크기를 35% 확대
-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되어 있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QR코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추가



## ○ 정보화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세계적인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국가 간 이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민원인 및 공공기관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실시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을 사전 예방하고 이용자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력 향상

## ○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국 개인정보제공 담당자 연 2회 정례 교육 실시 및 신규·기존직원 대상 교육 수시 실시
-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미접속 사용자 계정 일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시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발간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출입국·외국인 통계 전반을 분석하여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발간·배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크루즈 운항 재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점검	2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계기관 사용자 일괄정비	2월	
	○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실시	2~3월	
2/4분기	○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발급	4월	
	○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발급제도 시행	6월	
	○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6월	
3/4분기	○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7월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7월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개시	8월	
4/4분기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사업 완료	12월	
	○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사업 완료	12월	
	○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인터넷 은행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 시인성과 활용도가 높아진 신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외국인,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국민 및 외국인
- 우범자의 대한민국 입국 원천 차단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체류 외국인
- 출입국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개선, 정보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등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증명발급 업무 담당자
- 출입국·외국인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계 등 업무 관련자

□ 기대효과

- 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로 위험외국인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가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
-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및 신뢰도 향상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국민들의 통계접근성 강화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	-	-	80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시스템 개선 반영</li> <li>○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올해 8월부터 개시되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척도상 만족 수치인 80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li> <li>※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li> </ul>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유 관 기 관 정 보 연 계 실 적 ( 건 )	12	22	2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망연계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의 실적에 대한 지표로서, 연계업무의 난이도 및 기관 간 업무협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27건) 대비 약 11% 상향값을 목표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 실적건수</li> </ul>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등

## ㉔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IV-1-㉔)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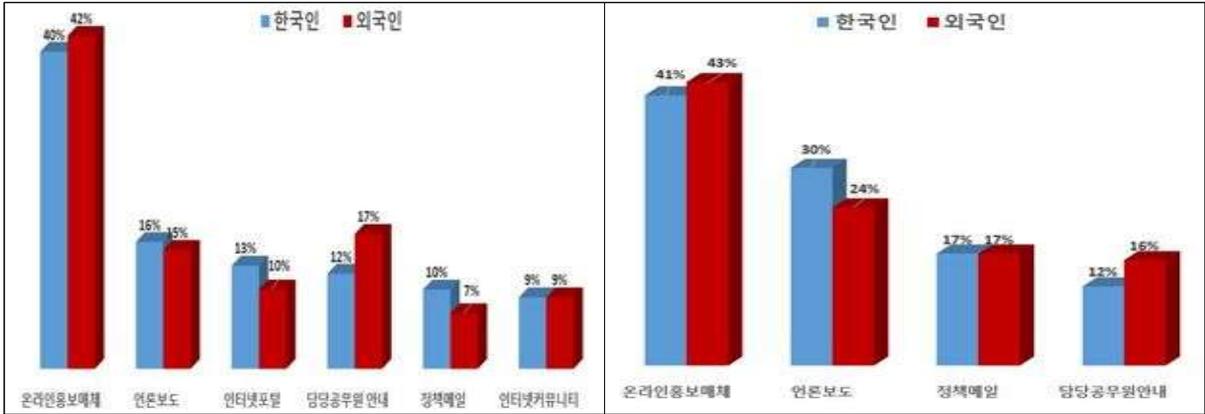
- 이민 선진국을 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신뢰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 지지기반 확보
- 정책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홍보 매체 활용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기획으로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민행정 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향상
  - 출입국 업무 및 정책 등을 출입국 직원의 하루를 통해 소개하는 쉽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획하여 본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이민 정책 현안 집중 홍보 및 정책 체감도 향상
  - 난민, 불법체류 등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필요성 강조
  - 출입국심사, 사회통합 등 정책 고객과 접점이 큰 정책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
  - 언론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수시로 정책고객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주요 정책 시행 및 변경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홍보 효과 제고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적인 국가기관 이미지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언론 동향, 온라인 여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책 고객의 관심사 파악 및 선제적 대응·홍보 추진
    -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에 대해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하고 담당자 인터뷰·기고 등의 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부정 여론 형성 억제
  -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미담사례를 홍보하여 긍정적 인식 제고
    - 세계인의 날 행사, 미담사례집 발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共Zone’) 등을 통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사례를 적극 홍보
  - ‘규제 개혁’ 사례 홍보를 통해 정책 신뢰 기반 확보 및 긍정적 인식제고
    - 출입국·외국인 정책 중 일반 국민이나 정책 수혜층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사례와 성과 등을 적극 홍보
  - 디지털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영향력이 큰 온라인홍보(유튜브, SNS 등)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객 중심 홍보 실시
      - \* 직관적인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동영상 등
    -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SNS 온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해 온라인 홍보 매체 활성화
- ※ '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외국인 모두 희망 홍보 매체 1순위로 ‘온라인 홍보 매체’(국민 41%, 외국인 43%)를 선정함

### 【희망 홍보 매체】



- 정책 고객의 수요 파악을 위한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 홍보 매체 활용도 및 만족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희망 홍보 매체 등 조사를 통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본부 대표 홈페이지 상시 개선
  - 낮은 가독성, 정책 정보 수집 경로가 복잡한 경우 등 홈페이지 이용 불편 사항들을 적극 개선
  - 무빙배너나 인포그래픽 삽입 등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직관성 제고

###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계획 수립 및 용역입찰	1~2월	
	○ 출입국 현장투어 계획 수립 및 실시	3월	
2/4분기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홍보	5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4~6월	
3/4분기	○ 온라인 이벤트 진행	8월	
	○ 이민자 사회 공헌 사례 발굴 및 홍보	8월	
4/4분기	○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달력 제작 및 배포	12월	
	○ 정책메일 발송	연중	
	○ 출입국 현장투어 실시	연중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일반 국민과 국내·외 체류 외국인
  -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와 관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출입국 현장투어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현장투어 신청 오픈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선착순 마감제도 실시
- (이해관계집단)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언론기관
  -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등 언론기관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내·외 외국인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주한 외신 및 해외 언론사를 활용하여 홍보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설명, 설명자료 배포 등 적극 대응

## □ 기대효과

- 정책고객의 눈높이에서 이민 정책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국내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의 미담사례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공존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통합 촉진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책홍보활성도(점수)	25,912	36,177	42,075	48,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회복 국면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한국 방문행사 및 주한공관원 접촉과 '22년 하반기부터 재개한 출입국 현장 투어 대면 홍보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측정산식 개선</li> <li>- '21년도 대대적인 신규 SNS 플랫폼 정비로 SNS Fan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후 플랫폼이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상승 한계치에 도달하여 추가 Fan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이번 연도 실적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li> <li>- 급속한 홍보환경 등으로 전년도 대비 실적을 높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른 홍보 환경 개선을 감안하여 15% 상향한 45,874점으로 설정, 이는 20년도 실적치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임 ※ '21년도 증가율: 39% 22년도 증가율: 10%</li> <li>- 최근 3년의 추세치는 25%이나 전년도 목표치에서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산출한다면 목표치는 49,863점으로 이는 3년 전인 20년도 실적치의 약 2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임</li> <li>- 급격히 증가한 추세치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상승한계치 도달과 높은 목표 수치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점, 추세치보다 하향해서 목표치를 산출한다하여도 이는 3년전 실적치의 122%에 달하는 적극적인 수치임을 고려 전년도 실적치에서 15% 상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고위급 인사 단체 등의 한국 방문 행사 해외연수, 출장 주한 공관원 접촉 시 홍보한 실적을 결과 보고서 사진 명함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는 경우(1회 50점)</li> <li>-출입국 현장투어(1회 15점)</li> <li>-홍보책자 동영상 제작(1건당 30점)</li> <li>-보도자료 · 인터뷰 · 기고(1건당 10점)</li> <li>-리플릿 · 포스터 · 배너 제작 (1건당 10점)</li> <li>※ 홍보책자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시 건당 기본 점수에 언어별 추가 50% 가점</li> <li>-뉴스레터 발송(1건당 5점)</li> <li>-온라인 이벤트 실시 (1건당 30점)</li> <li>-웹툰 등 외부작가 의뢰 제작 정책 홍보물 및 동영상 포스팅 (1건당 10점)</li> <li>-정책 포스터 등 홍보물 포스팅 (1건당 5점)</li> <li>-기획 홍보물 포스팅(1건당 30점)</li> <li>-SNS(페이스북, 유튜브) 일반 포스팅 (1건당 1점)</li> <li>-SNS Fan 수 증가</li> <li>페이스북 팔로워 수: 2점</li> <li>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점</li> <li>유튜브 구독자 수: 4점</li> <li>※ 채널별 홍보 파급력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 연수보고서, 사진자료, 홍보책자, 동영상, 페이스북 등 관련 자료</li> </ul>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홍보 만족도(점수)	90.3	90.39	90.6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조사 특성상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약 0.5% 상향 조정</li> <li>- 이는 3년 평균 실적치 90.4점보다 0.6점 높은 수치임</li> </ul>	설문항목별로 리커트 척도 5단계(매우만족 100점, 만족 90점, 보통 80점, 불만 70점, 매우불만 60점)로 측정 후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의 합계로 측정 ※ 정책메일 수신자, 하이코리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인지경로·제공자료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1) 주요내용

## □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23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 이민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아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장기적·종합적 전망에 입각한 5년간의 장기계획(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 ○ 이해관계자(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와 소통·협력하고, 국민공감대에 기반하는 이민정책 추진 노력

- 각계각층의 이민정책 전문가, 정책수요자 대상 간담회,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고 참여함으로써 외국인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국민 공감대에 기반하는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 노력

##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확충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자료수집

-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수립·추진·평가 등에 필요한 국내외 정책자료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이민정책 동향 등 조사 및 연구

## ○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법령 제개정 및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타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외국인정책 추진 등 기반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등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부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부처 및 국회 제출

## □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과학·기술 분야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외국 우수인재 유치
-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증서수여
  -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하여 국적증서수여함으로써 국적취득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정적 제도 운영
  -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외적 이탈허가 심의를 통해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외적 이탈허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

## □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정주 체류외국인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실화·다양화 추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지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분석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환류체계 마련
- 매년 5월 20일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식, 축하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재한외국인의 미담사례집 발간, 국내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자 멘토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내·외국인 상호문화 이해 제고 교육 운영 등을 통한 이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노력
- 재한외국인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과 협력하는 정착

지원 거버넌스 강화 등 추진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 부합하는 선진적 난민심사를 위해 난민전담공무원 및 난민전문통역인 등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
- 난민제도 정비 및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 추진 등 현행 난민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인도적 체류허가자 체류자격 신설 등 지침 개정 추진
  -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난민인정자 등의 정착 및 자립 지원

##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하는 국제 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복잡·다변화 추세인 이의신청 사례를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난민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심사 전문성 강화
-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난민불복 심사 법제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으로서의 이의심사 제도 운영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7.7	86.5	90.2	91.2	<p>○ 3년('20~'22)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3개) 평균 만족도 88.1기준에서 3.1p 적극상향 (작년대비 1%p 상향)</p> <p>* 최근 3년치 평균 만족도 - 2020년 87.7 - 2021년 86.5 - 2022년 90.2</p>	<p>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합계</p> <p>※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체 응답 중 '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의 합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가중치 기준) 교육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70%), 조기적응프로그램(2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10%) 각 가중치 부여</p>	설문지,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연 1회)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환경)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외국인 유입에 우려하는 입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 상존
- (관리계획)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동반자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발전하는 외국인정책 적극 발굴
  - 장기거주 합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
  - 관계부처, 이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외국인정책을 만들어가는 등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축

## □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외국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수립
- 현 국적선택 제도, 귀화제도 관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추진

## □ 내·외국인의 쌍방향 통합 환경 조성

- 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적응하기만을 요구하는 일방향 사회통합정책 보다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고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쌍방향 통합정책 적극 추진

※ 이민수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늘어나고,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 추세 ('14년 41.3% → '20년 28.7%)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0」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전 세계 난민발생 위기 상황이 범국가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 국민 정서를 고려한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을 위해 「난민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난민수용 관련 갈등 관리에 대해 노력 지속

##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안전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어 이의신청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심의 역량·전문성 확보 필요

※ 난민 이의신청건 : ('13) 349 → ('15) 3,257 → ('17) 3,723 → ('19) 4,067 → ('21) 4,718 → ('22) 3,748

- 난민신청인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난민 이의심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이의심의 체계를 개선할 계획임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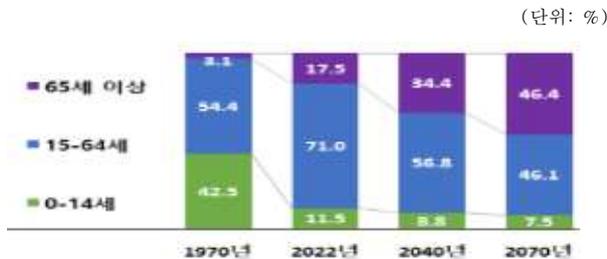
###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IV-2-①)

#### □ 추진배경

##### ○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 활용 필요

- (국가 인구정책 보완책)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충격을 완화·지연하는 보완책으로 활용

< 우리나라 인구구조 >



< 생산연령인구 비율 추이 >



\*출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2022

- (구성원 전체의 이익 지향)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정책이라는 인식 확대 필요
- (지역기반 정책으로 전환) 이민자가 실제 살아가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은 “지역”이므로 지자체 역량 및 중앙-지자체의 협력 강화 필요

##### ○ 국민공감대에 기반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노력 지속 필요

- 이민과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나,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 이민에 대한 국민의견은 점차 분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자 수용 또는 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변화

※ (2022.6월) 동의 43 : 부동의 50 → (2022.12월) 동의 50 : 부동의 46 (전국지표조사)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23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 이민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아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필요
-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장기적·종합적 전망에 입각한 5년간 장기계획(외국인정책 기본계획)으로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 ○ 이해관계자(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와 소통·협력하고, 국민공감대에 기반하는 이민정책 추진 노력

- 각계각층의 이민정책 전문가, 정책수요자 대상 간담회,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참여하여 외국인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 공감대에 기반하는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 노력

< 연령대 별 다문화수용성 점수 (2012~2021) >  
(단위: 점)



\*출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1

< 외국인에 대한 의견 (2019, 2022) >  
(단위: %)



\*출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2

### ○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확충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자료수집

-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수립·추진·평가 등에 필요한 국내외 정책자료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이민정책 동향 등 조사 및 연구

○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법령 제개정 및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타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외국인정책 추진 등 기반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등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법안에 대한 우리부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부처 및 국회 제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년 정책연구 추진 계획(안) 마련	2월	
2/4분기	○ 제31회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6월	
	○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6월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6월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1차)	6월	
	○ 범정부 인구위기 대응 TF 참여	6월	
3/4분기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2차)	8월	
	○ 제32회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9월	
	○ 제2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9월	
	○ '2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9월	
4/4분기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3차)	11월	
	○ '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합동)	12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개최	12월	
	○ 이민정책포럼 개최	연중	
	○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법령 개정 시행 및 타 법률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연중	

##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수혜자) 국민, 재한동포, 재한외국인(국내 체류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외국인정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 등

## □ 기대효과

-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개방과 포용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 나아가, 출입국·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수용과 관리를 통해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 경제의 흐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노력(건)	45	47	53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법령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필요</li> <li>○ 또한, 국격에 걸맞은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동향 수집·분석 및 관계부처, 정책 전문가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요구</li> <li>○ 지난 3년간 실적값 평균 추세치 (10.75%)를 '22년도 실적값에 대비하여 목표치 적극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개정 - 법령 개정계획(안) 마련(건수)</li> <li>- 공포·시행(건수)</li> <li>- 관련 타법 제·개정에 대한 우리부 의견 제시(건수)</li> <li>○ 의견수렴 및 협력 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기본 계획 수립(건수)</li> <li>- 전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건수)</li> <li>- 관계부처 담당자 또는 민간인 참석 위원회 개최 및 참석(건수)</li> </ul>	각종 보고문서, 정보보고, 간행물, 각종 회의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 관련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청회, 간담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및 참여(건수)</li> <li>-이민정책포럼 개최(건수)</li> <li>-관계부처와 협업 결과 발표(건수)</li> <li>○외국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건수)</li> </ul>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 - -	75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정책 이해증진, 외국인 정책 현안 및 의견공유를 위한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도 측정</li> <li>○신규지표임을 감안, 10점 척도 측정에 따른 “만족, 80점”과 “보통,60점”의 평균값에 가중치 7%를 적용하여 목표치 적극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li> <li>※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li> </ul>	워크숍 참석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IV-2-②)

###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도 매년 1만명 이상이 꾸준히 귀화 등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여 누적 귀화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적취득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적취득자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필요
-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국적법 개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 등에 따른 제도의 조기 안정화 및 기존 귀화제도 및 국적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적정책 적극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 실시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의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사전 또는 사후 교육 실시
- 국적제도 개선 및 홍보
  - 귀화면접심사 제도,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시스템 효율화, 국적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적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다양한 방식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 및 홍보로 수요자의 국적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권익 증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외적 국적이탈 관련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2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설명회 참석	2월	
	민간면접관 위촉 및 교육	3월	
2/4분기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재외선거관 교육	4월	
	귀화 면접심사 업무 개선 및 홍보	5월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6월	
3/4분기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국적실무 교육 실시	7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국적관정 합동현장 접수	9월	
4/4분기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관련 연구용역 완료	12월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12월	
	특별귀화자 등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12월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우수외국인재 등 국적취득 신청자, 복수 국적자 등 국민
- (이해관계집단) 외교부, 국가보훈처, 국적업무 전문가 등

**□ 기대효과**

- 귀화자 등 국적취득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한편, 질 높은 국적행정 구현을 통한 수요자가 공감하는 국적제도 개선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국민 정체성 함양 실적(점수)	-	-	(신규)	35	<p>국적취득자 등에 대한 국적증서수여식과 국민정체성함양 교육은 국적취득자(국적취득신청자 등 포함)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과지표의 측정척도로서 의미가 있음</p> <p>이에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율과 국민정체성함양교육 만족도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35점으로 목표치 설정</p> <p>※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율(14점 : 20 * 0.7)과 국적취득예정자 통합시민교육 만족도(21점 : 70 * 0.3) 합산</p>	<p>○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율(가중치 70%)</p> <p>-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자 중 행사형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비율로서 전년 실적(11.4%) 대비 20% 적극 상향한 13.6%를 목표치(점수환산 20점)로 설정</p> <p>※ 0-10% : 10점 11~ 20% : 20점 91~100% : 100점</p> <p>○ 국적취득예정자 통합시민교육 만족도(가중치 30%)</p> <p>-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70점으로 목표치 설정</p> <p>※ 매우 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p>	출입국관리시스템 통계, 관련 공문, 보고서 등												
제도개선 실적(점수)	305	390	495	534	<p>최근 3년간의 목표치 대비 평균 지표달성율(8%)을 고려 전년도 실적(495점) 대비 8% 상향</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목표</th> <th>성과</th> </tr> </thead> <tbody> <tr> <td>'21년</td> <td>26.0% ↑</td> <td>27.8% ↑</td> </tr> <tr> <td>'22년</td> <td>14.0% ↑</td> <td>26.9% ↑</td> </tr> <tr> <td>'23년</td> <td>8% ↑</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목표	성과	'21년	26.0% ↑	27.8% ↑	'22년	14.0% ↑	26.9% ↑	'23년	8% ↑		<p>- 국적법 개정 (각50점)</p> <p>-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각30점)</p> <p>- 훈령 등 제·개정(각20점)</p> <p>- 제도개선안 마련(건당10점)</p> <p>- 전문가회의 등 관련단체 의 견수렴 실시 (각10점)</p> <p>- 시스템 개선(건당5점)</p> <p>- 국적 설명회 강연 및 홍보(각20점)</p> <p>- 사할린동포 교육프로그램 제작, 귀화신청자의 국민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 등 (각10점)</p> <p>- 일반 책자간행문 발간 등 (각5점)</p> <p>-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예외적 이탈허가 건수 (1명당 5점)</p> <p>- 패스트트랙에 따른 거주 (F2) 자격부여(1명당 1점)</p>	<p>관련 법령, 지침, 고시문, 자체 생산 보고서, 공문, 정보보고, 간행물, 각종 회의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 관련문서</p>
구분	목표	성과																	
'21년	26.0% ↑	27.8% ↑																	
'22년	14.0% ↑	26.9% ↑																	
'23년	8% ↑																		

###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IV-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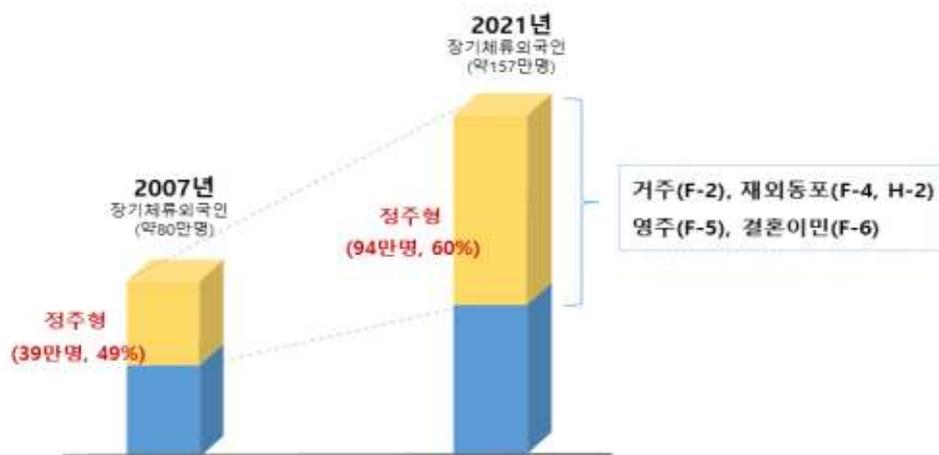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 정주형 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통합정책의 국민적 요구 증대

- 취업·체류·가족동반이 자유로운 정주형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국민과의 생활 접점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의 중요성 부각

※ 통합의 대상이 되는 정주형 체류자격(F-2, F-6, F-5, 동포)의 규모가 '07년 대비 2.4배(39만명 → 94만명) 증가

#### <정주형 체류자격의 증가 현황>



- 이민자 사회통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국 전(前)부터 입국초기, 영주·국적취득까지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

##### ○ 이민·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과 우려 존재

- 그간 온정적 시혜정책은 이민자 자립 방해, 국민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은 악화\*, 정부지원과 자립의 정책적 균형이 긴급

\* 이민수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늘어나고,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의 비중 감소 추세 ('14년 41.3% → '20년 28.7%)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 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적응하기만을 요구하는 일방향 사회통합 정책보다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고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쌍방향 통합정책 적극 추진

## ○ 국정과제 선정

- 이민통합과 과제(2개)\*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이에 대한 추진으로 사회통합정책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과제 48번) ① 「사회통합 지수, 개발 정책 활용(컨설팅 사업 포함), ②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발전 기금 설치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이민정책 틀에서 자립과 통합 유도

- 이민자 생애주기·체류단계별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이민정책과 연계한 일관된 관리 및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립과 통합 유도

###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국정과제)

-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 정합성 제고

###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

- 계절근로자, 재정착난민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도입국자녀 또는 유학생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수 의무화 또는 혜택 확대 추진

### ○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 협업) 전국다문화도시협의체\* 등 이민자 밀집지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민자의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기반 강화

\*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도시 2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

- (민·관 협력)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속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대학,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비영리법인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이민·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 다변화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이민자 사회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성화, '대국민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및 전달체계' 연구용역 실시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 개정	1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책자 발간	1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강사 직무교육 실시	2월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2월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위촉 등 정비	3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회 위촉 등 정비	3월	
2/4 분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침 개정	4월	
	다문화사회전문가 상반기 이수교육 실시	4월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4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	5월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탁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5월	
	제16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유공자 포상식) 개최 및 미담사례집 발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 분기	이민정책 이해 교육 과정 운영	7월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등 정비	8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 실시	8월	
	조기적응프로그램 상반기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8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하반기 신규강사 직무교육 실시	9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9월	
	다문화사회전문가 하반기 이수교육 실시	9월	
4/4 분기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재 개편	10월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11월	
	이민정책 이해 교육 과정 운영	11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개최	11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고시 개정	12월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개정	12월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자녀 등 장기체류 제한외국인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이주배경 부모, 자녀 등 가족을 둔 국민

-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유관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관계자
-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기관, 전담직원, 강사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대학관계자 등

□ 기대효과

- 입국초기부터 장기체류 등 단계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능력 제고 및 국민과의 갈등 예방
- 세계인의 날(5.20.) 개최, 내·외국인 상호문화이해 제고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계기와 문화다양성 인식기반 마련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체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V-1-일반재정③)				
①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477	541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45	140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304)		104	105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공통)	-	신규 51.1		53.7	<p>- 코로나19 상황과 '22년 신규지표로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p> <p>- '20년 코로나19 감염병확산에 따른 교육 및 평가 중단으로 이수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1~'22년 비대면 화상교육 전면 시행 및 컴퓨터기반평가(CBT) 도입 등으로 교육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이수율이 크게 증가함</p> <p>- '23년은 사전평가를 통한 5단계 교육참여자 증가 및 CBT 종합평가 확대 등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간의 큰 변동 폭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 상향한 목표치 설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21년</th> <th>'22년</th> <th>'23년 (목표치)</th> </tr> </thead> <tbody> <tr> <td>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수료자 (명)</td> <td>12,107</td> <td>11,279</td> <td>11,840</td> </tr> <tr> <td>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명)</td> <td>4,305</td> <td>5,767</td> <td>6,665</td> </tr> <tr> <td>사회 적응률 (전년대비 증감율)</td> <td>35.6% (12.6%)</td> <td>51.1% (43.6%)</td> <td>53.7% (5.0)</td> </tr> </tbody> </table>	구 분	'21년	'22년	'23년 (목표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수료자 (명)	12,107	11,279	11,840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명)	4,305	5,767	6,665	사회 적응률 (전년대비 증감율)	35.6% (12.6%)	51.1% (43.6%)	53.7% (5.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통계 (공통)
구 분	'21년	'22년	'23년 (목표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수료자 (명)	12,107	11,279	11,840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명)	4,305	5,767	6,665																				
사회 적응률 (전년대비 증감율)	35.6% (12.6%)	51.1% (43.6%)	53.7% (5.0)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	496	609	671	738	<p>○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지원실적으로 외국인 사회적응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사회통합협의회 개최, 이민자사회통합 관련 자료 발간 등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실적을 점수화함</p> <p>○ 최근 실적치 추세치(37.5%)를 고려하고자하나, '19년(324점)에 비해 전년도 실적이 107.10%가 증가하는 등 추세치를 반영하기에 그 실적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한정된 기간 동안 제도개선, 사회통합협의회 개최 홍보 등을 37.5%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전년도 실적치에서 10% 상향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함</p>	<p>○ 총 738점</p> <p>-제도개선안 마련 (각 10점)</p> <p>-유관단체 간담회, 회의 등 의견수렴 (각 5점)</p> <p>-사회통합협의회 개최(각 3점)</p> <p>-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 (각 3점)</p> <p>-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발간 (각 3점)</p>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IV-2-④)

##### □ 추진배경

- '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불안정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 국내 난민 신청 건수 급증 추세 및 개별 신청 사안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걸맞은 난민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

※ 난민신청 건수는 '22년 총 84,922건으로 「난민법」이 시행된 '13년 대비 633%(1,574건 → 11,539건) 증가

##### < 난민 신청 및 보호(인정+인도) 현황 >



- 사회통합 차원에서 난민인정자 등의 인도적 보호 및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범국가적 협력 및 교류 강화 등 추진 필요

※ '22년말 기준 난민보호율 8.2%(3,823명)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민법」 개정 등 난민제도 정비
  - '21. 12월 국회에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정안 대비 하위법령 준비
  - 인도적 체류허가자 체류자격 신설, 재정착난민 수용 및 운용 지침 개정 등 난민 관련 지침 정비 추진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한 국가 간 교류 활동 강화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례 수집 및 연구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 난민심사 역량 강화 추진

-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 소속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난민심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난민통역 품질 및 신뢰도 제고, 난민(전문)통역인 체계적 관리 도모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 재정착난민 대상 맞춤형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가족별 멘토제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및 정착지원 강화
- 난민인정자 등의 정착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관계기관, 난민지원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논의 지속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1월	
	○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가이드북 발간	3월	
	○ 처우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3월	
2/4분기	○ 재정착 난민 수용 계획 수립	4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	5~6월	
	○ 상반기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평가	6월	
3/4분기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7월	
	○ 인도적체류자 체류자격 개편 후속 조치	9월	
	○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	9월	
4/4분기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대상자 추가 선발	10월~12월	
	○ 하반기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 평가	12월	
	○ 국제회의 참석	12월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재정착희망난민, 인도적체류자
- (이해관계집단) 난민관련 민간단체(NGO), 유엔난민기구(UNHCR)

□ 기대효과

-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는 난민정책 운영을 통해 실제 난민을 적시에 보호하고 난민제도 악용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난민제도 운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난민담당자 및 통역인 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	-	신규	80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 제공 및 난민 권리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담당자 및 통역인 교육의 참석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후 반영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척도상 만족 수치인 80 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 설문 항목 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난민 제도 정비(점수)	165	195	234	257	난민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장기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22년 난민 제도 정비 실적 234점 대비 10% 상향값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법령 개정(50점) -훈령 개정(20점) -지침 개정(15점) -국회의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설명(10점) -법률안 소위 상정(10점) -국회 대응 등(10점) -제도 연구 및 개선 마련(10점) -관련 책자 등 발간(15점) -업무 시스템 개선(20점) -관계기관 간담회 등 개최(10점) -대국민홍보(20점) -국제회의 참석 파견 등(10점) ※제도정비 활동별 실적 집계	관련 보고서 및 정보 보고 등 관련 문서

##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Ⅳ-2-⑤)

### □ 추진배경

- '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 국가 및 사례의 복잡·다변화, 주변국 정세의 급격한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필요
- 난민 소송 급증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난민의 권리를 행정청 단계에서 신속하게 구제하여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개선을 통한 고도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 제정
  - 이의신청 업무 처리 절차, 조사보고서 작성, 난민위원회 운영 및 국가 정황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적정성 제고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 이의신청 접수, 사실조사, 결정 통지 등 이의신청 관련 제반업무의 처리 기준을 규정한 지침의 미비점 보완 등
- 난민·이주 용어 사전 제작
  - 난민·이주 관련 국제 법률 용어 등 심사 보고서에 빈번하게 번역·인용되는 용어 사전을 제작하여 번역의 통일성 확보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추진
  -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단을 새로 구성

\*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20. 7. 위촉), 난민 이의신청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 제공(출석, 서면)

○ 「난민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알림 시스템 구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의 진행경과 및 심의 일정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국내외 난민 불복심사 관련 법 제도 및 판결례」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해외 난민 불복심사 관련 법 제도 및 국내외 난민 불복 심사, 판결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 도입 방향 검토

○ 주제별 난민심사 안내서 「아동편」 마련

- 심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친화적 심사 방법을 제시하는 안내서 마련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 (난민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 주관으로 난민조사관에 대한 실무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조사관 육성
-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운영) 국제 난민 심사 기준, 이의심사 기법, 국가정황정보 조사 기법 등 연구를 위한 스터디 모임 정례 개최
- (소송 패소 사건 분석)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분석·평가 후 향후 심사에 반영
- ('올해의 난민조사관 선발) 연 1회, 성과가 우수한 난민조사관 1명을 '올해의 난민조사관'으로 선발하여 포상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체계 고도화

- (업무 매뉴얼 제정) 국가정황정보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가

정황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체계화

- (해외주요국 국가정황자료 번역) 해외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가 포함된 국가별·주제별 보고서를 선정하여 전문가에 번역·감수의뢰함으로써 난민심사 및 소송에 활용도 제고
- (국가보고서 발간) 난민 신청 다발국에 관한 국가정황정보를 신청 사유별로 통합·정리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심사에 활용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올해의 난민조사관 선발·포상	2월	
	국가보고서 발간	2월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아동편」 발간	3월	
2/4분기	외부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4월	
	국가보고서 마련	5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6월	
3/4분기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개편 추진	8월	
	난민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9월	
	해외주요국 국가정황 자료 번역	9월	
	난민 이의신청 업무 매뉴얼 마련 추진	9월	
4/4분기	난민소송 패소 판례 분석	10월	
	국가정황정보 업무 매뉴얼 제정 추진	12월	
	「해외 난민 불복심사 관련 법 제도 및 국내외 난민 불복심사, 판결례 연구」 연구용역 추진	12월	
	난민위원회 개최	연중	
	난민조사관 및 국가정황정보 관련 등 교육 운영	연중	
	난민 이주 용어 사전 발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
- (이해관계집단) 유엔난민기구, 난민관련 시민사회단체(NGO)

## □ 기대효과

- 공정하고 전문적인 이의신청 심사를 통한 난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난민 보호의 국제적 책무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
- 행정청 단계에서의 난민 이의심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사법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준수법절차 보장을 통한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난민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난민 이의신청 보고서 품질 향상 (점수)	-	-	-	80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조사관의 역량과 국가정황 정보가 집약된 이의신청 보고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집단인 난민위원회 위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보고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li> <li>○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10점 척도 측정에 따른 "만족"인 80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 자수</li> <li>※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li> </ul>	이의신청 보고서에 대한 난민위원회 위원 설문조사 결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개선(점수)	45	65	78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실적 78점 대비 20%이상 상향 목표치 설정</li> <li>※ 증감율</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20</th> <th>'21</th> <th>'22</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45</td> <td>65</td> <td>78</td> </tr> <tr> <td>증감율</td> <td>신규</td> <td>44</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20	'21	'22	점수	45	65	78	증감율	신규	4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개정(각 20점)</li> <li>○ 훈령·예규개정 (각 10점)</li> <li>○ 지침 매뉴얼 난민 용어 사전 등 제정(각 30점)</li> <li>○ 지침 매뉴얼 난민 용어 사전 등 개정(각 5점)</li> <li>○ 업무 시스템 개선 (각 20점)</li> <li>○ 관계기관 업무 협력 체계 구축(각 15점)</li> <li>○ 연구용역실시(각 15점)</li> <li>○ 부처협의 등 의견조회 (각 5점)</li> <li>○ 제도개선안 마련(각 5점)</li> <li>○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워크숍 개최(각 5점)</li> <li>○ 대국민홍보(각 5점)</li> </ul>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등
구분	'20	'21	'22																
점수	45	65	78																
증감율	신규	44	20																



## **IV. 환류 등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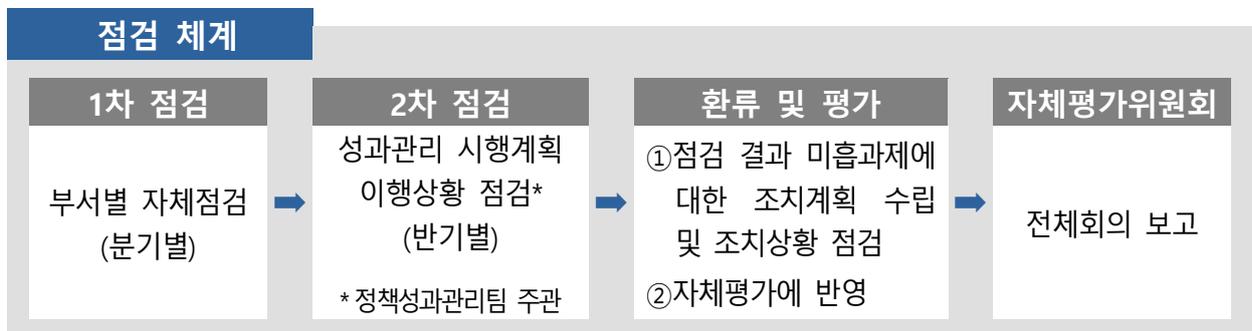
## IV

## 환류 등 관련계획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 「법무부 성과관리 점검체계」 구축·운영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및 추진실적의 상시적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 ※ BSC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의 관리 지표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
- '23년 법무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 달성정도 및 미흡과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 점검 개요

##### ○ 1차 점검: 부서별 자체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48개)의 이행상황
- (점검 내용) 연초 수립한 과제별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및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등
- (점검 주기, 방법) 분기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부서별 자체점검 후 실적 입력

○ 2차 점검: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48개)의 추진실적
- (점검 내용)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상황,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각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
- (점검 주기, 방법) 반기별, e-IPSES 시스템을 이용한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관리팀 주관 실적 점검·확인, 자체 평가위원회에 점검 결과 보고

○ 환류 및 평가

- (지도점검) 성과지표 실적 관리를 포함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전반에 대해 기관별 점검
- (미흡과제 관리) 이행상황 점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수립 및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리
- (자체평가에 반영) 자체평가 시 '추진일정의 충실성'(7점),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30점)' 지표로 평가·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전체위원회

-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각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의사결정 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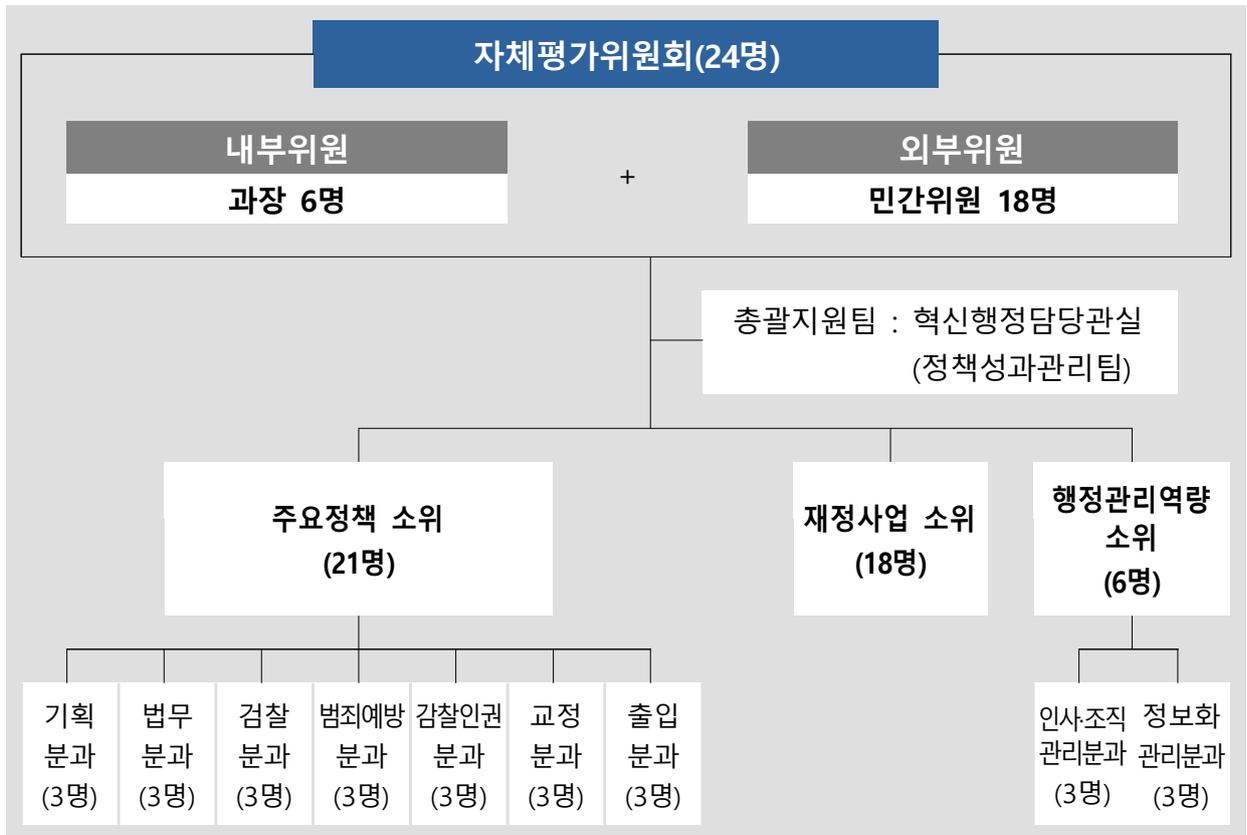
○ 소위원회(3개)

- 주요정책 평가결과 등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심의 및 평가
- 그 밖에 전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 각 부서에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
-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와 동일

○ 분과위원회(9개)

- 해당분과 주요정책 등 평가실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와 동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기획분과 위원이 인사·조직관리 분과 위원 겸임, 재정사업 소위는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 목 적

- 정책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여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분야별 활용방안

분 야	활 용 내 용
정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제, 정책개선이 필요한 과제, 평가결과 5~7등급에 속하는 과제 담당 부서장은 별도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 및 다음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li> </ul>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과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 수립</li> <li>※ 미흡사업 : 평가결과 하위 15% 과제</li> <li>- 평가지표인 예산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률, 외부 기관 성과우수성 인정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성과 제고방안을 수립</li> </ul> </li> <li>▶ <b>이행실적 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 시 논의 예정)</li> </ul> </li> <li>▶ <b>평가자료 대외 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사업별 평가등급)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정</li> </ul> </li> </ul>

분 야	활 용 내 용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심사를 위한 종합서열명부 작성 시 BSC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10% 이상 반영</li> </ul> </li> <li>▶ 성과급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BSC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20% 이상 반영</li> </ul> </li> <li>▶ 포상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우수과제 담당자를 선정하여 성과급 1등급 상향 지급 및 인사가점 0.25점 부여</li> <li>- 성과관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장관 표창 및 포상금, 포상휴가 지급</li> </ul> </li> </ul>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관리 유공부서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관리 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유공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관리 활동성과 제고 촉진</li> </ul> </li> </ul>

##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단계]

- 성과관리시스템은 BSC(균형성과평가제도)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뜻하며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고객·정책(업무)·운영/행정개선·학습성장 등 4개 관점에서 과제 및 지표의 실적을 관리
- 지표의 성격에 따라 분기·반기·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성과평가 부문 : 조직 및 개인]

### ○ 조직 성과평가

- 평가항목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와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비율은 '성과지표 평가' 90%,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10%로 함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란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뜻하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점수 산정
  - ※ 자체평가 결과의 경우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에 반영되어 조직 평가점수로 산정
-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평가'는 평가군별 평가자의 정성평가를 뜻하며, 조직별로 점수가 차등 부여
- 기관 및 부서 단위로 각각 평가가 진행되고, 부서의 조직 평가 점수 산정 시, 상위 조직의 조직 평가점수가 40% 반영

### ○ 개인 성과평가

- 조직 평가점수는 개인 평가점수의 기준이 되어
- 과/팀장급 이상 부서장은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를 개인 평가 점수로 하며
- 부서원의 경우, 부서장이 조직 평가점수의  $\pm 3$ 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평가결과의 환류]

- BSC 개인 평가점수를 승진 명부 작성(10%), 성과급 등급 결정(20%), 교육훈련자 선발(10%) 시 반영

### 3. 변화관리 계획

#### (1) '22년 변화관리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 행정개선활동으로 인한 법무행정 효율성 향상

- 자체 행정개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규정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연중 발굴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무행정 효율성 향상
  - 행정개선관리시스템, 공무원제안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과제 총 908건 및 공무원제안 22건 등 총 930건을 접수하여, 「난민(전문)통역인 보조를 위한 사전 고지제도 운영」 등 165건 채택·개선 추진
-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인 19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지원」 등 제도개선 우수사례 8건을 채택·포상

##### □ 창의적·개방적 법무행정 문화 조성

- 소통·협력·신뢰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일과 삶의 균형,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

## □ 창의행정 역량 개발

- 창의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창의력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
  - 창의적 지식역량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전자도서관 도입 등  
신개념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창의능력 향상  
및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재 육성
-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업무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과정 지원으로  
직무능력 제고 및 협업능력 강화
  - 각 분야의 직무능력 역량 제고 및 직장 내 우수사례 공유·전파,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2) '23년 변화관리 추진 계획

### ① 4대 전략 추진



내부 제도 개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간소화로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 제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 및 고안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으로 업무혁신 도모
창의 역량 개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한 법무행정능력 강화, 변화 추동력 확보
창의 문화 조성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문화 조성

## ② 세부 추진계획

### ① 내부제도 개선

####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간소화로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 제거

- 다양한 제안채널을 가동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 발굴 개선
- 업무처리방식 효율화, 예산절감 등 내부 효율성 제고 등

### ②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 및 고안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으로 업무혁신 도모

- 다양한 행정개선시스템을 활성화하여 24시간 제안시스템 구축
  - 직원이면 누구나 즉시 제안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대내시스템(행정개선시스템) 및 대외시스템(국민신문고 ‘공무원 제안코너’) 운영

#### □ 인센티브 다양화 · 활성화

-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 포상·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다양화, 우수제안 제출 시 인센티브 상향

### ③ 창의 역량 개발

#### □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한 법무행정능력 강화, 변화 추동력 확보

-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법무행정능력 강화
-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교육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법무행정 기반 및 환경 조성

변화관리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변화대응역량 강화

- 업무분야별 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과정 운영
- 협업형 연구모임 활성화 등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으로 협업을 통한 직무전문성 향상 도모

우수사례집 발간('23. 12.)

- 행정제도 개선 우수성과에 대한 공유 및 확산

④ 창의 문화 조성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 기관별 '행복한 직장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문화 조성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조직문화

- 기관장 등 간부진과 직원과의 주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부서 및 유관기관 간 교류활성화로 협력,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
- 각종 동호회 활동, 봉사·나눔활동, 재능기부등을 통해 교류 기회 증진 및 소통하는 문화 기반 조성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

-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등 상황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출퇴근 시각 설계가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조성

존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 신규 직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 도모  
및 우수부서/직원 발굴 및 포상 등으로 칭찬하는 문화 조성

### 3] 연간 추진계획

월별	주요 추진내용	비고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개선시스템 운영</li> <li>- 제도개선 제안 검토 (연중)</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li> </ul>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계획」 수립</li> <li>▪ 「2023년도 법무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5~11월)</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행정제도 개선 유공 연말 포상(기관, 개인)</li> <li>▪ 법무행정제도 개선 마일리지 BSC 반영</li> <li>▪ 「202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li> </ul>	

##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 목 적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의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거나, 이해당사자 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정책실효성이 저하되는 사례를 예방

###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체계

- (대상정책) 원칙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모든 관리과제
- (의견수렴 주체) 원칙적으로 과제 담당부서, 필요시 행복민원센터, 정책성과관리팀에서도 의견수렴 실시
  - 의견수렴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 (의견 수렴방식) 해당과제별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과제담당 부서에서 선정,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 현장방문, 간담회, 여론조사,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
- (의견 수렴 점검·평가)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여부 및 정책 반영 여부를 자체평가에 반영
  -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

###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방안

-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정책참여), 규제개혁신문고,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코너 등 각종 대국민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의견 수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정책참여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찬반토론, 의견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 정책고객 체계적관리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 국민소통을 위한 정책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견 적극 반영
  - 온·오프라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류 강화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과 관련한 정책현장 외 대학교·지방자치단체 등 민원사무와 관련한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
    - 접수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공모제안 활성화로 국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발굴된 개선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행복민원센터와 실·국·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원·정책 제도개선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업 성과 제고
- 일선 직원 의견 적극 수렴 및 인센티브 강화
  - 지도방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 직원 의견 적극 수렴
  -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의견 공유 및 사기 진작

- 적극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서비스 동기 부여 강화

##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여부 자체평가 반영

- 현장 의견 수렴, 반영도 및 민원제도 우수사례 선발결과 등을 '22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관리
-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여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자체평가에 반영

## ※ 단계별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추진 프로세스

### < 정책 수립단계 >

- ①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이 누구인지 구체화
- ② 정책의 특성별로 현장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방법 결정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정책 수요자별 심층 면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조사 등
- ③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별로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 ④ 수렴된 의견의 실행가능성, 정책수요자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항은 정책 수립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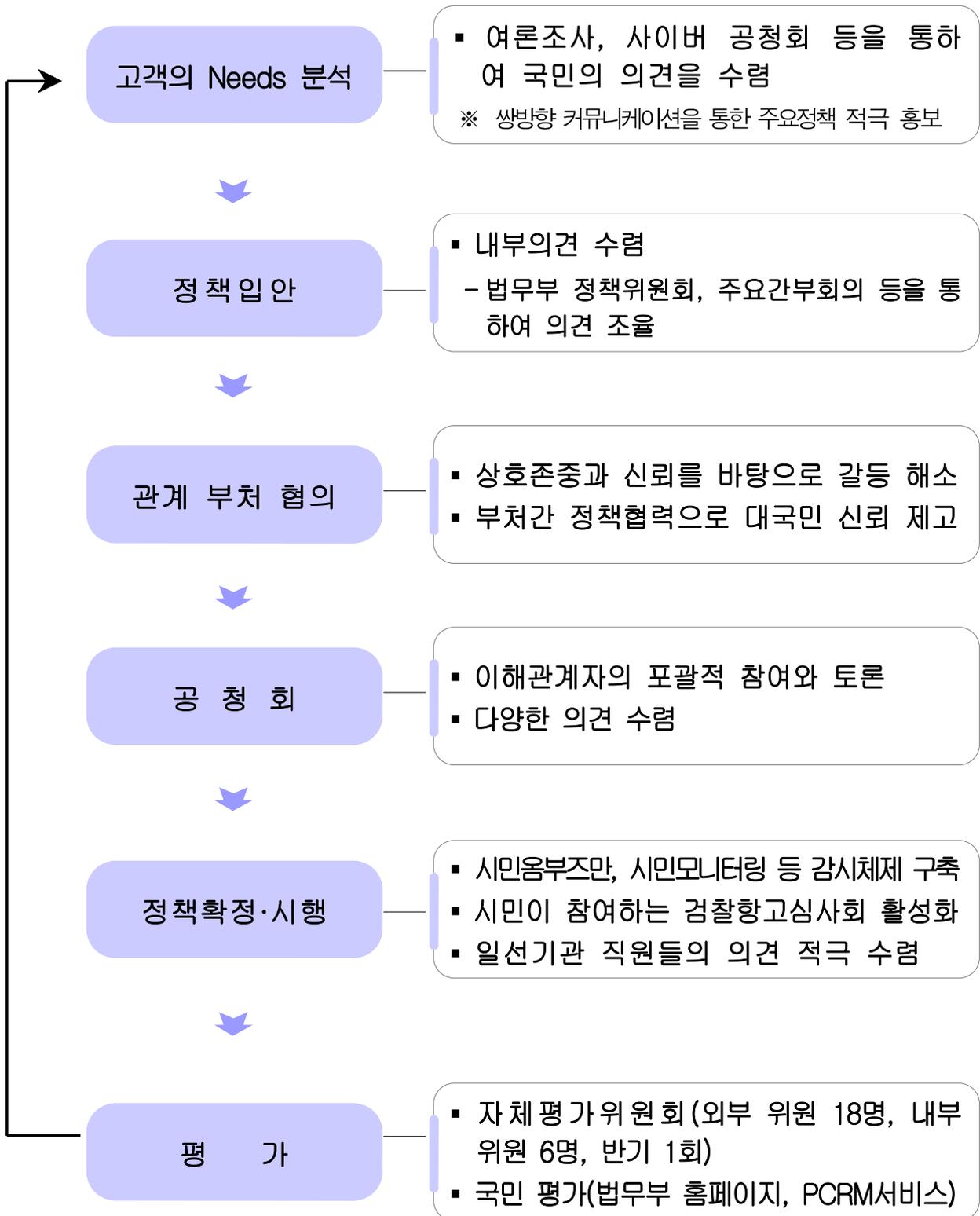
### < 정책 집행단계 >

- ① 집행과정에서의 현장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 ② 정책 추진경과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
- ③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하여 정책 집행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 < 정책 평가 및 환류 >

- ① 정책 현장의 여론,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통해 사후 평가 실시
- ② 사후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 시 환류

## 정책추진 체계도



## □ 성과목표별 현장의견 반영 계획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①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성과목표 1 -1)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제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UN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우리나라 인권상황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참여 등 회의 개최
	인권침해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사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화상조사 시스템 점검,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설문 및 면담, 인권감수성 심화 프로그램을 위한 내부강사 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정책현장 점검 - 인권감수성훈련교육 대상자 상대 설문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예방, 인권사각지대 발굴·해소, 인권 교육 등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 체계 구축	- 언론보도, 관계기관 협의, 형사법·형소법 등 특위, 세미나, 법령 제·개정 건의 민원 등을 통해 형사관계 법령·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 구축 방안 모색
②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1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정기 통계 보고 점검 -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수시 지도점검 -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 워크숍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근무환경 등 점검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현장의견 수렴 - 진술조력인이 상근 배치된 해바라기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청취 -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하여 우수조력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반영 - 진술조력인 자문단 간담회를 통하여 신규 양성 선발방식, 교육과정, 자격관리방안 등 의견 수렴 - 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⑩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성과목표 11- 1)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 지속 추진</li> </ul>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공정거래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중요 경제범죄를 적극 단속</li> <li>-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범죄유형 파악 등 비리 심화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결과 발표 등 홍보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제도개선 발굴을 통한 정책반영</li> </ul>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li> <li>- 검찰 수사단계별 치료·재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등을 활성화하고 재범 예방</li> </ul>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경찰(해경), 변협 실무자로 실무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 선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li> <li>- 학계, 검찰, 경찰(해경), 변호사단체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아니한 의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결정</li> </ul>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적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범죄 대응 고도화 정책 추진</li> <li>- 국회, 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li> </ul>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민원, 국민신문고 등 적극활용하여 국민 의견 수렴</li> <li>-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 수렴하여 정부의 일관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li> <li>-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확보, 적극적 신병처리 검토 등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li> </ul>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재외국민 등 직·간접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부패대응 공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여론조사, 세미나, 관련 학회 참석,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li> <li>- 관련 연구용역 실시, 해외 법제 연구 병행</li> </ul>
④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성과목표 II-2)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관련 학회 참석, 공청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li> </ul>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근무 기간 종료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의견 수렴 예정 (국가기관법률사무종사)</li> <li>-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법조윤리)</li> <li>- 마을변호사와 현장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진행한 주민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이용자 의견 수렴</li> </ul>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공증실무협의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하여 공증실무계, 법원, 학계 의견 수렴</li> </ul>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UNCITRAL 등 국제회의에서의 우리 입장 수립</li> <li>- 개도국 공무원 등 교육/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li> </ul>
	국제 투자분쟁 (ISDS)대응 및 예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교육시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건의사항 등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의견 수렴하여 향후 교육 및 제도개선에 반영</li> </ul>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 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환수가능 사례, 정책 시행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li> <li>- 소송수행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각 소관 부처에서 발생한 국고손실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유사 사건 재발 예방</li> <li>- 학계와의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법리개발 및 이론적 기반 구축</li> </ul>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및 소송수행자들과의 간담회, 송무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등을 통해 소송수행자들의 송무 업무 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수렴 및 업무에 반영</li> <li>- 소송수행자들의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 법률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자문 만족도 조사 실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번호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장의견 적극 수렴 후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정부부처, 민·관 연구기관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법제 등 정비방안 모색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가채점회의, 채점위원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수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합격인원 결정
⑤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III-1)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전자감독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성폭력범죄 예방 효율화 방안 모색 - 정책현장에서 집행 효율화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들의 제도개선 의견 및 건의 사항 수렴(수시) -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 및 간담회, 기관 현장 점검,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 정책 수립 및 지침 시행 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국민 여론, 언론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 -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추진 - 웹사이트 게시판, 홍보물 포스팅 댓글 등을 통해 홍보 만족도 등 국민의 의견 수렴 - 정책현장 방문 등으로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해 정책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정책수요자: 교육수료자 만족도 조사 및 교육의회 기관 의견·반응 분석 - 정책공급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의견 수렴 및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 정책수립·시행 시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해 정책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li> <li>- 정책수요자 : 교육과정선호도 조사, 소년원생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li> <li>- 정책공급자 : 실무담당자별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수용실태점검 등 정책 현장점검 지속 실시</li> <li>- 정책이해자·관계자 :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회의, 유관기관 및 학술 세미나 등 참여</li> <li>- 정책수립·시행 시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도출된 실무자 의견을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li> <li>-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 체계 구축</li> </ul>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피치료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의료인력 확보 및 치료환경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li> <li>- 정책수요자 :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 치료·재활의 효과성 제고</li> <li>- 진정·청원 및 각종 민원을 통해 피치료감호자 개선사항 직접 수렴</li> <li>- 피치료감호자에게 정기적인 수용생활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인권적 처우를 제공하는 등 치료감호 내실화 실천</li> <li>- 정책공급자 : 치료감호 현장 수시 방문, 피치료감호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 청취</li> <li>- 필요 예산 및 인력 확보 위해 적극 노력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재발 및 재범방지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li> <li>- 정책이해자·관계자 :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li> <li>-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파악하여 단기, 중기, 장기해결 과제로 구분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공급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li> <li>- 정책수요자 : 보호관찰 처우 프로그램 참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의견 청취 등</li> <li>- 정책이해자·관계자 : 보호관찰관 직무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관찰 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수렴</li> </ul>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와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직접 소통으로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li> <li>- 법무보호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의견 청취</li> <li>- 보호관찰·교정·공단 3자 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업 체계 운영을 통해 대상자 연계 활성화 추진</li> <li>- 관계부처 및 도시공학·범죄심리·건축 등 각종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설치</li> </ul>
⑥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성과목표 III-2)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있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li> </ul>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홍보 콘텐츠 연중 게시 및 반응 모니터링</li> <li>- 해당 소셜네트워크 댓글 의견수렴</li> <li>- 교정본부 홈페이지 등의 질의 사항, 의견 제안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 실시</li> <li>- 정책현장 점검 및 자문위원회 등 의견 적극 수렴</li> </ul>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교정청별 일선 교정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li> <li>- 시스템 품질 개선 및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li> <li>-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보완 등 적극 활용</li> </ul>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업무담당자와 정기 회의 개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관리 관련 연구T/F 구성 등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적극적 피드백 실시</li> <li>- 재범고위험군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교정기관 직업훈련과장 간담회 개최</li> <li>- 현장 업무담당자 소통을 위한 직종별 담당자 실무 간담회</li> <li>- 직업훈련 수형자 대상 만족도 조사</li> </ul>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교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참여 수형자 의견수렴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추진</li> <li>-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li> <li>- 외부강사 등 전문인력과의 교류를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및 노하우 공유 추진</li> </ul>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과장 간담회 및 감염병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한 소통 강화</li> <li>- 의약품 업무 관련 교정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속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li> </ul>
	성폭력·중독 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li> <li>-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기관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 시 반영</li> </ul>
⑦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성과목표 IV-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행정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및 승객·승무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국민제안, 개선 의견 등을 적극 반영</li> <li>-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항공사 등), 운수업자(항공사, 선사) 등 관계기관과 주요 정책현안(전자여행허가제, 출국대기실 운영 등) 관련 정기 및 수시 소통 기획 마련</li> <li>- 출입국심사기법 발표회, 정책현장 방문, 행정제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내부직원의 우수지식·노하우 및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및 구성원의 직무몰입을 유도</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li> <li>- 동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li> <li>-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의 적극적 수용</li> </ul>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보호 규칙 및 세칙 개정</li> <li>-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 개최</li> <li>- 전국 조사·사범·보호과장회의 개최</li> </ul>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정보연계 담당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li> <li>-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무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재외공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적극 반영</li> <li>- 외국인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의 수요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자료의 품질 제고</li> <li>-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통한 정책 수요자들의 대민 시스템 및 등록증 서식 개선 의견 청취</li> </ul>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매체 활용도 및 만족도, 정책 인지도, 희망 홍보 매체 등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정책 개선의견 적극 수렴</li> <li>- 출입국 현장투어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참여자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li> <li>- 본부 소식지(공존) 독자이벤트를 통해 정책고객의 관심도를 개선하고 양방향 소통의 기회 확대</li> </ul>

성과목표	관리과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⑧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성과목표 IV-2)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정책 관련 포럼 개최</li> <li>-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하여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공유, 이해증진 및 협업과제 발굴</li> <li>- 간담회, 공청회 개최 및 참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노력</li> </ul>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할린동포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li> <li>- 우수인재 유치 위한 이공계 특성화기관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li> <li>- 가족관계등록관서 대상 국적실무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국적관련 업무미숙 사전 방지 및 현장 의견 수렴</li> </ul>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한외국인, 이민자 지원단체, 국민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li> <li>- 사회통합교육 담당직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li> <li>-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하여 의견청취</li> <li>- 사회통합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견 청취, 교육운영과정에 반영 검토</li> <li>- 재한외국인 고충처리, 사회통합교육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각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li> <li>-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개발 과정에 반영</li> </ul>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현장 방문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난민신청 접수·심사 과정상 문제점 및 고충사항 관련 의견 수렴</li> <li>- 국제기구 주최 회의참석, 난민관련 단체·연구기관 주최 학술포럼·세미나 참석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난민심사, 처우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li> <li>- 각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및 결과 공유</li> </ul>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난민기구 및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난민 이의심사 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li> <li>- 민간 난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재정비하여 이의신청 심의 안건에 관한 자문 청취 활성화 및 심사에 활용하는 국가정황정보에 대한 검증 강화</li> <li>-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1차 난민심사 및 소송 담당자와 국가정황 관련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매뉴얼 작성에 반영</li> <li>- 연구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학술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난민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li> <li>- 현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이의신청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li> </ul>



# 별첨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0)	0 (0)	2 (50%)	2 (50%)	2 (50%)
성과목표	8	13	0 (0)	0 (0)	9 (69%)	4 (31%)	9 (69%)
관리과제	48	89	0 (0%)	3 (3%)	73 (82%)	13 (15%)	78 (88%)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 인권위 권고 건수 / 법무부 수용 건수 ※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 집계	93	정량	산출	
2.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의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상 검찰 신뢰도(4점 만점) × 25	67.5	정성	결과	
3.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보호관찰 재범률(%)	○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 /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6.5	정량	산출	
4.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체류민원 만족도(점수)	○ 전자민원 및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 / 참여자 수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매우 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40), 매우 불만족 1(20))	87.8	정성	결과	

###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전략목표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b>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인권교육 만족도(점수)	○ 인권감수성교육 종료 후 조사한 개인별 교육 만족도 점수의 합 / 교육자 총수	85	정성	산출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명)	○ 당해연도 법률상담 + 민·가사등법률구조(단, 본안사건 승소율 적용) + 형사법률구조	1,476,334	정량	산출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 개선 실적(점수)	○ (제도개선건수(건당 1점) + 법률안 및 정책 의견제시 건수 (건당 0.5점) + 법령 제·개정 건수(건당 2점))	30.5	정량	산출	
<b>전략목표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b>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공통)	○ (구공판 건수 / 전체 처분 건수) × 100	13	정량	산출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공통)	○ (자유형 집행인원/ 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 건수/ 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80.12	정량	결과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전자공증 완료건수 × 0.1	30.4	정량	산출	
	법률 ODA 프로그램 품질평가	○ 연구 및 연수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평가	75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전략목표 III 범죤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b>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죤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공통)	○ [안정적 사회정착 인원(누계) / 소년원 출원 (9·10호)인원(누계)] × 100	88.37	정량	결과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자수/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대상자 실시인원 × 100	10.3	정량	산출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일일평균 교정시설 수용률(%)(공통)	○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정원×100	104.3	정량	산출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 × 100	75.5	정성	결과	
<b>전략목표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b>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K-ETA 신청자 대비 자동심사 건수 비율	○ (자동심사건수/K-ETA 신청자 수) × 100	73.5	정량	산출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도 합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체 응답 중 '매우 만족 + 만족'의 비율의 합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가중치 기준) 교육참여자수를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70%), 조기적응프로그램(20%),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10%) 각 가중치 부여	91.2	정성	산출	

####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전략목표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b>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활동(점수)	○ 활동실적×가중치 - (시민사회간담회) 횟수 x 4 - (인권모니터링) 횟수 x 4 - (인권정책의견제시) 횟수 = (부내정책의견제시) 횟수 x 2 + (법률안의견제시) 횟수 x 2 +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횟수 x 2 - (국제인권관련 회의 참석) 횟수 x 3 - (카드뉴스 발간물 등 발간) 건 x 3	228	정량	산출	
	②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실태조사 활동 실적(점수)	○ (정기실태조사 기관수×7) + (주제별 집중실태조사기관수×21) + (개선조치 요구 건수×4) + (설문조사인원×0.2) + (면담인원×1) + (보고서작성×2) +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보고서 작성×10)	1328	정량	산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건수	2595	정량	산출	
③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	○ 법령안 제·개정검토 및 제출·공포·시행(건수), 학술대회·세미나 참가 및 개최(건수), 공청회 참가 및 개최(건수), 연구 용역 발주(건수), 책자발간(건수), 보도 자료 배포(건수) 등 합산	48	정량	산출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점수)	○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5점 척도	90.8	정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자영업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장애인, 플랫폼 종사자 등) 법률지원 건수의 총합	15,386	정량	산출		
	법률흡닥터 만족도 (점수)	○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 조사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	88.0	정성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부정~매우긍정 5점 척도				
	②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명)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 측정	510	정량	산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형사사법절차 지원실적(건)(공통)	○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합산	43,669	정량	산출	
<b>전략목표 II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 법치행정을 실현한다</b>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확립한다	①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검찰청 직제 개정안 행안부 협의(30점) ○ 검찰청 직제 개정안 행안부 제출(40점) ○ 개정안 입법예고(10점)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점) ○ 개정안 시행(10점)	100	정량	과정	
	②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 주가조작 단속실적 1명당 0.040점 부여 ○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편취행위 단속 1건당 0.33점 부여 ○ 조세포탈 범죄 단속실적 1명당 0.063점 부여 ○ 전세사기 단속실적 1명당 0.114점 부여 ○ 보이스포싱범죄 합수단 및 각 검찰청 단속실적 1명당 0.057점 부여 ○ 유관기관 회의 개최횟수 1회당 1.5점 부여	88.9	정량	산출	
	③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사범 단속 및 치료재활 실적	○ 마약사범 325.0명당 1점 부여 * 총 인원 81,255명÷5⇒16,251명에 50점 부과하여 환산하면 325.0명당 1점 ○ 치료재활 인원 22.5명당 1점 부여 * 총 인원 5,620명÷5⇒1,124명에 50점 부과하여 환산하면 22.5명당 1점	135	정량	산출	
	④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수사준칙 개정 초안 행안부 협의(30점) ○ 수사준칙 입법예고(30점) ○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40점)	100	정량	과정	
	⑤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응	○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포럼, 세미나,	2,906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협의회 등 개최, 횡수, 매뉴얼 발간(×10점)</li> <li>○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대책회의 개최(횡수×5점)</li> <li>○ 전담검사 및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횡수×교육시간×참여인원×1점)</li> <li>○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수강(횡수×수강인원×0.5점)</li> <li>○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 (횡수×0.5점)</li> </ul>				
	⑥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집단불법행위 엄정대응(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인원 (명수) x 10</li> <li>○ 집단불법행위 엄정대응 홍보 횡수 x 5</li> <li>○ 유관기관 간담회 횡수 x 5</li> </ul>	100	정량	산출	
	⑦국제형사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국제형사공조 실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건수/요청건수×100+이행건수/접수건수×100)/2</li> <li>※ 측정산식은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건수 합계임</li> </ul>	99.5	정량	산출	
		범죄수익 환수역량강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환수 및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50점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 1회(×10점)</li> <li>- 국제 실무협의 등 1회(×5점)</li> </ul> </li> <li>○ 법무연수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1회(×10점)</li> </ul> </li> <li>○ 법률안 제정, 개정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5점)</li> <li>- 법령 국회 제출(×4점)</li> <li>- 법령 발의(×4점)</li> <li>- 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3점)</li> </ul> </li> <li>※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안 추진 중</li> <li>○ 범죄수익환수관련 커뮤니티(TF), 세미나 등 활동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동호회 등 활동 1회(×6점)</li> <li>-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등 1회(×6점)</li> <li>- 그 외 선진범죄수익환수기법 해외연수 등 범죄수익환수역량강화 관련 활동 1회(×6점)</li> </ul> </li> <li>※ 측정산식은 각 점수 합계임</li> </ul>	106.0	정량	산출	
	⑧부패대응 공백 방지	부패대응 공백 방지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별로 추진항목 마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산정</li> <li>○ 추진항목(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여론조사 세미나 등</li> </ul> </li> </ul>	63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견 수렴(각 10점)</li> <li>-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 분석·연구(각 10점)</li> <li>- 유관기관 등 협의(각 10점)</li> <li>- 법령 제·개정안 검토·미련 (각 10점)</li> <li>- 법령 제·개정 입안보고·입법예고·제출·공포·시행(각 10점)</li> <li>- 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각 5점)</li> <li>- 국회 논의 지원·대응(각 10점)</li> <li>-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각 8점)</li> </ul>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 시스템을 운영한다	①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민법 개정 및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실적×가중치</li> <li>- 민법개정위원회 출범(20점)</li> <li>-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1회×10점)</li> <li>- 민법개정위원회 분과회의(1회×5점)</li> <li>-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1건×10점)</li> <li>- 공청회(1건×20점)</li> <li>- 입안보고(15점)</li> <li>- 입법예고(15점)</li> <li>- 전문가 의견수렴 (1건×5점)</li> <li>- 유관기관과의 협의 (1건×10점)</li> <li>- 법제처 심사(20점)</li> <li>- 차관회의(15점)</li> <li>- 국무회의(15점)</li> <li>- 국회 제출(15점)</li> <li>- 국회 설명(1건×10점)</li> <li>- 언론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1건×15점)</li> <li>- 대국민 홍보(1건×20점)</li> <li>※ 홍보방법:홍보 자료·홍보영상 제작, 언론 인터뷰 등</li> </ul>	200	정량	과정	
	②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li> <li>- 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1회×10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공고(기관별×10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서류전형 (지원자 1인×0.5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면접(면접자 1인×1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최종 선발(선발인원 1인×1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관련 예산 대응(1회×10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세미나(1회×10점)</li> <li>-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재판참관 프로그램(1회×10점)</li> <li>- 기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li> </ul>	1,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업무 지원(1회×10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대상 의견 조회(1회×10점) - 법률사무증사 제도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참석(1회×10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등	○ 변호사징계 관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건수(1회×30점)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건수(심의 1회×10점) - 변호사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승소시 1회 × 10점, 패소시 1회× 5점) - 변호사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급별 건수(기각결정시 1회× 5점, 인용결정시 1회×2.5점) - 등록취소명령 건수(1회×3점) - 변호사징계관련 자문 건수(1회×5점) - 징계심의조서 작성건수(1회×15점) - 징계심의결과 통지건수(1회×10점) - 징계위원 위촉 건수(1회×10점)	740	정량	산출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 창구 운영 사업 참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 개수 x 100점 -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 (전화상담 건당 0.5점, 현장 상담 또는 화상상담 건당 1점) - 홍보물 제작 건수 x50점 - 홍보물 게시·업로드 건수 x50점 - 마을변호사 관련 제도관리 대상인원 (마을변호사, 담당 공무원, 서포터즈 포함) x 0.5점	3,225	정량	산출	
	③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 총괄 사업자 선정 30점 - 개별 사업 시작 30점 - 자문회의, 사업자 교육 등 사업 진행·관리 횟수 x 10점 - 관련 자문 건수 x 10점 - 사업 완수시 100점 - 온라인 공정증서 작성 건수 x 0.5점	250	정량	산출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	○ 공증 관련 법령 개정 - 입안보고 (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 입법예고 (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 관계기관 협의(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 법제처 심사(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3,64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 심의(제·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법률안 국회제출(제·개정 조문 1개당 4점)</li> <li>- 국회심의 중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1회×20점</li> <li>- 법률안 국회통과(제·개정 조문 1개당 10점)</li> <li>- 하위법령 공포(제·개정 조문 1개당 5점)</li> <li>- 각종 지침 제·개정(조문 1개당 5점)</li> <li>○ 공증제도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건수×20점</li> <li>- 공증실무협의회 회의 건수×20점</li> <li>- 제도개선 의견수렴 건수×10점</li> <li>-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참여 건수×20점</li> <li>- 간담회, 세미나 참석 건수×20점</li> </ul> </li> <li>○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고시1개 법인당 1점)</li> <li>○ 공증제도 관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법령 유권해석 건수×10점</li> <li>- 공증연구용역 건수×30점</li> <li>- 공증자문 실시 건수×10점</li> <li>- 공증 감사 후 계도 공문 실시 건수×10점</li> <li>- 공증인·보조자, 재외공관 공증담당자 교육 건수×20점</li> </ul> </li> <li>○ 공증 홍보 건수×20점</li> <li>○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프데스크 질의 응답 건수×0.1점</li> <li>- 전자공증이용건수×0.5점</li> <li>-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0.05점</li> <li>- 시스템 기능개선 건수×50점</li> </ul> </li> <li>○ 재외공관 공증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건수×10점</li> <li>-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횟수×10점</li> <li>- 검열결과 통보 및 의견 제시 건수×10점</li> </ul> </li> </ul>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증서류 검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조치된 임명·인가 공증인, 공증 담당번호사 1인×2점</li> <li>-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 점검·자체점검표 횟수 ×10점</li> <li>-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li> </ul> </li> </ul>	793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건수×30점 - 공증인징계위원회 심의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후 계도 공문 실시 건수×10점 - 공증인 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승소시 1회× 10점, 패소시 1회×5점) - 공증인 징계 관련 집행 정지 심급별 건수 (기각시 1회× 5점, 인용시 1회×2.5점)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 도입 및 법률 ODA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 도입	<UNCITRAL 등 국제회의의 관련> ○ 사전 검토 및 의견수렴(5점) ○ 국제회의 참석(5점) ○ 국제거래규범 세미나 개최(10점) ○ 국제거래규범 세미나 참석(5점) ○ 국제협약 등 가입필요성 검토(5점) ○ 국제기구에 국내 판례 등재(10점) ○ 국제협약 가입(20점) <싱가포르조정협약> ○ 협약 등 국문본 발간(10점) ○ 이행법률 TF 개최(10점) ○ 이행법률 연구반 개최(5점) ○ 관계기관 협의(5점) ○ 조정 관련 규범 제정 및 개정(10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 아동반환 지원 실적 - 지원 건 수×5점, 우호적 해결 사건은 해결 건수 ×7점 - 아동 반환시 반환된 아동 수×5점 가산 ○ 해외 중앙당국 간담회(10점) ○ 제도 개선 홍보 노력(세미나 발표, 공청회 등)(10점) ○ 관계부처(법원, 경찰) 협의(5점) ○ 이행법률 개정 관련 - 개정안 입안(10점) - 국회 제출(20점) - 하위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20점) ○ 국제기구에 국내 판례 등재(5점) ○ 전문변호사 양성 관련 - 변호사 목록 업데이트(10점) - 교육 프로그램 개발(20점) <공통> ○ 자료발간, 연구실적(각 10점)	395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 법률자문 제공, 보도자료 등 홍보 실적(각 5점)				
		법률 ODA	○ 개도국 공무원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30점) ○ 개도국 만족도 평가 실시(10점) ○ 관계부처 회의·간담회 등 참여(5점) ○ 수원국 법제 개선 실적(30점) ○ 연구실적(10점) ○ 자료발간(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 실적(5점)	140	정량	산출	
	⑤국제 투자 분쟁(ISDS) 대응 및 예방강화	국제 투자분쟁대응	○ 국제투자분쟁대응단회의 및 관계부처 개최(각 10점) ○ 기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실적(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세미나 개최 건 (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각 5점)	485	정량	산출	
		국제 투자분쟁예방	○ 국제투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각 20점) ○ 홍보 건수 (각 5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지수) ▷ 매우만족 30 ▷ 만족 20 ▷ 보통 10 ▷ 불만족 5 ▷ 매우 불만족 0	240	정량	산출	
		ISDS 제도개선	○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석 (각 20점) ○ 제도개선 관련 검토의견 및 의견서 제출 (각 20점)	160	정량	산출	
		투자협정(FTA,BIT) 및 기타 국제분쟁법률 지원	○ 투자협정(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 (각 10점)	130	정량	산출	
	⑥부패·비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국고손실 환수 실적	○ 소 제기 및 지급명령신청 건수(건 당 20점) ○ 심급별 승소 금액(천만 원 당 1점, 최종심의 경우 환수 완료 금액) ○ 주요 소송행위 승인 건수(건 당 15점) ○ 법률자문·지원(회 당 10점)	798	정량	산출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	○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부패·비리행위 관련 정보보고, 공정위의결서,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건당 10점)	23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간담회 개최 및 참석(회당 10점)</li> <li>○ 송무지도점검(회당 5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소송 관련 언론보도 등 홍보(건당 20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개정 및 배포 (회당 25점)</li> <li>○ 국고손실 환수송무 교육 실시(회당 10점)</li> <li>○ 소제기 및 소송수행 관련 유관기관과 유선, 이메일 등에 의한 협의(회당 5점)</li> <li>○ 연구용역 및 자문 의뢰(회당 5점)</li> </ul>				
	⑦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제도 개선 (최대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규칙 등 제·개정 건당 30점</li> <li>- 제도 개선 건당 20점</li> </ul> </li> <li>○ 행정소송 송무 역량 강화(최대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무지도점검(소송수행자 현안 간담회 포함) 각 3점</li> <li>- 송무교육 각 2점</li> <li>- 송무교육(반복 수강 가능한 강의 촬영) 각 10점</li> <li>- 최신 판례 연구 등 세미나 개최 각 5점</li> <li>- 소송총괄관회의 각 10점</li> </ul> </li> <li>○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운영 (최대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송무자문위원회 자문 사건 당 20점</li> </ul> </li> </ul>	180	정량	산출	
	⑧중소·벤처 기업 법률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 건수(건 당 1점)</li> <li>○ 팸플릿 배포, 인터넷 광고 등 대국민 홍보(건 당 5점)</li> </ul>	90	정량	산출	
	⑨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등 교육 운영실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를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li> <li>-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족이상 90%(100점)</li> <li>▷만족이상 80%(90점)</li> <li>▷만족이상 70%(80점)</li> <li>▷만족이상 70%미만(60점)</li> </ul> </li> <li>-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li> <li>- 기타 통일법무 교육(D) (1회 10점)</li> </ul> </li> </ul>	396	정량	산출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를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 등 회의 점수(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대회 개최(1회 10점)</li> <li>▷ 연구회의 개최(1회 5점)</li> </ul> </li> </ul> </li> </ul>	565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1회 5점)</li> <li>▷ 토론(1회 2점)</li> <li>▷ 회의 참석(1회 1점)</li> <li>※ 개최·참석·발표·토론이 중복 되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계산</li> <li>- 법령 개정 점수(B)</li> <li>▷ 법률 개정(1건 10점)</li> <li>▷ 대통령령 개정(1건 5점)</li> <li>▷ 부령 개정(1건 3점)</li> <li>※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회의 등 점수 준용</li> <li>- 자료집 점수(C)(1건 10점, 200쪽 이상 20점, 등재지 30점,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학술지 게재 1건 5점, 논문 공모전 점수 1건 2점)</li> <li>-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li> <li>▷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li> <li>▷ 위원회 활동(1회 5점)</li> <li>- 연구용역 점수(E)(1건 10점)</li> </ul>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등 실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를 합산</li> <li>- 법률교육 점수(A)(1회 7점)</li> <li>-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li> <li>▷ 만족이상 90%(30점)</li> <li>▷ 만족이상 80%(25점)</li> <li>▷ 만족이상 70%(20점)</li> <li>▷ 만족이상 70% 미만(15점)</li> <li>-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교재 제작 점수(C)(1건 20점)</li> <li>-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1건 2점)</li> </ul>	127	정량	산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와 B를 합산</li> <li>-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점수(A)(1건 3점)</li> <li>- 소송구조 연계 점수(B)(1건 6점)</li> </ul>	1,018	정량	산출	
	⑩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문제 이외제기 신청률 10% 이하 달성</li> <li>- (점수) = 25점 + (10-신청률) × 1점</li> <li>※(신청률)=이외제기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li> <li>○ 시험관리위원회 개최(건수×20점)</li> <li>○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개정(건수×50점)</li> <li>○ 제도개선 실적</li> <li>- 변호사시험 CBT 도입 추진</li> <li>· CBT 관련 계획 수립(건수×5점)</li> <li>· 현장점검·모니터링 (건수×5점)</li> <li>· CBT 프로그램 개발(5점)</li> </ul>	765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T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 테스트(건수×5점)</li> <li>· 학생·교수 등 대상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 수렴 (건수×5점)</li> <li>·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의 건의 사항 반영 (건수×5점)</li> <li>· 예산 신규 증액 등 확보(건수×5점)</li> <li>- 기타 제도개선 시행(건수×30점)</li> <li>○ 제도 연구·용역 등(건수×20점)</li> <li>○ 해외자료 연구 및 자료 수집 실적(건수×20점)</li> <li>○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공청회·토론회·내부회의 참석 및 개최(건수×20점)</li> <li>○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 방법 회의(건수×20점)</li> <li>○ 시험문제은행구축(건수×20점)</li> <li>○ 장애인 편의제공(명수×10점)</li> <li>○ 장애인시험위원회 개최(건수×10점)</li> <li>○ 시험관련 민원검토(건수×5점)</li> <li>○ 보도자료 등 홍보(건수×20점)</li> </ul>				
		변호사시험복수정답 인정률 2%이하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li> <li>- (점수) = 100점 + (2-인정률) × 10점</li> <li>※(복수정답인정률) = 복수정답 인정 문항수 / 총 문항수 × 100%</li> </ul>	115	정량	산출	
<b>전략목표 III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한다</b>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	○ 연중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건수/ 특정범죄 전자감독 실시건수	1.37	정량	산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 (6일 이내 등록건수/ 신규*등록건수)×100 * 직권등록사건 제외	97.4	정량	산출	
	②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정책홍보활성도( 점수)	○ 보도·설명자료, 기고, 인터뷰 등 배포(건당 1점) ○ 범죄예방정책국 홍보 웹진 발간(건당 10점) ○ 홍보기획 영상물 제작 (건당 5점) ○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 제작 (건당 3점) ○ 정책홍보행사 기획 등 (건당 10점)	180	정량	산출	
		온라인홍보실적( 점수)	○ 유튜브 구독자 수(명당 1점) ○ 홍보영상(유튜브 등) '좋아요' 건수 (건당 1점) ○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일반)	2,13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건당 1점) ○ 홍보물 온라인 포스팅(기획) (건당 5점)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비행예방교육평가 점수(점)	○ 교육수료자 교육평가 점수의 합 / 교육평가 참여 인원	91.4	정량	산출	
		비행예방 전문교육 과정 운영 횟수	○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 실적	72	정량	산출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달성도 (건)	○ 연간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이수자 교육실적 (검정고시 합격, 자격취득, 경시대회 입상, 진학, 학적회복, 전·편입학, 졸업장취득) /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수료자	4.35	정량	산출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율(%)	○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수료율 {(당해년도 수료인원/ 당해년도 실시인원)} × 100 *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대상자	82.1	정량	산출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당해연도 고위험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연도 고위험대상자 실시인원 × 100 ※ 고위험대상자 :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유괴, 마약, 보복 등 7개 사범 및 가중료·가출소,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 형집행정료 후 보호관찰, 치료명령	5.3	정량	산출	
	⑦ 법무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수혜자 사회복귀율	○ 주요 갱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복귀율에 대한 환산 점수 ※(일자리확보율×0.375)+(안정적 주거확보율×0.325)+(자립성공율 ×0.300)	63	정량	산출	
(2) 다양한	① 수용자 인권보호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 수용환경 개선 점수 합산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139.9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개선실적(점수)	교정시설 신·증축, 개보수 기관수×2점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생활 환경개선 기관수×2점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 해소 노력 실적(점수)	○협업관련 점수 합산 - 갈등민원해소(50점) - 관계기관 협의(5점) - 고충민원 관련 협의 또는 현장방문(1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10점) - 수용기관 현장점검(2점)	127.6	정량	산출	
	②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정책홍보활성도 (점수)	○보도·설명자료 배포(건당 1점) ○월간 「교정」 발간(건당 10점) ○홍보기획영상 제작(건당 5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건당 5점) ○홍보행사 참석(건당 10점)	1,880	정량	산출	
		온라인 홍보 실적 (점수)	○유튜브 구독자수*4 ○페이스북 팔로워수*2 ○카카오토티 구독자수*2 ○카카오친구 친구수*2	110,723	정량	산출	
	③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총 응답자수) ×100%	90	정량	결과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	○수용 및 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수	9,100	정량	결과	
	④재범고위험 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분류센터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개별처우 계획 수립 실적	○분류센터 신입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 실적 - 집금이송이 곤란한 수형자를 방문하여 수립한 실적 포함	1,477	정량	산출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가석방 심층면접 실적	○ '23년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인원 - (재범고위험군) 무기·장기수형자, 살인 등 강력범 및 심리상태·출소 후 환경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500	정량	산출	
	⑤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정역집행률(교도 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공통)	○ (당해연도 정역이행자 수/ 당해연도 정역집행 적격자 수) × 100	93.5	정량	결과	
		직업훈련수형자 만족도 (점수)	○ (만족 이상 답변인원 / 총 응답자수) × 100	77.4	정성	결과	
	⑥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명)	○ 집중인성교육이수인원 (기본교육+재교육 합산)	6,676	정량	결과	
		사회적처우 실적(점수)	○ (귀휴 실시 수형자 인원 × 2점) + (가족접견 실시 수용자	4,020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인원 X 1점)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 소년수형자 초·중·고 검정고시 응시 인원 대비 합격 인원	81.6	정량	결과	
	⑦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 (진료실적 증감률/ 수용인원 증감률) × 100 * (진료실적) = 원격의료건수 + 외부의료시설 건수 + 정신과진료 건수	121	정량	산출	
		건강검진 실시율(%)	○ (당해연도 건강검진 인원/ 당해연도 일평균 수용인원) × 100	77	정량	산출	
		향정신성의약품 교부허가 감소율(%)	○ (당해연도 향정신성의약품 차입건수/ 당해연도 일평균 수용인원) × 100	51	정량	산출	
	⑧성폭력·중독 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및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횟수×5점)+ 프로그램 시범 운영 (건수×10점)+ 전문인력 (중독 제외)양성(당해연도 전문인력/ 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	335	정량	산출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점수)	○ 전담기구 신설(팀 신설15점, 과 신설 20점)+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대책 회의 개최 및 참석(횟수×5점)+중독재활 관련 정책 홍보(횟수×1점)+중독관련 전문가 양성 인원(당해연도 전문인력/전년도 전문인력 인원×100)	155	정량	산출	
<b>전략목표 IV 국가경쟁력 도약의 기초가 되는 수준 높은 외국인정책을 추진한다</b>							
(1) 미래 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출입국심사 이용객 만족도(점수)	○ (설문항목별 평가점수 합계/참여자 수)  ※국제공항 및 외항선 운항항만을 이용하는 승객/승무원의 평가지표에 대한 만족도 설문 (7점 척도) 조사	94.3	정성	결과	
		제도개선 실적(점수)	○ 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사항 (건당 20점) ○ 국민신문고, 탄원, 청원, 국민제안 채택 실적(건당 20점) ○ 국민의견 수렴 건수(건당 20점) ○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건당 5점) ○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건당 5점)	55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이용자 만족도(점수)	○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 제·개정 건수	80	정량	산출	
			○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참여자 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82.8	정성	결과	
③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불법체류외국인 출국 조치 실적(명)	개선된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점수)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실적(명) + 자진출국지수	58,400	정량	산출	
			○ (화성보호소 만족도 X 80%) + (울산사무소 만족도 X 20%)	90	정성	결과	
④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130	정성	산출	
			○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 실적건수	27	정량	산출	
⑤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정책홍보활성도		○ 외국 고위급 인사, 단체 등의 한국 방문 행사, 해외연수, 출장, 주한 공관원 접촉 시 홍보한 실적을 결과 보고서 사진, 명함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는 경우(1회 50점) ○ 출입국 현장투어(1회 15점) ○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1건당 30점) ○ 보도자료·인터뷰·기고(1건당 10점) ○ 리플릿·포스터·배너 제작(1건당 10점) ※ 홍보책자,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시 건당 기본 점수에 언어별 추가 50% 가점 ○ 뉴스레터 발송(1건당 5점) ○ 온라인 이벤트 실시 (1건당 30점) ○ 웹툰 등 외부작가 의뢰 제작 정책 홍보물 및 동영상 포스팅(1건당 10점) ○ 정책 포스터 등 홍보물 포스팅(1건당 5점) ○ 기획 홍보물 포스팅(1건당	48,386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0점) ○ SNS(페이스북, 유튜브) 일반 포스팅 (1건당 1점) ○ SNS Fan 수 증가 ○ 페이스북 팔로워 수: 2점 ○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점 ○ 유튜브 구독자 수: 4점 ※ 채널별 홍보 파급력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홍보만족도	○ 만족도 조사 특성상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약 0.5% 상향 조정 - 이는 3년 평균 실적치 90.4점보다 0.6점 높은 수치임	91.0	정성	결과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노력(건)	○ 법령 개정 - 법령 개정계획(안) 마련(건수) - 공포·시행(건수) - 관련 타법 제·개정에 대한 우리부 의견 제시(건수) ○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건수) - 전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건수) - 관계부처 담당자 또는 민간인 참석 위원회 개최 및 참석(건수) - 공청회, 간담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및 참여(건수) - 이민정책포럼 개최(건수) - 관계부처와 협업 결과 발표(건수) ○ 외국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건수)	59	정량	산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지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75	정성	산출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국민 정체성 함양(점수)	○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율(가중치 70%) -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자 중 행사형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비율로서 전년 실적(11.4%) 대비 20% 적극 상향한 13.6%를 목표치(점수환산 20점)로 설정 ※ 0~10% : 10점, 11~20% : 20점, 91~100% : 100점 ○ 국적취득예정자 통합시민교육 만족도(가중치 30%)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35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환산,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70점으로 목표치 설정 ※ 매우 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제도개선(점수)	○ 국적법 개정 (각50점) ○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각30점) ○ 훈령 등 제·개정(각20점) ○ 제도개선안 마련(건당10점) ○ 전문가회의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 실시 (각10점) ○ 시스템 개선(건당5점) ○ 국적 설명회, 강연 및 홍보(각10점) ○ 사할린동포 교육프로그램 제작, 귀화신청자의 국민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 등 (각10점) ○ 일반 책자·간행문 발간 등 (각5점) ○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예외적 이탈허가 건수 (1명당 5점) ○ 패스트트랙에 따른 거주(F2) 자격부여(1명당 1점)	534	정량	산출	
	③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지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53.7	정량	산출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점수)	○ 제도개선안 마련(각 10점) ○ 유관단체 간담회, 회의 등 의견수렴(각 5점) ○ 사회통합협의회 개최(각 3점) ○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각 3점)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발간(각 3점)	738	정량	산출	
	④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난민담당자 및 통역인 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 ※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	80	정성	산출	
		난민제도 정비(점수)	○ 법령 개정(50점) ○ 훈령 개정(20점) ○ 지침 개정(15점) ○ 국회의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설명(10점) ○ 법률안 소위 상정(10점) ○ 국회 대응 등(10점) ○ 제도 연구 및 개선 마련(10점) ○ 관련 책자 등 발간(15점)	257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3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시스템 개선(20점)</li> <li>○ 관계기관 간담회 등 개최(10점)</li> <li>○ 대국민홍보(20점)</li> <li>○ 국제회의 참석·파견 등</li> <li>※ 제도정비 활동별 실적 집계</li> </ul>				
	⑤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난민 이의신청 보고서 품질 향상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참여자수</li> <li>※ 10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다소미흡 40, 미흡 20)</li> </ul>	80	정성	산출	
		이의신청 심의체계 개선(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개정(각 20점)</li> <li>○ 훈령·예규개정(각 10점)</li> <li>○ 지침, 매뉴얼, 난민 용어 사전 등 제정 (각 30점)</li> <li>○ 지침, 매뉴얼, 난민 용어 사전 등 개정(각 5점)</li> <li>○ 업무 시스템 개선 (각 20점)</li> <li>○ 관계기관 업무 협력 체계 구축(각 15점)</li> <li>○ 연구용역실시(각 15점)</li> <li>○ 부처협의 등 의견조회 (각 5점)</li> <li>○ 제도개선안 마련(각 5점)</li> <li>○ 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워크숍 개최(각 5점)</li> <li>○ 대국민홍보(각 5점)</li> </ul>	96	정량	산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I.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업무5-4)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국정63-1)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국정63-3)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국정63-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국정64-3)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국정64-4)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업무1-3) ○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반법치행위 근절(업무3-1)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국정64-1)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국정64-2)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국정64-5)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국정63-1) ○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업무5-1)
II.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국정4-1) ○ 검찰 독립 예산편성(국정4-2)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국정63-5)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업무1-2)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국정4-3)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업무3-2)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국정63-1)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⑥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반법치행위 근절(업무3-1)
		⑦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⑧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국정4-4)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업무3-2)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업무4-1)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제도 구축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업무4-3)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국정99-2)
		⑤ 국제 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강화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반법치행위 근절(업무3-1)
		⑦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⑩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업무4-3)	
III.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국정63-3)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업무1-1)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업무1-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수용자 인권 개선(국정48-5)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업무5-3)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국정63-2)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업무5-3)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업무5-3)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업무1-2)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IV.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업무2-2) ○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업무5-2)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국정72-3)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업무2-3) ○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업무5-2)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업무2-3)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체계화(국정핵심과제29)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업무2-1)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체계화(국정핵심과제29)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업무2-1)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48-6)